

발 간 등 록 번 호

11-1543000-000044-10

www.mafra.go.kr

2018년 농림축산식품부 업무보고

2018. 3



농림축산식품부

CONTENTS

I. 2018년 정부업무보고	1
1. 행사개요	3
2. 발표자료	7
① 소득주도 성장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	9
② 국민안전(국민건강 확보)	37
3. 보도자료	59
① 소득주도 성장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	61
② 국민안전(국민건강 확보)	71
II. 2018년 업무계획	81
1. 2018년 주요 업무계획	83
2. 보도자료	159
[별첨]	
1. 2018년 농촌진흥청 업무계획	181
2. 2018년 산림청 업무계획	231

The background of the page is a light gray gradient. In the upper right and lower left areas, there are white dandelion seed heads and several individual seeds with long, thin stems, appearing to be blowing in the wind. A dark gray horizontal banner is positioned across the middle of the page, containing the title text.

I . 2018년 정부업무보고

1. 행사개요

2018년 정부업무보고 개요

- 일 시 : '18. 1. 18.(목) ~ 1. 29.(월)
- 장 소 : 세종컨벤션센터 또는 서울청사 별관
- 참석자 : 국무총리(주재), 보고부처 장·차관, 청와대, 총리실 등
- 목 표 : 문재인 정부 2년차, 국정과제 이행의 구체화·가시화를 위한
 각론적·방법론적 접근과 유관부처간 유기적 협조체제 구축으로
 국민의 삶이 변화하도록 유도
- 주안점
 - ① 평창올림픽 성공과 외교·안보상황 및 남북관계의 개선
 - ② 국민소득 3만불 시대가 요구하는 과제의 이행방안 공유 및 실행력 제고
 - ③ 국정의 성과 가시화를 통해 국민 삶의 실질적 변화 견인
 - ④ 정부혁신 노력에 대한 국민의 실감과 신뢰 확보
- 부처별 보고 일정

일자	주제	보고기관
1.18(목)	○ 소득주도 성장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	▲ 고용부 ▲ 중기부 ▲ 복지부 ▲ 농식품부 ▲ 해수부
1.19(금)	○ 외교·안보 상황과 남북관계 개선	▲ 외교부 ▲ 국방부 ▲ 통일부 ▲ 문체부 ▲ 보훈처
1.23(화)	○ 재난·재해 대응	▲ 행안부 ▲ 고용부 ▲ 국토부 ▲ 경찰·소방·해경청
	○ 국민건강 확보	▲ 복지부 ▲ 식약처 ▲ 농식품부 ▲ 해수부 ▲ 환경부
1.24(수)	○ 4차 산업혁명과 혁신성장	▲ 기재부 ▲ 과기정통부 ▲ 산업부 ▲ 국토부 ▲ 금융위 ▲ 국조실
1.25(목)	○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정착	▲ 법무부 ▲ 권익위 ▲ 경찰청 ▲ 공정위 ▲ 여가부 ▲ 인사처 ▲ 법제처
1.29(월)	○ 교육·문화 혁신	▲ 교육부 ▲ 문체부 ▲ 방통위

※ 주제별로 보고기관 외에 관련된 정부부처, 민간전문가 등 토론에 참여

2. 발표자료

소득주도 성장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

2018. 1. 18.

농업대변화 원년

일자리를 대폭 늘리고
소득안전망을 확충하겠습니다.

2018.1.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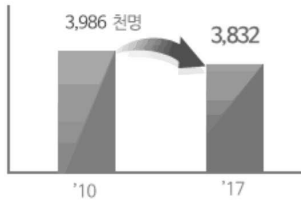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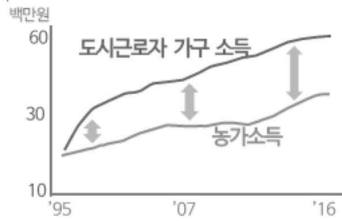
농식품부는 2018년을 농업 대변화의 원년으로 삼아,
일자리를 대폭 늘리고, 소득안전망을 확충하겠습니다.

농식품 부문 일자리와 농가소득의 현주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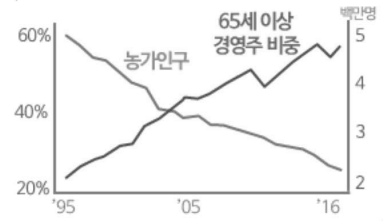
농식품 취업자수 정체



도농간 소득격차 확대



농가인구 감소·고령화



우리 농식품산업의 현주소는
 취업자수는 정체되고 있으며
 도농간 소득격차는 확대되고
 농가인구는 고령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희망과 기회

4차 산업혁명 기술혁신

- 농지규모보다
과학·영농기술이 경쟁력 좌우

도시를 떠나 농촌으로

- '16년 11만명 농촌 순유입
- 청년 귀농 1,340가구

3만불 시대 국민 삶의 변화

- 농촌 관광 11백만명 시대
- 반려동물 6조원 전망
- 말산업 4.2조원 전망

농식품 분야 새로운 일자리 창출 → 소득주도 성장 견인
농업혁신과 촘촘한 안전망 구축 → 농가소득 안정
3만불 시대에 걸맞은 농촌 구현 → 국민 삶의 질 향상

그러나, 희망과 기회가 있습니다.

4차산업 혁명시대는

농지규모보다 과학·영농 기술이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이며

청년을 포함하여 농촌 인구가 유입되고 있고

소득 3만불 시대를 맞아

우리 농업도 변화해야 합니다.

농식품 분야의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농가소득안전망을 확충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 농식품산업과 농산촌에서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 올해 일자리 3만 3천개, 22년까지 17만개 창출 ”

청년 창업	신수요 일자리	고부가 미래산업	산림 및 기타
청년창업농 1,800	반려동물 1,120	종자·농생명소재 140	공공일자리 15,000
스마트팜 860	말산업 1,000	곤충 280	산림복지전문업등 3,000
외식창업인큐베이팅 200	농촌융복합산업 730	가정간편식등 3,800	사회적경제등 1,000
		첨단기자재 76	

R&D 바우처, 농식품 벤처 펀드, 농신보 보증, 정책자금우대 금리 등 적극 지원

첫째, 농식품산업, 농산촌에서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청년 창업을 늘리고

새로운 수요와 미래산업, 산림분야 등에서

올해 3만 3천 여개,

2022년까지 17만개 일자리를 창출토록

모든 정책적 지원을 다하겠습니다.

청년 창업붐을 일으키겠습니다.

① **청년농업인 정착부터 성장까지 종합 지원하겠습니다.**

 | 일자리목표 | '18) 1,800명 → '22) 10,000명

역량있는 청년농업인 1,200명 선발(월 최대 100만원 지원)

자금

농신보 우대 보증
보증한도 (2억원 → 3)
보증비율 (90% → 95)



농지

농지은행 비축농지
최우선 임대 지원
(임대료 최대 80% 감면)



교육

경영실습농장(30개소)
농장당 3~5명이
최대 2년 이용



'22년까지 청년 경영주 비율 1.4% 이상으로 확대 (현 추세 시 0.5%)

우선 청년 창업붐을 일으키겠습니다.

올해 청년농업인 천 2백명을 선발,

생활안정에 쓸 수 있는 월 최대 100만원의 정착금을
지원하고,

자금과 농지, 교육을 종합 지원하겠습니다.

2022년까지 청년경영주 비율을 1.4%이상으로 올려
농업혁신을 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② 스마트팜 창업 생태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일자리목표 | '18) 860명 → '22) 4,820명

스마트 온실(누적) ('17) 4,000ha → ('18) 4,510 → ('22) 7,000

스마트 축사(누적) ('17) 750호 → ('18) 1,350 → ('22) 5,750

창업 '스마트팜 창업보육 센터'를 통해 창업농 양성
* 팀단위 공동교육·실습·창업, 재배 기술, 경영까지 단계적 교육·실습

성장 R&D 바우처 및 종합자금, 벤처펀드, 국내외 판로 개척 지원

재도전 경영회생자금 지원, 농지매입 후 재임대

창업보육·생산기반 통합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22년까지 4개소)

→ 빅데이터 분석, S/W, 기자재 등 연관산업까지 효과 파급



스마트팜 창업 생태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창업보육센터에서 청년들이 팀단위로
창업을 준비하도록 하고,

R&D바우처, 종합자금, 벤처펀드 지원으로
성장을 돕고

재도전의 기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창업보육부터 생산기반시설까지 통합된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2022년까지 4개소 조성하겠습니다.

3 다양한 식품·외식의 창업과 취업을 돕겠습니다.

일자리목표 | '18) 1,638명 → '22) 17,340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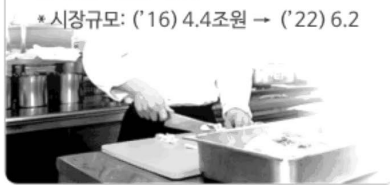
식품·외식창업 공간 제공

- 조리시설이 갖춰진 매장 무료임대
→ 메뉴개발부터 매장운영까지
실전경험(5개소)
- '창업지원 Lab' 확대 운영(16개팀)
→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시설·장비를
활용하여 시제품 제작 기회 제공



식품 가공산업 활성화

- 〈식육즉석판매가공업〉
* 정육점에서 햄, 소시지 등을 가공·판매
- 창업·업종 전환을 위한 경영컨설팅
(50개소), 소비자단체 인증(10개소)
- 시설·운영자금 지원(개소당 5억원)
- 〈쌀가공 산업〉
• 고품질 쌀 가루 생산 및 식품업체와
연계한 제품 개발
* 시장규모: ('16) 4.4조원 → ('22) 6.2



해외 인턴 파견

- 해외 진출 한식당·외식기업에
청년 취업 지원
- 농식품 청년 해외개척단 운영
- 유엔 식량농업기구 등 국제기구에
청년 인턴 파견



다양한 식품·외식 창업과 취업을 돕겠습니다.

창업 희망자가 실제로 경영 체험을 하고,
시제품을 제작할 수 있는 식품·외식 창업 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정육점에서 햄·소시지를 가공·판매하는
식육즉석가공업과 쌀가공 산업도 활성화하겠습니다.

청년들의 해외 취업을 지원하는 청년 해외개척단 파견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운영하겠습니다.

3만불 시대에 걸맞은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① 반려동물 관련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일자리목표 | '18) 1,120명 → '22) 18,050명

자격증 신설 · 공인

- 행동교정 분야 자격, 동물간호 복지사 신설
- 애견 미용 분야 민간 자격 국가 공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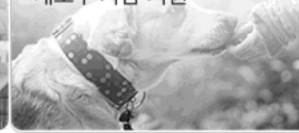
서비스업 체계화

- 소규모 애견 브리더(breeder), 고양이 캐터리(cattery) 등 소규모 생산자 허가
- 공공장묘 시설 설치(2개소)



펫사료 산업 육성

- 반려동물 유기사료 인증제 추진
- 고부가 기능성 사료 개발 R&D
- 품질 고급화를 위한 시설 개보수 자금 지원



반려동물 관련 산업법 제정 추진

- 동물 서비스업 육성
- 교육·훈련 등 전문인력 양성
- 창업 및 우수업체 지원근거 마련



반려동물 시장규모 ('17) 2.1조원 → ('22) 6조원

3만불 시대에 걸맞은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앞으로 6조원 규모로 성장이 예상되는 반려동물 관련 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동물간호복지사와 애견 미용, 행동교정 분야의 자격증을 신설하고,

공공장묘 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등 관련 서비스업을 체계화하겠습니다.

펫사료 산업의 육성을 위해 R&D를 지원하고, 유기사료 인증제를 도입하겠습니다.

반려동물 관련 산업법 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② 생활 속 승마문화를 확산시키겠습니다.

인력 | 일자리목표 | '18) 1,000명 → '22) 6,500명

기반조성

- 승마시설 개선(15개소)
- 농어촌형 승마길 확대 ('17:57km → '21:500)
- 말산업 특구 신규 지정(2개소)



저변확대

- 학생승마 체험 확대(7만명)
- 유소년 승마단 확대(24개소)
- 자유학년제를 활용한 학생승마체험 프로그램



인력양성

- 승마지도사 국가자격화
- 취업지원센터 운영 및 말산업 인턴십 지원
- 말산업 종사자 보수 교육



말 산업 시장규모 ('16) 3.4조원 → ('22) 4.2조원

생활 속 승마문화를 확산시키겠습니다.

전국에 승마시설과 농촌형 승마길을 확대하는 등
기반을 조성하고,

학생승마체험과 유소년 승마단을 활성화해서
저변을 확대하겠습니다.

체계적인 인력 양성을 위해
민간자격인 승마지도사를 국가자격화하고,
말산업 취업 지원센터를 운영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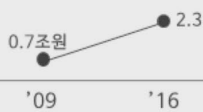
3 1인가구 증가 등 변화에 맞는 시장을 확대하겠습니다.

인자리목표 | '18) 3,800명 → '22) 24,130명

가정간편식(HMR)

- 신제품 개발, 품질관리 및 고급화 R&D 강화
- 식재료 사용과 연계한 원료구매 및 마케팅자금 지원
- 혼밥·급식시장 성장 빅데이터 분석 등 관련 정보 제공 강화

(가정간편식 시장 규모)



바이오·고령친화식품

- 과학적으로 효능이 검증된 식품에 대한 신고·표시제 도입 추진
- 식품첨가물·식품용 효소 등 바이오식품통합정보시스템 구축
- 발효식품 우량 종균 개발·보급
- 고령자 맞춤형 식품기술 개발 (경도, 영양 성분 등 표시)



푸드테크·포장재산업

- 식품산업과 ICT기술을 접목한 푸드테크 스타트업에 대한 자금·마케팅 등 지원
- 기존 식품소재를 대체하는 식품(식물성 고기 등) 및 스마트 포장기술 연구·개발



* (스마트포장 사례) 김치 발효과정에서 가스만 배출되고 액체투과는 방지하여 신선도 유지

1인가구 증가 등 변화에 맞는 식품시장을 확대하겠습니다.

가정간편식과 고령자 맞춤형 식품 개발을 위한 R&D를 확대하는 한편

발효식품 우량 종균을 개발·보급하고, 바이오식품 관련 통합정보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ICT 기술을 접목한 푸드테크, 식품포장재 등 부가가치가 높은 신산업 분야를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4 농촌자원을 활용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습니다.

인구 | 일자리목표 | '18) 815명 → '22) 7,384명

농촌관광 전문화 · 다양화

- 농촌관광 해설사 도입
- 청년층을 관광 전문인력으로 육성
- 중학교 자유학년제 및 초등학교 체험학습 연계 강화(55천명)
- 동식물 · 곤충 활용 치유 프로그램 개발(10개소)



융복합산업 육성

- 농촌융복합인증사업자 확대
* ('17) 1,397개소 → ('18) 1,500
-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확대
('17: 69개소 → '18: 74) 등 창업 보육 지원 강화
- 농촌융복합 산업지구를 지역 특화산업 거점으로 육성



지역 푸드플랜 확산

- 지역단위 농업생산-소비의 선순환 체계 구축
- 선도 지자체 선정 지원(8개소)
- 지역주민 참여 확대를 위해 민관 거버넌스 조직 육성

원주사례

지역내 1,500 중소농 참여, 12개 로컬푸드 매장에 신선한 농산물 공급, 지역일자리 창출



농촌자원을 활용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습니다.

농촌관광해설사를 도입하고, 학생 체험학습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등 농촌관광을 전문화·다양화하겠습니다.

농산물 종합가공센터와 인증사업자를 확대하여 융복합산업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원주로컬푸드와 같은 우수사례를 적극 발굴해서 지역푸드플랜을 확산하겠습니다.

5 산림을 활용한 특화된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인력 | 일자리목표 | '18) 18,899명 → '22) 60,178명

산림 특화 전문가 양성

- 산림치유, 유아 숲교육 등 산림복지 전문업 육성(350개)
- 나무의사 자격제도 시행(6월)



산림자원 산업화

- 지역의 목재·임산물 활용 클러스터 육성(12개소)
- 산림일자리 발전소 신설
- 사회적 경제 방식 일자리 창출
 중간 지원 조직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 산불·산사태 등 재해 분야 인력 확충
-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
(공공산림가꾸기, 도시숲 관리 등)



산림을 활용한 특화된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나무의사, 산림치유사 등 전문가를 양성하고

지역 목재와 임산물을 활용한 클러스터를 육성하여
산림자원을 산업화하겠습니다.

산불, 산사태 등 재해예방에 필요한
공공부문 일자리도 확대하겠습니다.

신산업 육성으로 미래 농업을 준비하겠습니다.

① 종자·농생명 소재 등 생명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일자리목표 | '18) 140명 → '22) 994명

종자산업 기반강화

- 2단계 골든시드 프로젝트로 국산우수품종 수출 확대(6천만불)
- 해외 전시포 운영(5개국), 국제 종자 박람회 개최
- 국제종자생명교육센터 설립(~'19)



기능성 소재 개발


- 7대 중점분야 중심의 대규모 R&D 추진
- 천연고분자, 향균, 건강증진, 사료첨가제, 동물백신, 생물농약, 친환경 비료

(누에 실크 인공고막) 기술개발 및 실용화('10~'17)를 거쳐 30억 규모의 시장창출 기대



미생물 산업화

- 농식품 미생물 산업화 지원 확대
 - * 프로바이오틱스, 발효식품, 천연살충제, 면역강화제, 축산악취 저감제
- 미생물산업 육성지원센터 운영
 - * 관련기업에 연구경비 대여, 시제품 제작, 인력양성 지원



신산업을 육성, 미래 농업을 준비하겠습니다.

먼저 종자·농생명소재 등 생명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2단계 골든시드 프로젝트로
종자 해외수출을 확대하고,

천연고분자, 동물백신을 비롯한
7대 중점 분야의
기능성소재 개발 R&D를 확대하겠습니다.

미생물을 활용한 천연살충제, 악취저감제 개발 등
산업화를 지원하겠습니다.

② 곤충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일자리목표 | '18) 280명 → '22) 1,400명

생산·보급 기반 구축

- 무병·우량 곤충 보급을 위한 곤충종자 보급센터 구축(~'19)
- 곤충 전문인력 양성 기관 확대('17: 15개 → '18: 20)
- 광역단위 곤충자원센터를 통해 농가 종합지원(4개소)
- 곤충산업클러스터 조성 추진('18)
- * 곤충 대량 사육·가공·제품 개발



신규 수요 창출

- 건강기능식품 및 반려동물 사료 개발
- 식품원료로 사용가능한 식용곤충 확대(7종 → 10)
- 곤충요리 경연대회 등 부정적 인식 해소를 위한 홍보 강화



곤충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우량 종자 보급센터, 곤충 산업클러스터 조성 등
생산과 보급 기반을 구축하는 한편,

식용곤충의 종류를 확대하고,
동물용 사료 개발 등 신규 수요를 창출하겠습니다.

3 4차산업 혁명에 대응한 과학영농기반을 확충하겠습니다.



일자리목표 | '18) 95명 ▶ '22) 1,920명

빅데이터 기술 활용

- 영상정보 등 활용, 농가생육·환경 데이터 수집 확대
* '17: 200호 → '22: 800
- 정밀 의사결정이 가능한 생육환경 관리 프로그램 개발
- 농식품데이터를 민간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농식품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첨단 농기자재 보급 확대

- 자율주행트랙터, 정밀파종기 등 R&D투자 확대('19년 상용화 목표)
- 드론·인공위성 영상정보를 활용한 수급 분석기술 개발
- 주산지 중심발작물 파종·수확기 집중 보급
* '18: 65개소 → '22: 240
- 전문방제업종 신설 등 방제 서비스 산업 육성



스마트 유통시스템 도입

- 축산물등급 영상판정 기능을 갖춘 스마트 축산물종합처리장 확산
* '17: 1개소 → '18: 3
- 과일 비파괴 당도 측정기 정확도 제고 추진
- 원산지 단속·이력추적 등에 블록 체인 기술 도입을 위한 연구



4차산업 혁명에 대응한 과학영농기반을 만들겠습니다.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한

정밀한 생육환경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농식품 데이터를 민간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겠습니다.

자율주행트랙터·드론 등 첨단 농기자재 보급을 위해
R&D투자, 사업화를 지원하는 한편,

농축산물 스마트 유통시스템을 도입하겠습니다.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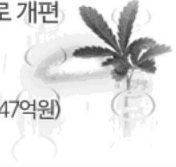
농신보·자금

- 동일인 보증한도(개인 10억원)와 전액보증 한도(2천만원) 상향 추진
- 청년농 스마트팜 종합자금(30억원) 등 신규 지원



R & D

- R&D 추진체계 전반을 현장 중심으로 개편
- 수요자가 직접 연구기관을 선택하는 R&D 바우처 확대
- 정부·농협공동 R&D매칭펀드 조성(47억원)



벤처 창업 지원

- 벤처창업인턴제, 찾아가는 창업보육(100개소)
- 벤처 등 농식품 펀드 조성(연 500억원 이상)
- 벤처창업특화센터(5개소)를 통해 자금·기술·마케팅 밀착 지원



수출

- 해외박람회 참가 지원, 맞춤형 상품개발 등 가공 식품과 농자재 수출지원 확대
- '신남방 정책' 등으로 수출시장 다변화
- 청년인턴, 시장개척단 파견 시장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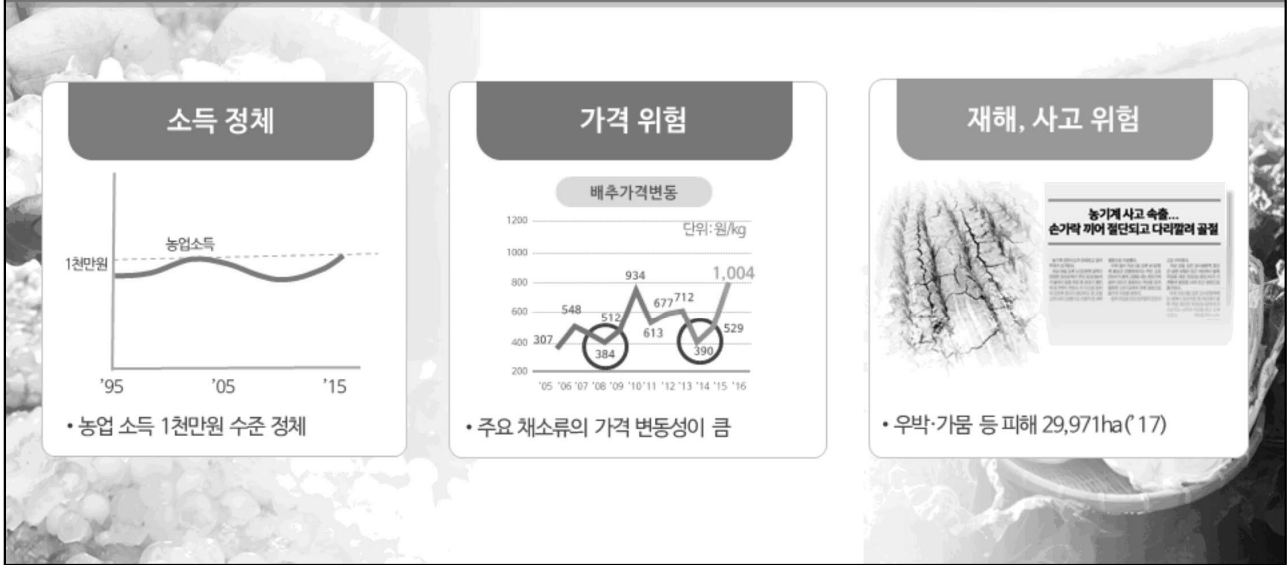


모든 정책수단을 활용하여
각 분야 일자리 창출을 돕겠습니다.

농신보 우대보증을 확대하고,
수요자가 연구기관을 선택하는 R&D 바우처를
지원하겠습니다.

모래펀드를 활용한 벤처 창업지원,
맞춤형 수출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2. 소득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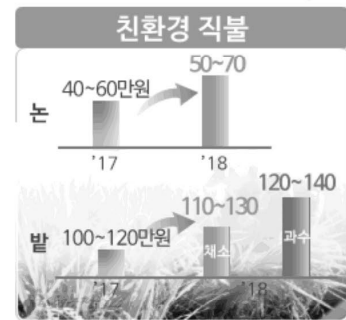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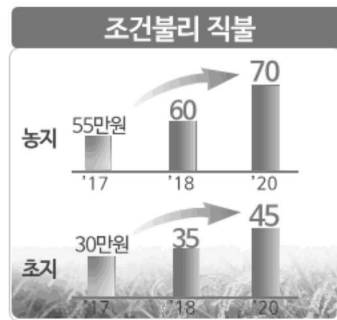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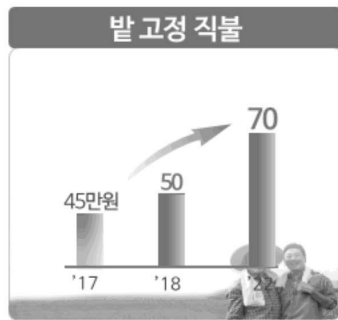


과감한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
 촘촘한 농가소득안전망을 만들겠습니다.

소득정체, 가격 등락, 재해·사고에 대응하겠습니다.

직불금을 확대하여 농업인 소득을 높ی겠습니다.

● 직불금 단가 인상(ha당)



*밭고정 및 조건불리 직불금 지속 인상 (ha당 5만원)

● 기존 직불을 공익형 직불로 확대·개편하고, 농업인의 환경보전 등 상호준수의무 강화

직불금을 확대하여 농업인 소득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밭 고정직불은 올해 50만원으로 인상하고,
2022년, 70만원까지 높이겠습니다.

조건불리 직불과 친환경직불 단가도
연차적으로 인상해 나가겠습니다.

기존 직불금을 공익형 직불로 확대하겠습니다.

월100만원 농지연금으로 고령농 생활안정을 지원하겠습니다.

● 소유 농지를 담보로 생활자금을 매월 연금처럼 지급

- (사례) 1억6천만원 상당 농지 가입 → 월 82만원 연금 수령, 월 28만원 임대소득 창출



● 제도개선, 맞춤형 홍보로 가입 확대('17: 8,631명 → '18: 12,000)

- 농지 감정평가액 상향조정 추진(80% → 90), 월 지급금 12.5% 증가 효과
- 도시 자녀의 부정적 인식 해소를 위한 홍보 강화

월 100만원 농지연금으로 고령농의 생활안정을
돕겠습니다.

농지연금은 소유농지를 담보로 매월 연금을 받으면서
직접 농사를 짓거나 농지를 임대해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농지 감정평가액 상향 조정으로
월 지급금을 12.5% 인상하고,
도시자녀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가입율을 높여가겠습니다.

생산자 조직화를 통해 농산물가격을 안정시키겠습니다.

채소가격안정제

무, 배추, 마늘, 양파, 고추, 대파

- 주요 채소 품목에 대해 수급조절 의무를 부과하되, 평년가격의 80%를 보장

〈대상품목과 물량확대〉



생산자단체 조직화

- 주산지 협의회와 의무자조금 단체 중심으로 전국단위 품목별 조직화
- 재배면적·출하량 조절을 통한 가격안정 체계화
- * 생산자 조직 확대 (주산지협의회: 4개 품목 → 11, 의무자조금 단체: 8개 → 11)

- 빅데이터·드론 등 첨단기기 활용, 농업관측 고도화
- 파종부터 수확까지 단계별 수급조절 매뉴얼 마련



생산자조직화를 통해 농산물 가격을 안정시키겠습니다.

수급조절 의무를 부과하고

평년가격의 80%를 보전해 주는 채소가격 안정제의
대상품목과 참여물량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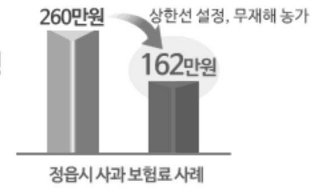
주산지협의회와 자조금 단체 등 생산자 단체를
조직화해서

재배 면적과 출하량 조절을 통한
가격안정 시스템을 체계화하겠습니다.

농업인의 자연재해 걱정을 덜어드리겠습니다.

농업재해보험

- 농가부담 경감을 위해 주요품목(사과·배·벼) 보험료율 상한선 설정
- 무재해 농가 보험료 할인(5%)



재해복구비

- 농약대·대파대 지원단가 대폭 인상(평균3배)



-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에 농작물 피해액 포함 방안 관계부처 협의('18하반기)

농업인의 재해 걱정을 덜어드리겠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료율의 상한선을 설정하고,
무재해 농가의 보험료를 할인하여
농가 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

정읍시 사과농가의 경우

작년 260만원내던 보험료를 올해는 162만원만 내면 됩니다.

농약대, 대파대 등의 재해복구비를 대폭 상향지원하겠습니다.

채소류의 경우 농약대 지원이 ha당 30만원에서
168만원으로 인상됩니다.

농업인 안전보험을 강화하겠습니다.

- 농업인은 대부분 산재보험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지만, 농업분야 재해율은 산업분야의 2배 수준
- 보험료율 산출방식 개선 → 보험료 '17년 대비 10% 인하
- 산재보험 수준으로 보장 강화한 신상품 개발·보급



- 안전보험 영업이익 일부를 적립하여 보험료 인상요인 최소화



농업인 안전보험을 강화하겠습니다.

농업인은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지만

농작업재해율은 일반 산업 분야의 두배 수준입니다.

농업인 안전보험료를 작년 대비 10% 인하하고,

산재 보험수준으로 보장을 강화한 신상품을

보급하겠습니다.

농촌 맞춤형 복지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기초서비스 접근성 제고

- 100원 택시 등 농촌형 교통서비스를 전체 군 지역 (82개)으로 확산
- 소규모어린이집 확대 (52개소)
- 농촌지역분만 등 공공의료서비스 제공강화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 확대

- 영농도우미 (15천가구), 행복나눔이 (14천가구) 지원
- 농업안전보건센터를 통한 무료 건강검진 실시 (5천명)



여성농업인 지원 강화

- 다문화여성 1:1 후견인제 도입 (1천명)
- 여성농업인 바우처 제도 확산 유도
- 공동경영주 등록 절차개선
*배우자 동의없이 등록 가능
- 농협 조합원 및 임원에 여성 농업인 참여 비율 제고



농촌맞춤형 복지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올해부터 100원 택시를 전 군지역에서 운영하고,
영농도우미와 무료건강 검진 등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확대하겠습니다.

다문화 여성 후견인제를 도입하고,
여성농업인 바우처를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농업 활성화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 사회적농업 실천조직(9개소)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5억원)
- 농촌지역 장애인, 노인 등 취약계층에게 농업활동을 통한 돌봄, 재활, 교육서비스 제공
- 한농대에 사회적경제 교육과정 개설, 인력양성
- 로컬푸드직매장 등 판로 확보 및 클라우드 펀딩 등 자금지원 방안 마련
- '사회적 농업법' 제정 추진



흥성행복농장

의사·농업인·지역주민이 협동조합을 설립하여 농업을 활용한 장애인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교육을 수료한 장애인 중 일부를 농장에서 고용



영광여민동락 공동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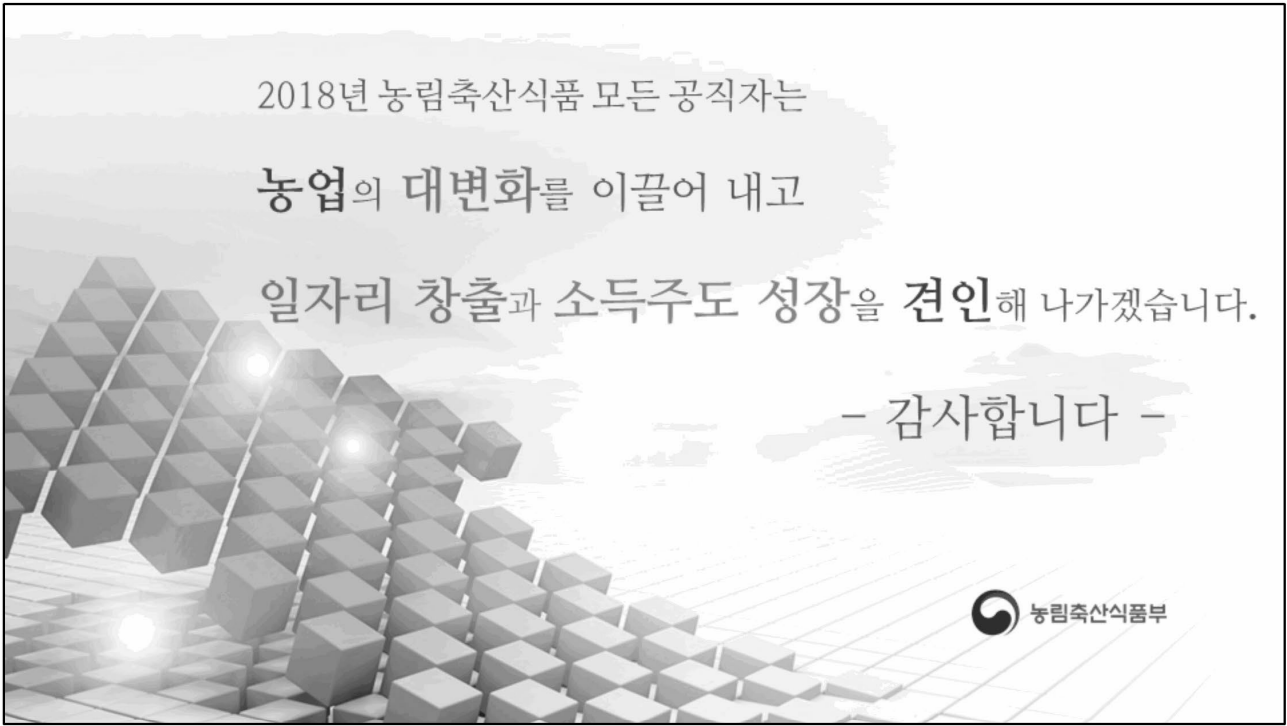
노인복지센터를 설립하여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농산물 생산·가공과 관련된 노인일자리 사업 운영



마지막으로 사회적 농업 활성화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장애인 등 농촌 취약계층에게 농업활동을 통한 돌봄,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 농업 실천조직을 육성하겠습니다.

사회적 농업 실천조직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하고, 로컬푸드 직매장, 클라우드 펀딩 등을 통해 농촌에서 사회적 농업이 성장할 수 있는 토대도 구축하겠습니다.



2018년 농림축산식품 공직자는
농업·농촌의 대변화를 이끌어 내고
일자리 창출과 함께
소득주도 성장을 견인해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민안전(국민건강 확보)

2018. 1. 23.

국민건강의 첫 걸음,

안전하고 깨끗한 농장을 만들겠습니다.

2018.1.23.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국민건강의 첫걸음인

안전하고 깨끗한 농장을 만들겠습니다.

생산단계 안전·환경에 영향을 주는 요소를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농장에서의
안전관리
중요성 부각

유럽, 한국
계란 살충제 성분 검출
(17. 8월)

1. 토양·물부터 농약까지 농장 안전관리 강화
2. 국민 눈높이에 맞는 동물복지형 축산 전환
3. 건강·안전·안심으로 소비자·생산자와 소통

생산단계

안전과 환경에 영향을 주는 요소를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지난 여름

유럽과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계란 살충제 검출 사태는
농장에서의 안전관리 중요성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농식품부는

토양, 물, 농약에 이르는 농장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동물복지형 축산으로 전환하며,
건강·안전·안심으로 소비자·생산자와 적극 소통하겠습니다.

1

농장의 안전관리 시스템, 기본부터 충실히 다지겠습니다.

토양

✓ 농경지의 비옥도·중금속 성분 검사

유기물 함량



산성도



중금속

농경지 중금속 기준 초과율 : 1.4%

물

✓ 농업용 호소 수질 측정망 조사 (975개소)

수 질

'17년 환경기준 초과 저수지 8.4% 수준



농약

✓ 농산물 잔류농약 등 유해물질 안전성 조사

농산물 부적합률

'17년 기준 1.9%

부적합 사유: 농약(81%), 중금속(15%)



먼저 농장의 안전관리 시스템을
기본부터 충실히 다지겠습니다.

우리나라 토양은
유기물 함량과 산성도를
좀 더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농업용 저수지의 8.4%가 수질기준을 초과하고 있으며

농산물 안전에 관한 문제는 대부분
잔류농약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땅, 깨끗한 물'에서 출발하겠습니다.

건강한 땅 만들기

- ✓ 토양 유기물 함량을 높이고, 산성화방지 지원
 - 유기질 비료 품질 관리 시스템 운영
 - 토양검정 결과에 따라 토양개량제 공동 살포 추진
- ✓ 폐광산 주변, 산업공단 인근 농경지 등 오염 우려지역 중금속 잔류조사 강화('18년 3,900필지)
 - 해당 농산물 검사 후 잔류기준 초과시 폐기
- ✓ 전국 농경지 토양조사 DB를 농업환경 안전관리에 활용
 - 기준초과 농경지 개량·복원 등 토양관리 추진

깨끗한 물 지키기

- ✓ 수질기준 4등급 초과 저수지 정화 추진
 - 정화습지, 침강지 설치('18년 누적 : 31개소 252억원)
 - 저수지주변 오염감시, 쓰레기 수거 등 정화활동 전개
- ✓ 중금속 검출 우려 저수지 모니터링
 - 기준 초과시 물 공급 중단, 대체 급수 및 정화 조치
 - * 천안입장저수지('15) : 비소 기준 초과로 급수 중단 등 대응
- ✓ 농업용 관정 수질 관리 강화
 - 공공관정 수질검사(매3년), 폐관정 점검 강화(연1회 → 2)
 - 공공관정 관리지원 시스템 구축('18)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

- ✓ 지역 공동체 중심으로 공동 활동을 통해 농업·농촌 환경 개선
 - 농업부산물 공동 수거, 생태교란 식물 제거, 농업용수원 청소, 수생식물 식재 등
- ✓ 3~5개 지역 시범 추진, 프로그램 구체화('18)

건강한 땅, 깨끗한 물에서 출발하겠습니다.

건강한 땅을 만들기 위해

고품질 유기질 비료와 토양개량제를 공급하는 한편,

수질 모니터링과 정화사업을 추진하여

농업용 저수지와 관정을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을 적극 도입해서

지역공동체 중심의 농촌환경개선 활동을 돕겠습니다.

농약 사용 기준을 철저히 지키고 기록하겠습니다.

농약이력관리 시스템 구축

- ✓ 농약 판매기록 의무화
(현재) 9종 ➡ (개선) 모든 농약
 - 판매시 농약 바코드 정보와
경영체 등록 정보를 연계 관리
 - * 전국 농약 판매점 5,584개소
- ✓ 농약관리법 개정('18년) 및
시행체계 구축 추진



농약판매 관리 강화

- ✓ 경영체 등록정보에 따라 재배작목
확인 후 적합한 농약만 판매
- ✓ 농약 판매인 자격 요건과 교육 강화
 - 농약·병해충 방제 관련 경력이나
자격 소지자로 한정
 - 민간에서 운영되던 이수 의무교육을
공공 교육으로 전환(농진청)



농약허용물질관리제도 준비

- ✓ 소면적작물재배에 필요한 농약까지
직권 등록 확대(농진청)
- ✓ 농약살포 실천지침 배포
 - 작목별 등록 농약의
살포량·시기 등 규정
- ✓ 찾아가는 교육(방문·우편 등),
농약상담 콜센터 운영 강화
(농진청·산림청)



농약사용 기준을 철저히 지키고 기록하겠습니다.

농약이력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모든 농약의 판매기록을 의무화하겠습니다.

경영체 등록정보를 활용하여
농가 재배작목에 맞는 농약을 판매토록 하고
판매관리인 자격요건도 강화하겠습니다.

'19년 농약 허용물질 관리제도(PLS) 시행에 대비하여
소면적 작물 재배에 필요한 농약까지 직권등록하고
농업인 홍보와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친환경 농업을 내실있게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소비자 신뢰 제고

- ✓ 친환경 인증 기준 강화
 - 농산물 작업장 위생기준 신설 등
- ✓ 인증기관 평가를 통해 부실기관 (3회 연속 미흡) 퇴출 등 조치
- ✓ 상습 위반 농가(인증취소 처분 3회) 영구 퇴출 등 행정처분 부과
 - 인증농가 교육 및 안전성 검사 확대



생산기반 확충

- ✓ 친환경농업 직불금 단가 인상
 - 논 40~60만원/ha → 50~70
 - 밭 100~120만원/ha → 110~140
- ✓ 유기지속직불지급개선(3년→무기한), 유기농 교육 프로그램 확대
- ✓ 친환경농업 지구 확대('18:12개소)
- ✓ 지역별 특화된 저투입 농법 개발을 위해 연구·교육센터 확충 ('19까지 10개소)



유통·소비 활성화

- ✓ 친환경 자조금('18: 31억원) 활용 소비 촉진 및 판로 개척
 - 대형마트 판촉행사(3,000여 지점)
- ✓ 광역 산지 유통조직 육성 ('18: 4개소 → '22: 9)
- ✓ 친환경 물류센터(경기·전남)를 통해 학교 등 공공급식 확대
 - 급식업체 등 매입자금 지원(250억원)
- ✓ 무농약 원료가공식품 인증제 도입



친환경농업을 내실있게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소비자 신뢰 제고를 위해

친환경 인증기준을 강화하고

부실인증기관과 상습위반 농가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겠습니다.

친환경직불 단가 인상, 친환경농업 지구 확대로

생산기반을 확충하고

자조금을 활용한 판로 개척,

전용 물류센터와 공공급식 연계 등을 통해

친환경 농산물 유통·소비를 활성화하겠습니다.

2

국민 눈높이에 맞는 동물복지형 축산을 만들겠습니다.



둘째, 국민 눈높이에 맞는 동물복지형 축산을 만들겠습니다.

축산 약취 민원의 증가,

살충 성분 농약과 항생제의 관리 미흡,

질병에 취약한 사육환경 등 제반 문제를 풀기 위해

축산업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악취 없는 축산업을 만들겠습니다.

농장 악취 관리 강화

- ✓ 가축분뇨 처리 매뉴얼 보급
 - 축종·축사형태·시설 유형별 분뇨처리 주기 등 구체적 규율
- ✓ 특별관리 농장 지정, 모니터링
 - ※ 제주 양돈농장 50개소 조사 결과 47개소 기준초과 → 집중관리추진
- ✓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확대 및 사후 관리 강화(18년 누적 1,750농가)
- ✓ 광역 악취 개선사업 확대
 - 민원 다발 지역 3개소 대상 시설개선, 컨설팅 패키지 지원

분뇨 처리기반 확대

- ✓ 지역 맞춤형 공동자원화시설 확충
 - * '18년까지 110개소, '22년까지 150
- ✓ 공동자원화시설 악취 측정기 설치 의무화
- ✓ 액비 성분 분석기(9개소), 부숙도 판정기(20개소) 보급 확대
- ✓ 축산환경관리원 기능 강화
 - 축산분뇨 처리 및 악취저감 컨설팅·교육



관리해제 매몰지 소멸 처리

- ✓ '10~'11년 조성된 구제역 매몰지 4,751개 모두 발굴·소멸 처리(~'22)
 - '18년 환경 오염도가 높은 940개 우선 소멸 처리(전체 20%, 188억원)
- ✓ 고온 분쇄, 화학적 분해 등 친환경 처리방식 확대
 - * '16~'17년 시 살처분 방식 중 매몰이 83% 차지
 - 고온분쇄 시설 1개소, 이동식 열처리 장비 20대 지원('18)



악취없는 축산업을 만들겠습니다.

농장 악취를 줄이기 위해
가축분뇨 처리 매뉴얼을 보급하고
특별관리 대상 농장을 지정,
집중 관리하겠습니다.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며
악취측정기 설치를 의무화하겠습니다.

과거 조성된 4천 7백여개 구제역 매몰지 중
오염도가 높은 940개소를
올해 188억원 예산으로 우선 처리하고
2022년까지 모두 발굴·소멸처리 하겠습니다.

농장 동물의 복지를 향상시키겠습니다.

공장식 밀식 사육 개선

✓ 산란계 사육밀도 기준 개선(신규농가, 7월부터)

- (현행) 0.05㎡/마리 → (개선) 0.0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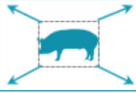


- 기존농가는 '25년까지 조기 전환 유도

✓ 육계·돼지 임신돈 사육밀도 기준 개선

*육계: (현행) 33~39kg/㎡ → (개선) 33

임신한 돼지: 사육면적을 넓히고,
고정 사육기간 단축 추진



가축 건강 관리 및 학대 금지

✓ 축사내 암모니아농도 기준 설정

- '19년부터 주요 축종 25ppm으로 설정

✓ 낮·밤을 고려한 축사조명 기준 설정

- (산란계) 낮 시간 10 lux, (육계) 낮 시간 20 lux,
암기 6시간, (돼지) 낮 시간 40 lux

✓ 산란계 강제털갈이 금지, 부리다듬기 고통 최소화

※ 사육밀도 개선 등은 실태 조사를 거쳐 확정

정책 지원

- ✓ 동물복지형 축산 시설개선 자금 지원 강화(기금류의 경우 보조 30%)
- ✓ 계란 사육 환경 표시제 도입(방사·평사·개선된 케이지 등으로 구분, 식약처 협조)
- ✓ 동물 복지 인증제 확대 및 인증 후 3년간 직불금 지급 추진

농장 동물의 복지를 향상시키겠습니다.

공장식 밀식사육을 개선하기 위해

올해 7월부터

신규 산란계 농장을 시작으로

육계, 임신한 돼지의 사육면적을 단계적으로 넓혀가겠습니다.

축사에 암모니아 농도, 조명 기준 등을 설정하여

가축 건강을 관리하고, 학대 행위를 금지하겠습니다.

동물복지형 축산으로 조기에 전환하기 위해

시설개선 자금을 우선 지원하고

동물복지 인증 직불제를 도입하겠습니다.

축산업 입지를 재편하겠습니다.

가금 밀집 사육 지역 재배치

- ✓ 농장 간 거리가 500m 이상 되도록 재배치 지원
 - 지역 내 농장 간 합병, 지역 내 이전, 타지역 이전



- * 가금 밀집 사육 지역 사례(김제 용지)
 - 56농가, '08년 이후 4회 시 발생, 1,977억 재정 소요
- ✓ 취약지역 내 신규 가금농장 설립 금지
 - 철새 도래지 인근 3km, 가금류 농장 500m 이내 신규 허가 등록 금지

환경 친화형 축산 모델 확산

- ✓ 중·소규모 산지생태 축산 활성화
 - 초지 조성 비용 등 지원('18년 누적 39개소 지원)
 - 산지 이용규제 완화 검토



- ✓ 지역단위 환경친화축산단지 조성
 - 새만금 모델, 시·군 단위 모델 마련, 분뇨 및 악취 처리, 질병 예방 최적화 방식 적용
 - 농공단지에 준하는 지원방안 검토



축산업 입지를 재편하겠습니다.

가금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농장간 간격이 500미터 이상 되도록 재배치를 지원하고

철새도래지 인근 3킬로미터 이내

신규 가금농장 설치를 금지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산지생태축산, 지역단위 축산단지 조성 등 환경친화형 축산모델을 확산하겠습니다.

선제적으로 축산물 안전을 관리하겠습니다.

살충성분 농약관리 강화

- ✓ 농가 안전사용기준 신설
- 위반 시 과태료·허가 취소
- ✓ 농장단위 계란·산란노계 전수검사 실시 (검사인력·장비 확충)
- ✓ 닭 진드기 방제 현장 매뉴얼 보급 및 교육 확대(연2회)
- ✓ 판매상에게 거래 기록 유지 의무 부여



위생적 사육환경 조성

- ✓ 대규모 산란계 농장, 종축장부터 HACCP 의무적용, 축종 확대('20~)
- 축산농장의 위해요소 평가항목에 살충성분 농약 등 추가
- ✓ 전문 방제업체를 통한 축산업 공동방제사업 시범 실시(40개소)
- ✓ 방제기술 실용화 연구 지원('18년 12.8억원)



항생제 사용 축소

- ✓ 수의사 처방 대상 항생제 확대
*('17) 25종 → ('18) 32 → ('20) 40
- ✓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제 관리 강화
* 소 생애 항생제 사용금지 원칙 규정
- ✓ 항생제 내성 정기 모니터링, 농가 교육 및 지도점검 실시



선제적으로 축산물 안전 관리를 해나가겠습니다.

농가의 안전사용기준 신설,
판매상에게 거래기록 유지 의무를 부과하는 등
살충성분 농약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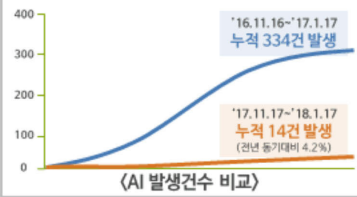
대규모 산란계 농장에 해썹(HACCP)적용을 의무화하고
전문방제업체를 통한
축산업 공동방제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수의사 처방이 필요한
동물항생제를 40종으로 확대하는 등
항생제 사용을 줄여나가겠습니다.

평창올림픽 성공을 위해 AI 차단에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신속한 초동조치

- ✓ H5형 항원 검출 즉시, 이동 통제 및 예방적 살처분 등 실시
 - 과거보다 1~2일 빠른 대처
- ✓ 계열사 소속농장 발생 즉시, 계열사 전체 이동중지 명령, 소독·일제검사
 - 방역소홀 여부 등 정부합동조사
- ✓ AI 발생시 해당시·군 모든 가금농장, 종사자 7일간 이동·출입 통제



전국단위 차단방역 강화

- ✓ 발생 위험지역 오리 휴지기제 실시
 - * 전체 오리 중 37% (261만수) 사육제한
- ✓ 8대 중점관리대상을 선정, 일일 관리
 - * 철새도래지, 밀집지역, 계란 집하장 등
- ✓ 농장 단위 오리 검사(주1회) 및 도축장 출하 검사(30%) 확대
- ✓ 대규모단지 인근 계란 환적장 설치
 - 차량농가 출입 차단, 주2회만 반출 허용



강원도 특별방역

- ✓ 경기장 반경 3Km 내 가금 수매도태 완료 (197호, 7천여수)
 - 3km 밖 1만수 이상 농가 통제인력 배치
- ✓ AI 발생지역 가금류 반입금지 조치
- ✓ 중앙특별방역단 파견 (검역본부, 30명)
 - 방역조치 이행점검, 기술지원



평창올림픽 성공을 위해 AI 차단에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H5형 항원 검출 즉시 이동통제, 예방적 살처분을 실시하고 계열사 소속농장에 대해서도, 전체에 이동중지 명령을 발동하는 등 과거보다 신속한 초동 조치를 취하여

전년동기 발생건수 334건에 비해 이번 겨울은 14건으로 대폭 줄였습니다.

위험지역에 오리사육 휴지기제를 실시하고 오리농장 주 1회 정밀검사, 도축장 출하 검사는 30%로 확대하였습니다.

올림픽 개최지 강원도는 경기장 주변 가금을 모두 수매도태하였고 중앙특별방역단을 파견하여 방역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한식문화를 널리 알리겠습니다.

K-Food Plaza 운영

* 홍보관과 식품관으로 구성

- ✓ (홍보관) 전통 상차림, 발효식품 등 한식의 독창성과 가치 홍보
- ✓ (식품관) 곤드레밥, 메밀전 등 강원도 대표 음식 50선과 한식 판매
 - 강원도의 청정 환경과 어울리는 '자연주의' 음식 홍보 기회로 활용



국내산 안전 농축산물 공급

- ✓ 선수촌 한식당에 필요한 농축산물 재료는 국내산 공급
 - 생산자 자조금·농협 등 활용(12억)
 - (한우 47톤, 돼지고기 23톤)
- ✓ 선수단 식단에 공급되는 농축산물 안전성조사, 원산지정보확인(농관원)



푸드 서밋 개최

- ✓ 국내외 식품·외식 전문가 초청, 한식의 성장가능성 조명 (2.12~13)
 - 식품·외식분야 글로벌 리더 및 셰프 등 250여명 참석 예정
- ✓ 미래식량 조리시연, 전통주 시음, 토크콘서트 등의 프로그램 운영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한식문화를 널리 알리겠습니다.

K-Food Plaza를 운영하여

한식의 독창성과 가치를 홍보하는 한편

국내외 방문객들이

곤드레밥 등 강원도 대표음식을 맛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생산자단체 자조금 등을 지원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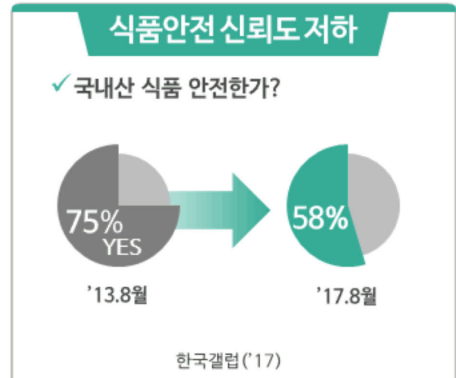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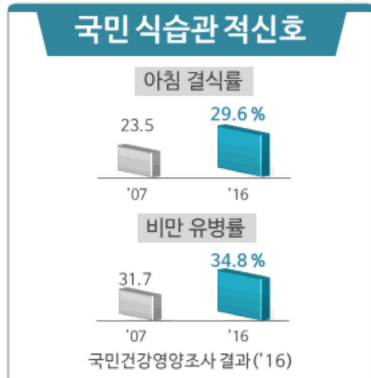
선수촌 한식당에 안전한 국내산 농축산물을

공급하는 한편,

국내외 식품·외식 전문가를 초청하여

푸드 서밋을 개최하겠습니다.

3 건강·안전·안심으로 소비자·생산자와 적극 소통하겠습니다.



셋째, 건강·안전·안심으로
소비자·생산자와 적극 소통하겠습니다.

아침 결식률이 30%에 달하는 등 식사는 불규칙해지고
비만 유병률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취약계층 영양상태를 개선하고
우리 식품에 대한 신뢰도 회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건강한 식생활을 확산하겠습니다.

어린이

- ✓ 어린이집 '텃밭·미각교육' 지원 ('18년 200개소)
- ✓ 초등학교 방과후 돌봄교실 학생 전체(24만명)에게 제철 과일간식 제공(72억원)
- ✓ 영유아·초등학생 농업·농촌 체험 교류 지원 ('17) 30천명 → ('18)35
- ✓ 식생활 교육 종합정보망 구축



청년 및 어르신

- ✓ '천원의 아침밥' - 대학생 아침먹기 ('17) 10개교 → ('18) 20



- ✓ 마을회관, 경로당 어르신 건강밥상 교육 ('18) 900회



취약계층

- ✓ 취약계층 복지용 쌀 할인공급 및 특등벼 우선공급(연간 8만톤 수준)
- ✓ 학교 우유 급식 지원 - 국민기초생활 수급자·한부모 가족 자녀 등 57만명
- ✓ 푸드뱅크 연계 농식품 기부 - 생산자단체, 농식품 기업 등과 협력하여 기부 활성화
- ✓ 농식품 바우처 도입을 위한 실증 연구 추진(2개 지자체)



국민들의 건강한 식생활을 확산하겠습니다.

어린이집 텃밭 교육을 지원하고
초등학교 돌봄교실 학생 24만명에게
제철 과일간식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대학생 대상
천원의 아침밥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한편,

푸드뱅크와 연계하여
취약계층에게 농식품 기부를 활성화하겠습니다.

농식품 바우처 도입을 위한
실증연구도 추진하겠습니다.

고지방 위주의 쇠고기 생산을 바꾸겠습니다.

쇠고기 등급제 개편

- ✓ (중전) 마블링 (근내지방도) 중심의 등급기준
 → (변경) 고기 색깔, 지방 색깔, 조직감 등 평가 비중 강화
 * 국민 건강에 기여, 사육농가 경영비 절감



안전한 먹거리 공동체를 만들겠습니다.

지역 푸드플랜

- ✓ 지역 푸드플랜을 마련,
농업 생산-소비 연계시스템 구축
 - 지역 농산물을 공공급식 등 지역 소비처에 체계적으로 공급
- ✓ 8개 지자체 선정, 푸드플랜 수립 지원(18, 8억원)
 - 매장설치, 물류인프라, 푸드위원회 구성 등

전주푸드 2050 플랜 (도농복합형)

지역 1,031 농가를 조직화하여
관내 120 학교·어린이집에
안전 식재료 공급
HACCP, 플드체인, 자체검사



부여 굿뜨레 로컬푸드센터 (농촌형, 도심제휴)

지역내 공공급식 40개소 및
서울 강북구 어린이집
47개소와 부여군 600여
친환경 농가연계



고지방 위주 쇠고기 생산을 바꾸겠습니다.

등급 평가시, 마블링 평가비중을 낮추고
고기 색깔 등 다른 요소의 비중은 강화하여,
경영비 절감과 함께 균형잡힌 영양섭취에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지역 푸드플랜을 통해 안전한 먹거리 공동체를 만들겠습니다.

올해 8개 지자체가 푸드플랜을
수립하도록 적극 지원하여
전주, 부여와 같은 우수모델을 확산해 가겠습니다.

소비자·생산자와 안심 소통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소비자 소통채널 구축

- ✓ 축산물 이력추적제 확대
 - 닭, 오리고기 이력제 시범사업
 - ICT 활용, 소·돼지 이력 정보 입력 체계화
- ✓ 소비자와 함께하는 안전안심 모니터링 확대
 - 농산물 우수관리(GAP) 인증현장 점검
- ✓ 농축산물 안전 관련 소비자 인식 조사 정례화



소비자, 생산자, 정부간
‘소통 협의체’
마련

생산자 소통·교육·홍보 강화

- ✓ 생산자단체와 포럼 구성·운영
 - 분야별, 품목별 정책 방향 공유 및 의견수렴
- ✓ 생산자 단체와 합동으로 위생·안전 점검 실시
- ✓ 안전·위생 교육·홍보 강화
 - 농약, 항생제 등 사용기준 및 농장단계 안전관리 매뉴얼 마련



소비자·생산자와 안심 소통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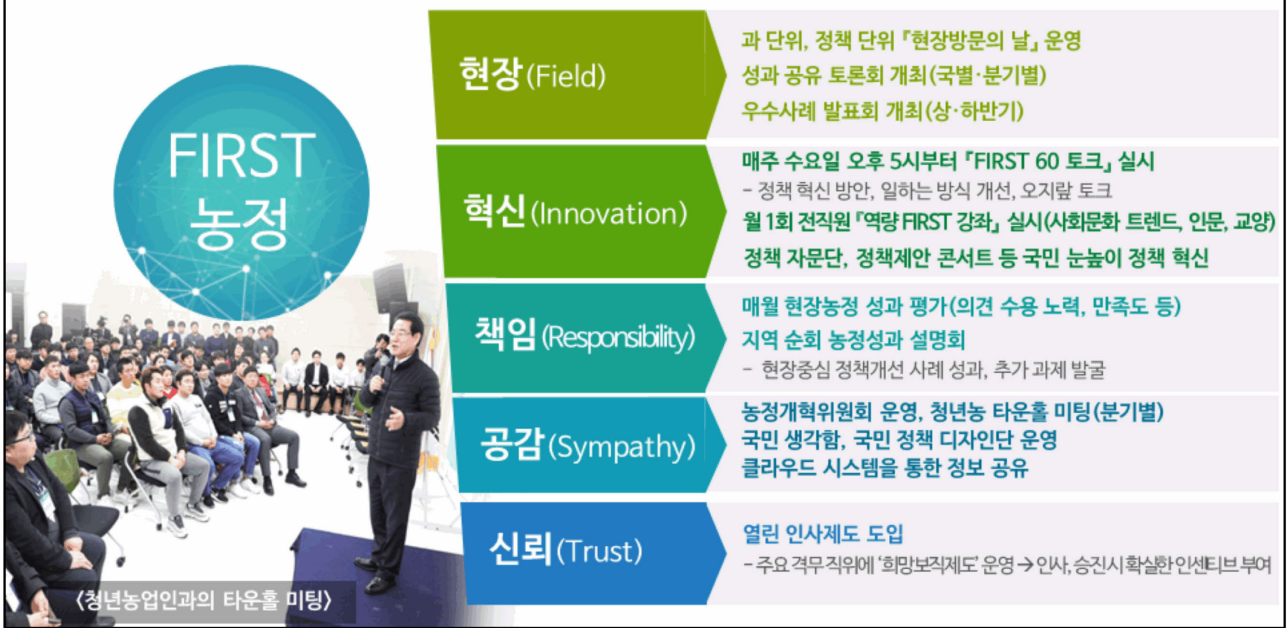
소비자에게

가금류까지 축산물이력 정보를 제공하고
생산현장 모니터링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생산자단체와 합동 포럼 운영,
찾아가는 교육·홍보를 강화하여
생산자와도 적극 소통하겠습니다.

농식품 안전 이슈에 대해
정부, 생산자, 소비자가 함께 논의하는
‘소통 협의체’를 운영하겠습니다.

현장과 혁신을 최우선으로 하는 FIRST 농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농식품부는
현장과 혁신을 최우선으로 하는
FIRST 농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정책담당자가 팀단위로
현장을 방문해서 문제와 답을 찾는
현장방문의 날을 운영하고

매주 수요일 퇴근전 60분 간 'FIRST 육공(60) 토크' 를 통해
정책과 일하는 방식을 혁신하며

청년농 타운홀 미팅을 분기별로 개최하는 등
고객과의 소통도 확대하겠습니다.

모든 업무추진 과정에서
현장, 혁신, 책임, 공감, 신뢰의 FIRST 농정을 추진하겠습니다.

국민 먹거리 종합 계획 수립

생산과 소비 먹거리의 안정적 공급	안전관리 농장부터 식탁까지 빈틈없는 안전관리	식생활·영양 국민 식생활·영양 안전망 구축	환경보전 먹거리 생산과 환경과의 조화
---------------------------------	---------------------------------------	--------------------------------------	-----------------------------------

농식품부 · 복지부 · 식약처 · 환경부 · 교육부 및 각 분야 전문가 참여

국민건강을 최우선으로 하여
생산 단계의 **안전과 환경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생산과 소비, 안전관리, 식생활, 환경보전을 아우르는
국민 먹거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국민건강을 최우선으로 하여
생산단계의 안전과 환경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보도자료

소득주도 성장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

2018. 1. 18.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보건복지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보도자료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하나된 열정
하나된 대한민국



보도일시		2018. 1. 18(목) 14시 이후 보도		배포일시		2018. 1. 18(목) (총 8매, 첨부 별도)	
담당자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담당관	과장	김 은 철	044-202-7026			
		서기관	김 태 연	044-202-7027			
		사무관	박 상 원	044-202-7028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총괄과	과장	박 종 찬	042-481-4537			
		서기관	김 민 규	042-481-4540			
	보건복지부 기획조정담당관	과장	황 의 수	044-202-2310			
		서기관	양 정 석	044-202-2303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재정담당관	과장	윤 원 습	044-201-1311			
		서기관	김 형 식	044-201-1317			
		사무관	김 세 진	044-201-1324			
해양수산부 기획재정담당관	과장	이 수 호	044-200-5120				
	사무관	권 영 규	044-200-5121				
	주무관	이 경 환	044-200-5122				

「소득주도 성장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주제로 2018년 첫 국무총리 정부업무보고 실시

- 고용노동부·중소벤처기업부·보건복지부·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

< 주요 내용 >

- ◇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인차과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으로 소득주도 성장 견인, 청년을 위한 좋은 일자리 창출·지원, 노동시간 단축 입법 지원에 총력
-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정책을 일자리 중심으로 전면 개편, 성과공유 확산 등을 통해 일자리·소득을 늘리는데 주력
- ◇ (보건복지부) “더 나은 삶을 위한 소득기반 마련”,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국가책임 강화”, “모두가 어울려 살기 위한 지역사회의 포용 확대” 추진
- ◇ (농림축산식품부) 2018년은 농업 대변화의 원년, 농식품 산업과 농산촌 일자리 총 33천개를 창출하고, 농업인 소득안전망을 확충
- ◇ (해양수산부) 해양산업 육성으로 일자리를 만들고, 어가소득 5천만원 달성 및 「어촌 뉴딜300」 사업 추진으로 국민 삶의 질 개선

【 2018 정부업무보고 개요 】

-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1.18(목) 세종 컨벤션센터에서 2018년 첫 「정부업무보고」를 하였다.
 - 이날 보고는 국무총리와 5개 부처 장·차관, 당·청 인사 및 일반국민 등 1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소득주도 성장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주제로 약 2시간 30분 동안 진행하였다.
 - 우선, 5개 부처 장관이 부처별 주요 정책과제를 보고한 후 일반 국민, 전문가 등을 포함한 참석자들의 자유 토론*이 이어졌다.
 - * 토론 주제는 부처 보고 주제와 동일
- 1월 18일부터 29일까지 진행되는 2018년 정부업무보고의 첫 보고주제로 "소득주도 성장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이 선정된 것은,
 - 금년에는 소득주도 성장을 본격화하여 국민들이 삶의 질 개선을 체감토록 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적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 국민들이 소득 3만불 시대에 걸맞는 삶의 질을 누리도록 하는 것이 국정의 최우선 과제이며, 이를 위해 정부 각 부처가 각오를 새롭게 다지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 부처별 주요 보고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고용노동부 】

-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소득주도 성장의 기틀*을 마련하였다고 평가하면서, 문재인 정부 2년차인 올해는 이를 확산하고, 국민이 그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3가지 과제를 집중 추진하기로 하였다.
 - * 최저임금 인상,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 등
- 세 가지 중점과제는 ▲노동시장 격차해소 ▲양질의 일자리 창출 지원 ▲일터에서의 삶의 질 향상이라고 밝혔다.

- 첫째, 노동시장 격차 해소와 관련하여 최저임금('18년 시간급 7,530원) 안착을 위해 소상공인 대상 일자리 안정자금(236만명, 3조원), 사회보험 부담완화를 위한 보험료 지원*에 범정부적 역량을 집중한다.
 - *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두루누리) 확대, 건강보험료 50% 감면, 4대 보험료 세액 공제
- 아파트, 편의점 등 사업주 대상 간담회·설명회 등을 통해 최저임금 준수를 지도하고, 편법사례를 점검·시정('18.1~3월, 5천여개소)한다.
- 고용형태별 격차 해소를 위해 공공부문의 경우 금년에는 공공기관 자회사 비정규직 등에 대한 2단계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며,
 - 원·하청 노동자 간 격차 완화를 위해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장단기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다.
- 둘째,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관련, '21년까지 20대 후반 청년인구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향후 3~4년간 청년 취업을 집중지원한다.
 - 우선 3대 청년 패키지 사업*을 대폭 확대 시행하고, 청년이 참여하여 함께 만드는 「청년 일자리 대책」을 순차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 * 청년구직촉진수당, 중소기업 청년추가고용장려금(2+1), 청년내일채움공제
 - 알바 청년들을 위해서는 소액 체당금제를 개편(확정판결요건 폐지), 체당금 지급 기간을 단축하여 체불 발생 시 즉시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한다.
- 셋째,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장시간 근로 관행 개선과 노동시간 단축 법안 통과를 최우선으로 추진한다.
 - 장시간 근로 업종에 대한 근로감독 강화('18. 600개소), 재정지원*을 통해 근로시간단축과 청년 신규채용을 연계해 나갈 계획이다.
 - * 신규채용인건비(1인당 월 최대 80만원) 지원기간 연장(1→2년, 제조업종 중견기업)
 - 또한, 휴일·휴가 사용 촉진 등 국민 휴식권을 보장하고, 일·생활 균형을 위해 전국 3곳에 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을 신설하여 중소기업 저임금 노동자를 위한 보육시설 모델로 육성할 계획이다.
- 정책과제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근로감독의 실효성 강화 및 근로감독관 전문성 제고 등 근로감독행정을 혁신하고, 고용센터의 재취업 지원 기능 강화, 현장노동청 운영에도 힘쓸 계획이다.

【 중소기업부 】

- 중기부는 “2018년에는 중소기업 정책을 일자리 중심으로 전면 개편하고, 성과공유 확산 등을 통해 일자리·소득을 늘리는데 주력한다.”고 밝히면서 4개 핵심 과제를 보고하였다.
- 첫째, 일자리 중심으로 중소기업 정책을 전면 개편한다.
 - 이를 위해, 37개 중소기업 사업(5.8조원)의 대상자 선정시 일자리 관련 평가점수를 대폭 높여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을 집중 지원한다.
 - 또한, 모태펀드 운영방식과 지역혁신창업클러스터는 민간 주도로 개편하고 혁신모험펀드는 2.6조원을 조성하여 민간의 창의적 활동을 촉진해 나갈 계획이다.
- 둘째, 성과공유 확산을 통해 근로자·가계 소득 증대를 추진한다.
 - 협력이익배분제 (대-중소기업간), 미래성과공유제 (중소기업-근로자간) 등을 통해 근로자·가계 소득의 기틀을 강화하고, 어음제도의 단계적 폐지 등 상생 정책을 추진하며,
 - 규제샌드박스형 지역특구 도입,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제도 개편 등을 통해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할 계획이다.
- 셋째, 소상공인의 혁신성과 협업을 촉진하고 사업영역을 보호한다.
 - 혁신형 소상공인을 육성(22, 15만개)하고, 소상공인의 협업화·조직화, 백년가게(30년 이상) 지정·육성 등을 통해 자생력을 높여 나가며,
 - 소상공인의 피해를 막기 위해 복합쇼핑몰 규제를 강화하고,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법 제정을 추진한다.
 - 전통시장의 화재 방지시설을 구축하고, 상인주도형 시장 활성화 프로젝트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 넷째, 업무혁신으로 데이터 기반 행정, 현장 확인 행정을 통해 중기부를 최고 행정 서비스 기관으로 탈바꿈해 나갈 계획이다.
 - 전직원 혁신아이디어 제안 (아무말 대잔치), 문서 단순화(원클릭 줄이기), 정책공유 강화, 공동 의사결정 등 행정 혁신도 추진한다.

【 보건복지부 】

- 보건복지부는 “포용적 복지국가로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겠다”라고 다짐하며, 3대 정책 목표*를 중심으로 올 한해 추진할 핵심 방안을 보고했다.

* ①더 나은 삶을 위한 소득기반 마련, ②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국가책임 강화, ③모두가 어울려 살기 위한 지역사회의 포용 확대

- 먼저, ①“소득기반 마련”을 위해 아동, 저소득층, 노인 등이 소외받지 않도록 정책을 펴나가면서, 보건복지분야 일자리도 창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아동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기초생활 보장 내실화 및 자립지원 강화 등을 통해 빈곤의 사각지대를 줄여 나갈 계획이다.

* 0-5세 아동수당 도입(9월), 국가예방접종 확대(6~59개월→초등생 위기아동 조기발견시스템 전국 확대(3월

- 기초연금도 25만원으로 인상하고, 노인일자리 확대(46.7만→51.0만명) 치매 국가책임제 등 핵심 국정과제를 차질없이 이행하면서, 스마트 헬스케어 육성과 국민체감형 사회서비스 일자리도 개발해 나갈 계획이다.

- 둘째, ②“국가책임 강화”를 위해 가정의 행복과 일·생활 균형을 지원하고, 장애인의 권익을 증진시키며, 건강보험의 보장성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믿고 맡길 수 있는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450개소)하고,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초·중·고등학생 온종일 돌봄 체계 구축을 추진한다.

- 장애등급제 폐지(19.7월)에 대비해 실행방안을 마련(6월)하며, 장애인 건강관리 의사 도입(5월) 등 장애인의 특성을 반영한 건강증진체계도 구축할 예정이다.

-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의학적 비급여(MRI·초음파 등)와 3대 비급여(특진·특실·간병)를 급여화하고, 저소득층(하위 50%)은 본인부담 상한액 인하, 재난적 의료비 지원 확대 등 지원을 강화해 나간다.

- 셋째, ③“지역사회의 포용 확대”를 위해 사회적 약자가 시설에 있지 않고, 지역사회에서 더불어 살 수 있는 선진국형 복지체계로의 전환에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 노인 의료·요양 체계를 지역사회 중심으로 개선하고, 장애인의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방안을 마련(11월)하며, 정신보건 사례관리시스템도 구축해 나간다.

- 또한, 동네의원 중심으로 만성질환 관리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전국 읍면동(3,503개)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농림축산식품부 】

- 농식품부는 2018년을 농업 대변화의 원년으로 삼아 '농식품 부문 일자리를 대폭 늘리고, 농업인 소득안전망을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 첫째, 농식품 부문에서 총 33천개(22년까지 17만개)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직간접 재정지원과 제도개선 등 정책수단을 총 동원한다.
 - 청년농업인 1,200명을 선발하여, 생활안정자금 지원(월 100만원)과 함께, 자금·농지·교육 등을 종합 지원하는 등 청년 창업농을 적극 육성한다.
 - 또한, 창업보육(100개소), 맞춤형 기술개발(R&D 바우처), 벤처펀드 지원 등으로 스마트팜 창업 생태계(창업-성장-제도전)를 구축하고,
 - * 스마트팜 (17) 4,000ha→(18) 4,510→(22) 7,000 / 스마트축사 (17) 750호→(18) 1,350→(22) 5,750
 - 식품·외식 창업희망자 대상 창업공간 제공과 청년들의 해외 취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청년 일자리를 확대한다.
 - 반려동물·산림·말산업 관련 각종 자격증 신설(애견행동교정, 나무의사 등)과 연계산업(펫사료 등) 육성으로 3만불 시대 일자리를 중점 발굴하고,
 - 1인가구 증가, 고령화 등 시장환경 변화에 맞추어 가정간편식(HMR), 바이오·고령친화식품 등 신규시장을 적극 창출해 나갈 계획이다.
 - 아울러 골든시드 프로젝트, 기능성소재 R&D, 곤충산업 클러스터 조성 등으로 종자·농생명소재·곤충 등 신산업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 둘째, 농업인의 소득안전망을 촘촘히 확충한다.
 - 채소가격안정제를 본격 확대*하고, 재해복구비 현실화**와 재해·농업인안전(10%) 보험료 인하로 농가 경영 안전망을 확충하고,
 - * 주요 채소에 대해 사전 수급조절 의무를 부과하고, 평년가격의 80%를 보장 : (17) 무, 배추, 마늘, 양파 / 생산량의 8% → (18) + 고추, 대파 / 10% → (22) 30%
 - ** (농약대) 채소류 30만원/ha→ 168, 과수 60→ 175, (대파대) 과채류 392→ 619 등
 - 농지연금 지급액 인상과 함께, 100원 택시(82개 전 군지역), 영농도우미(15천가구) 등 농촌 맞춤형 복지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 해양수산부 】

- 해양수산부는 “소득 주도 성장을 통한 글로벌 해양강국 실현”을 위한 다음의 3가지 정책과제를 보고하였다.
- 주력 해양수산업 일자리 안정화 및 새로운 분야의 일자리 창출
 - (해운·항만) 해양진흥공사(18.7 설립)를 통해 선박 신조(18년, 50척)를 지원하여 해운-조선 상생을 활성화하고, 항만 재개발 등에 2.2조원의 민자를 유치한다. 또한, 스마트해상물류체계* 구축으로 물류산업 경쟁력을 높인다.
 - * 자율운항선박·초고속해상통신망·스마트 항만 등을 연계하는 '스마트해상물류 구축전략 마련'(18.4)
 - (창업) 어업인 누구나 가입 가능하도록 어촌계 가입조건을 완화하고, 영어정착금(월100만원), 창업·주택자금(500억원)을 지원하여 청년 귀어를 확대한다. 수산모태펀드(150억원) 확대 등으로 소자본 벤처·창업도 활성화한다.
 - (관광·신산업) 창원에 거점마리나 항만을 착공(18.12)하는 한편, 한대만 크루즈 운항 본격화(18.上,3항차), 크루즈 인프라 확충(전용부두 9~12선석) 등으로 마리나·크루즈산업 재도약을 추진한다. 아울러, 갯벌·해조류 등 해양치유자원을 활용해 새로운 관광모델도 개발한다.
- 어가소득 5천만원 시대 개막
 - (생산혁신) 어린명태 방류(100만 마리) 등으로 사라진 어종을 회복하고, 고부가가치 어종인 참다랑어의 상업적 출하도 시작한다. 중국어선 불법조업을 강력히 단속(대형어업지도선 4척 추가투입)하고, 골재 중 바다 모래 비중 축소(17년 11%→22년 5%)로 해양생태계를 보전한다.
 - 고수익 품종인 김 양식규모 확대를 추진하고, ICT, IoT 기반 스마트 양식단지를 조성(특수목적법인 설립, 18년下)한다. 김에 이어 어묵 등을 수출효자 상품으로 육성하고, 수출가공클러스터 조성, 수출지원센터 확대(7개소→10개소) 등 수출지원 인프라도 확대한다.
 - (경영안정 및 복지확충) 조건불리수산직불제 적용범위를 수도권(現 육지에서8Km 이상 떨어진 도서)로 확대하고, 어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취득세를 감면하는 한편, 어업도우미 인건비 지원을 확대*하고, 어촌 지역 가사도우미 제도도 신설한다.

* 어업도우미 지원단가(일당) 인상(7→10만원/日), 자부담비율 인하(30→20%)

□ 「어촌 뉴딜300」사업으로 국민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제고

- 어촌·도서주민 경제활동의 핵심시설이자 생활공간이나, 도로·철도·항만 등 선진국 수준에 도달한 대형 SOC에 비해 낙후된 소규모 어항·포구를 국민소득 3만불 시대에 걸맞게 재창조하는 「어촌 뉴딜300」 방안을 마련한다.
- 개선이 필요한 300개의 소규모 어항·포구를 ① 해상교통시설 정비 ② 해양재난사고 대응 ③ 이용자 안전시설 보강 ④ 어촌관광 수요창출 등 4가지 유형별로 선정할 예정이다
- 해양수산부는 금년 상반기 중 지자체 및 관계기관간 협의를 거쳐 「어촌 뉴딜300 종합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국민안전(국민건강 확보)

2018. 1. 23.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환경부

보 도 자 료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하나 된 열정
하나 된 대한민국



보 도 일 시		2018. 1. 23.(화) 14시 이후 보도		배 포 일 시		2018. 1. 23.(화) (총 7매)	
담당자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과장	정 윤 순	순	044-202-2420	
			서기관	장 영 진	진	044-202-2404	
	식품의약품안전처	기획재정담당관	과장	정 용 익	익	043-719-1410	
			사무관	임 형 호	호	043-719-1406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재정담당관	과장	윤 원 습	습	044-201-1311	
		서기관	김 형 식	식	044-201-1317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	과장	이 시 원	원	044-200-5420	
			서기관	김 종 모	모	044-200-5425	
	환경부	기획재정담당관	과장	금 한 승	승	044-201-6330	
			서기관	전 원 혁	혁	044-201-6331	

국민안전 - 국민건강 주제 2018년 국무총리 정부업무보고

-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환경부 -

- ◆ (보건복지부)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 필수의료 강화, 국민이 안심하는 의료서비스 제공, 국민 생명·건강 위해요인 예방
- ◆ (식품의약품안전처) 먹거리·생활용품 불안 요소 선제적 대응, 건강취약계층 안전관리 강화, 첨단바이오·의료기기 규제체계 개선
- ◆ (농림축산식품부) 토양, 물, 농약 등 농장 안전관리 강화, 동물복지형 축산 전환, 건강·안전·안심으로 소비자·생산자와 소통 강화
- ◆ (해양수산부) 깨끗한 어장환경 조성, 사전 예방적 친환경 양식체제로 전환, 유통인프라 현대화 등 건강하고 안전한 수산식품 공급
- ◆ (환경부) 국가 지속가능성 제고 기반 마련, 국민 체감 환경 질 개선, 선제적·적극적 피해구제 서비스, 환경정보 공개 확대, 환경사업 혁신성장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1.23.(화) 세종컨벤션센터에서 국무총리에게 ‘국민건강 확보’를 주제로 올해 핵심정책을 보고하고 이에 대한 토의를 하였다.
- 오늘 업무보고는 국민들께서 안심하실 수 있도록 건강을 위협하는 각종 요소를 줄이고, 정부역량강화를 위해 부처 간 장벽을 해소하는데 역점을 두었다.
- 5개 부처가 함께 “국민 안전 - 국민 건강”이라는 같은 주제로 정부업무보고를 하게 된 것은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는 점에서 비롯된 것이다.
 - 각 부처는 정부의 핵심국정목표로서 국민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국가 책임 강화와 상시적인 시스템 마련 방안을 제시하였다.
- 특히 이번 연두업무보고에서는 건강 문제는 어느 한 부처만의 사항이 아니고 복합적인 요인이 상호 작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 착안하여, 국민 건강 중심 범정부적 통합 대응 체계(One Health*)가 논의되었다.
 - * 인간의 건강이 동·식물, 환경과 하나로 연계되어 있음을 인식하고 모두에게 최적의 건강을 제공하기 위한 지역적·국가적·전세계적 협력전략
 - 이는 사회 다변화, 세계화 등으로 인해 국민 건강·안전 위협 요인도 다양*해져 개별적·분절적 대응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고려한 것이다.
 - * (예) 항생제 내성(의약품), 미세먼지(환경), 가습기살균제·생리대(생활용품) 등
 - 이에 **One Health** 대응 체계 강화 방안으로서,
 - △평시 부처 간 소통 및 정보 공유 강화, △이슈 발생 시 신속한 합동 대응 및 역학조사, △사후 제도 개선, 보상, 평가 및 환류 등 각 단계별 협력 강화 방안이 제시되었다.

1. 보건복지부

- 먼저, 메르스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하여 감염병 대응체계를 보다 강화한다.
 - 감염병 유입 방지(검역 강화), 24시간 모니터링 및 즉각 대응체계 구축, 감염병 전문병원 및 음압격리병상 확충 등 방역 전 단계 역량을 높이고,
 - 실시간 감시시스템 마련, AI 활용 조기인지시스템 개발, 고위험 및 신변종 감염병 관련 백신 자체개발 등 R&D를 추진한다.
 - 결핵은 잠복결핵 검진(50만명), 고위험군 검진(12만명)을 통한 조기발견, 취약계층 지원 등을 통해 OECD 대비 높은 발생률을 대폭 낮춘다.
-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이용하는 필수의료를 강화한다.
 - 권역외상센터 지원을 강화하고 외상전문인력양성·수가체계를 개선하며,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확대(9→13개소)하여 외상·응급의료체계를 강화한다.
 - 재난의료는 매뉴얼, 교육, 전담인력 등을 통해 대비하고, 상황실 24시간 운영, 현장 출동 등 지원하고, 국가 재난트라우마센터를 설치한다.
 - 취약지 지역거점병원 등 필수의료 인프라를 갖추고, 공공의료 인력 양성을 추진하며, 상반기 내 공공보건의료 종합대책을 수립할 예정이다.
- 환자가 안심하고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나간다.
 - 먼저, 신생아 중환자실 단기 대책으로 신고·대응체계 개선, 인력·장비 등 인프라 강화, 적정 운영을 위한 수가 개선 등을 추진한다.
 - 환자안전사고 보고 및 주의경보 발령 활성화, 환자안전 개선활동 지원 등을 담은 제1차 환자안전종합계획('18~'22)을 마련, 추진할 계획이다.
- 국민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각종 요소를 예방한다.
 - 자살 예방 게이트키퍼 100만명을 양성하고 자살고위험군 발굴·개입 및 사후관리 체계를 갖추며, 자살시도자 사후관리를 확대한다.
 - 암검진 질 향상, 건강검진 확대를 추진하고, 금연문화 확산과 비만·음주 폐해 예방 및 지역사회 중심 건강관리를 지원한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먹거리와 생활용품 등의 기본 안전부터 확실히 지켜나갈 예정이다.
 - 농약과 항생제 등 유해물질 관리를 철저히 하고, 가정용 계란은 세척·잔류물질 검사를 거친 후 유통되도록 의무화한다.
 - 또한, 유해물질 분석·평가·개선 등 사전 예방관리체계를 공고히 하고, 사이버 감시기능을 강화하여 온라인 불법행위를 근절할 계획이다.
 - 긴급 위기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신속한 위기관단과 현장대응을 이루고, 국민 불안 해소를 위해 눈높이에 맞는 소통도 강화할 예정이다.
- 어린이·노인 등 건강 취약계층의 안전은 보다 세심하게 살필 계획이다.
 - 어린이·노인 등에 대한 공공급식 안전·영양관리를 지원하고, 혼밥·외식가구 증가에 대응하는 안전관리를 빈틈없이 해나갈 예정이다.
 - 생리대·화장품 등의 관리를 강화하여 여성건강 안심을 확보하고, 필수약품과 백신 공급기반 확충으로 치료기회도 확대할 계획이다.
- 첨단 기술을 활용한 바이오의약품, 의료기기가 안전성을 확보하면서 시장에도 신속하게 출시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첨단 제품의 출현에 대비한 새로운 허가·심사 체계를 마련하고, 사물인터넷 등 혁신기술이 반영된 첨단제품 심사가이드라인도 제공한다.
 - 안전이 확보된 고품질 제품이 개발될 수 있도록 기술지원이나 정보제공 등도 확대하고 글로벌 품질 경쟁력을 위한 국제협력도 강화한다.
- 국민과 함께 식·의약 안전을 만들어 가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 국민들이 실제로 불안을 느끼는 제품을 검사하고 결과를 알려주는 식품·의약품에 대한 '국민 청원검사제'를 운영하여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에 걸맞게 안전의 질도 높여나갈 예정이다.

3.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는 생산단계부터 안전·환경에 영향을 주는 요소를 철저히 관리하여 국민의 건강과 먹거리 안전을 책임질 계획이다.
- 첫째, 토양·물부터 농약까지 농장의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 오염 우려 농경지의 중금속 잔류조사를 확대하고, 수질이 악화된 저수지를 정화(18년: 252억원)하는 등 토양과 물을 안전하게 관리한다.
 - 농약이력관리제를 도입하여 농약 판매기록을 의무화*하고, 농약 판매인 자격요건 강화, 소면적 작물 농약 직권등록 등 PLS 도입을 준비한다.
 - * 모든 농약(현재 9종) 판매 시, 바코드 정보와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를 연계 관리
 - 친환경 인증에 대한 신뢰 제고를 위해 부실 기관, 위반 농가 제재를 강화하고 친환경직불금 단가인상과 친환경 자조금을 활용한 소비 촉진을 추진한다.
- 둘째,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동물복지형 축산으로 전환한다.
 - 악취 없는 축산업을 위해 분뇨처리매뉴얼 보급, 특별관리 농장에 대한 시설개선·건설팅 집중 지원 등 농장 관리를 강화한다.
 - 분뇨 공동자원화 시설을 확대하고 악취 측정기 설치를 의무화하는 한편, '10~'11년 조성된 가축매몰지(4,751개)를 '22년까지 소멸 처리할 계획이다.
 - 공장식 밀식사육 개선을 위해 7월부터 신규 산란계 농장에 넓어진 사육밀도를 적용하고, 기타 축종으로 확대해 동물 복지를 향상시킨다.
 - * 사육밀도, 암모니아 농도, 축사조명, 강제털갈이 금지 등 동물복지 기준 마련
 - 가금 밀집사육 지역은 농장간 거리가 500m 이상 되도록 재배치를 지원한다.
 - 아울러, 살충제 관리 강화, 산란계(대규모) 농장 HACCP 적용 의무화, 항생제 사용 절감 등으로 축산물 안전 관리를 대폭 강화해 나간다.
- 셋째, 건강·안전·안심으로 소비자·생산자와의 소통을 강화한다.
 - 초등학교 돌봄교실(24만명) 과일간식 제공, 천원의 아침밥(20개 대학) 확대와 함께, 농식품 바우처 도입을 위한 실증연구를 추진한다.
 - 국민 건강과 농가 경영비 절감에 기여토록 쇠고기 등급제를 개편, 마블링 중심의 등급 기준을 육색·지방색 등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
 - 지역 푸드플랜을 마련하여 지역 농업 생산과 소비를 연계하고, 생산·소비, 안전, 환경 등 국민 먹거리 종합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4.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부는 국민소득 3만불과 1인당 수산물 소비 세계 1위(60kg)에 걸맞게 건강하고 안전한 수산물을 공급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기로 하였다.
- 먼저, 오염물질이 어장에 유입되지 않도록 하수처리장 방류수 기준을 강화하고, 해양폐기물의 유입차단 및 오염퇴적물 정화를 추진하여 깨끗한 바다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 ‘해양공간계획법’을 제정하여 先계획 後이용 체계를 확립하고 양식어장 환경모니터링 강화, 패류어장 인근 하수처리시설 확충 등 연근해 어장환경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 또한, 친환경 양식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 사육수 정화처리시설, 고품질 배합사료, 우수종자를 개발·보급하여 질병발생의 사전 차단에 집중할 계획이다.
 - 첨단 ICT 기술 등을 통해 항생제 등을 사용하지 않고도 건강한 수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친환경 스마트양식 시범단지를 조성하고, 이를 확산시켜 나갈 예정이다.
 - 과밀양식으로 인해 질병 발생률 및 폐사율이 높아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 적정 사육밀도에 관한 기준을 만들어 양식현장에 보급하고 단계적으로 의무화시켜 나갈 계획이다.
- 아울러,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수산물 유통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다.
 - 안전성검사 강화, 수산용의약품 오·남용 방지, 수입 수산물 관리 강화를 통하여 출하 전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한다.
 - 그리고 노후 위판장 시설 현대화, 산지거점유통센터 확충(FPC, 3개소) 등 인프라를 확충하여 신선한 수산물 유통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 양식장 HACCP 등록 확대, 수산물 이력제 의무화 시범사업 실시 등으로 수산물 안전인증 시스템을 강화하여 국민들이 안심하고 우리 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5. 환경부

- 환경부는 '지속가능한 발전'이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전제 조건이라고 보고 국가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기반 마련에 주력할 계획이다.
 - 이를 위해 2030년 지속가능 발전 목표, 이행 전략·과제 및 평가지표를 연내에 마련하는 등 국가 지속가능성 평가체계를 구축한다.
 - 환경을 고려한 급전우선순위 조정, 에너지 세제 개편(부처협업), 환경영향평가 혁신, 국토-환경 정보 통합관리 등을 추진한다.
- 또한, 국민이 체감하는 환경 질 개선을 위하여 물 문제 해결, 체감 대기 질 개선, 화학안전망 구축 등을 추진한다.
 - 유역 기반 수량·수질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하여 물 문제를 해결하고, 국내 뿐 아니라 중국과의 협력강화로 미세먼지 저감을 본격 추진한다.
 - 화학물질 유해성정보 조기 확보, 살생물제 사전승인제 도입, 시장 감시 등 제조·수입, 생산, 유통 전 과정에서 빈틈없는 화학 안전망을 구축한다.
- 국민 중심의 정책 추진을 위해 공장 입지단계부터 건강영향을 평가하여 선제적으로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발생 시 적극적으로 구제한다.
 - 국민의 안전과 건강에 영향을 주는 환경 정보(석면, 미군기지, 수돗물, 환경영향평가 등)는 선(先) 공개 원칙을 적용하고 공개 범위를 늘린다.
- 또한 환경사업의 혁신성장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든다.
 - 하수처리장을 활용한 주민참여형 태양광 사업 등 새로운 사업 모델을 발굴하고, 자연친화적인 청색기술 개발 등으로 환경산업을 육성한다.

A grayscale photograph of dandelions. In the foreground, two large, fluffy seed heads are visible. Several seeds with their characteristic parachutes are shown in mid-air, drifting upwards and to the right against a light gray background. The overall composition is clean and minimalist.

Ⅱ. 2018년 업무계획

1. 2018년 주요 업무계획

2018년 주요 업무계획

= 걱정없이 농사짓고, 안심하고 소비하는 나라 =

2018. 1.



농림축산식품부



목 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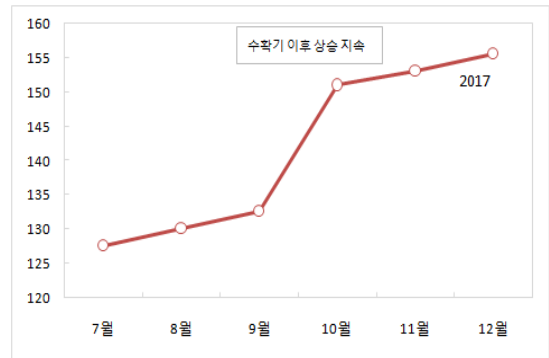
I. 2017년 농정 평가	89
II. 2018년 업무추진 여건	92
III. 2018년 농정 추진방향	95
1. 농정개혁을 넘어 농업 대변화 추진	95
2. 2018년 중점 추진방향	96
IV. 주요업무 추진계획	97
1. 농산물 가격안정과 농가 경영안전망 확충	98
2. 농식품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토대 마련	110
3. 국민이 안심하는 농축산물 생산과 환경 관리	126
4. 누구라도 살고싶은 농촌 조성	143
5. 참여와 협력의 농정 거버넌스 구축	152
[붙임] 2018년,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158

I. 2017년 농정 평가

- ◇ '17년에는 쌀 조기격리 등 현장 중심의 농정 추진으로 신뢰를 회복하고, 향후 5년간의 국정과제 추동력 확보에 주력
 - 예기치 못한 살충제 계란 사태, 외래 붉은 불개미 발견 등의 위기 상황에도 적극 대응
- ◇ 주어진 예산과 정책 환경 하에서 과거와는 다른 신속한 의사결정과 과감한 선제 조치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농정 성과 창출

□ (쌀 시장 안정) 한 발 빠른 대처로 20년전 수준에 머물던 쌀 값 회복

- 역대 최초 햅쌀 가격 형성前 수확기 대책을 발표(9.28)하고, '10년 이후 최대 시장격리 물량(37만톤) 등 총 72만톤 정부매입



* ('17.6월) 126,767원/80kg(최저) → (10월) 151,013 → (11월) 153,048 → (12월) 155,579 → ('18.1.15) 158,712

- 식량원조협약(FAC) 가입으로 국격을 제고하고, 국산 쌀 약 5만톤 해외 원조로 쌀 수급안정 효과 기대

* 5만톤 원조 시, 1만 ha의 농지 휴경 효과

□ (갈등 해결) 쌀 우선지급금 환급, 용산 화상경마장 등 갈등 해소

- 적극적인 현장 소통으로 '16년산 우선지급금 환급사태를 둘러싼 정부·농업인 단체 간 갈등을 원만히 해결

* 농식품부-농업인단체-농협간 협약(8.24)을 통해 우선지급금 환급 해결방안 마련

- 사회적 타협을 통해 4년 이상 지역주민 등과 첨예한 갈등을 빚어온 마사회 용산 장외발매소 폐쇄('17.12월)

* 대전 월평동 장외 발매소도 이전부지 선정이 안 될 경우(~'21년 1분기) 선 폐쇄

□ (소비기반 확대) 농산물과 가공식품의 선물비 가액기준을 조정(청탁 금지법 시행령 개정)* 하여 소비촉진 도모

* 농수산물과 농수산물이 50% 넘게 포함된 가공품의 선물비 상한액 상향 (5만원→10), 경조사비는 5만원으로 낮추되 화환 포함 시 10만원까지 허용

- 농산물 가공품의 원재료 비율을 확인할 수 있는 스티커 부착, 품목별 소비촉진 대책 마련 등 후속 조치 추진

□ (재해대응) 가뭄 등 자연재해를 극복하고, 재해 복구 지원 강화

- 영농기 극심했던 가뭄을 극복하기 위해 범정부 협업, 추경예산 편성·지원 등 총력 대응으로 가뭄 피해를 최소화

* 가용 장비, 인력(26천명)과 예산(국고 1,162억원, 지방비 1,698) 집중 지원

- 재해피해 발생시 복구비 지원(대파대·농약대) 단가를 실거래가의 66%(현행 52%) 수준으로 인상

* (농약대) 채소류 30만원→ 168, 과수 63만원→ 175, 일반작물 22만원→ 52 (대파대) 업체류 297만원→ 410, 과채류 392→ 619, 일반작물 220만원→ 266 등

□ (위기관리) 살충제 계란 사태, AI 발생 등 위기 상황에 신속 대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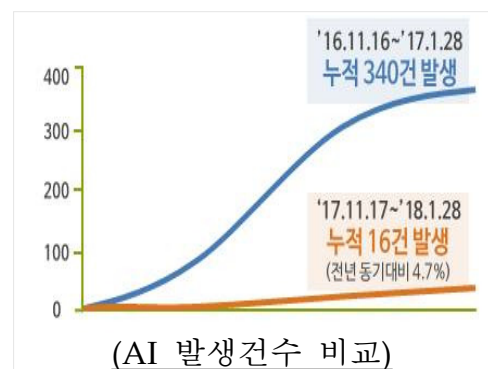
- 계란에서 살충제 검출 즉시 모든 농장의 출하를 금지하고, 전수 검사 실시와 폐기조치 등으로 조기 수습

*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관계부처 합동 ‘식품안전개선 종합계획’ 수립

- 붉은 불개미 발견(9.28) 즉시 긴급 방역조치를 하였고, 관계부처 합동 예찰체계를 강화

- 상시예찰 과정에서 AI를 발견하고, 농가 이동통제, 예방적 살처분, 이동중지 등 초동방역 조치로 확산 방지

* AI 위험이 높은 지역의 오리 사육제한 확대(전체 사육두수의 37% 수준)



□ (축산 공정거래) 축산업의 투명한 경쟁 구조 정착을 위한 대책 마련

- 닭고기의 유통구조 투명화, 공정한 가격형성 유도, 소비자에게 정확한 가격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닭고기 가격공시 시행
- 농가의 권익보호와 협상력 제고, 불공정행위 감시 강화 등을 위해 '축산계열화 사업 불공정 관행 근절대책' 마련('17.9)

□ (현장농정) 농정개혁위원회 운영, 농식품부 전 직원의 현장 소통 업무체계 구축 등 농업인과 국민의 입장에서 농정개혁 추진

- 농개위를 총 21회 개최하여, 농업 재해 대응, 수확기 쌀 수급안정, 축산업 근본대책 등 개혁과제를 발굴하고 대책 마련
- 농식품부 쏠 직원이 총 137개의 현장 건의를 수렴하여 정책을 개선하고, 성과 우수사례 확산(발표회, '17.12)

※ (보완할 사항) '17년은 쌀 값 회복, 살충제 계란 사태 등 당면 현안 해결에 집중한 결과, 미래 농업을 위한 근본적 개혁 추진 미흡

- 쌀 값 회복을 넘어 작부체계 전환, 발작물 자급률 제고 등 종합적인 식량 생산 체계 개혁 필요
- 살충제 계란 사태로 촉발된 인증제의 국민 신뢰 저하 문제, 밀식 축산 사육환경 문제 등의 근본적인 해결 요구
- 평창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취약대상 예찰, 사육 제한 등 촘촘한 예방 방역과 과감한 현장대응으로 AI 확산 차단

Ⅱ. 2018년 업무추진 여건

□ (농식품산업) 농림업 생산액은 지난 3년간 감소*한 반면, 식품 산업은 10년간 연평균 7.7% 수준 성장('06: 98.1조원 → '15: 192.0)

* 농림업 생산액 : ('13) 51.9조원 → ('14) 51.6 → ('15) 51.4 → ('16) 49

□ (시장개방) 미국, EU 등과 기 체결한 FTA의 관세감축 효과가 본격화 되고, 추가적인 농산물 개방 요구도 상존

* '17년 기준, 한미('12년 발효), 한EU('11), 한중('15) 등 15건의 FTA(52개국) 발효

○ FTA 확대 이후 농림축산물 수입액 증가 추세

* 농림축산물 수입액 : ('04) 112억불 → ('08) 201 → ('12) 294 → ('16) 297

* FTA 체결국으로부터 수입액은 우리나라 농산물 총 수입액의 82.7%('16년)

○ 한-미 FTA 개정협상, 한-메르코수르 협상 등 추가 개방 압력 우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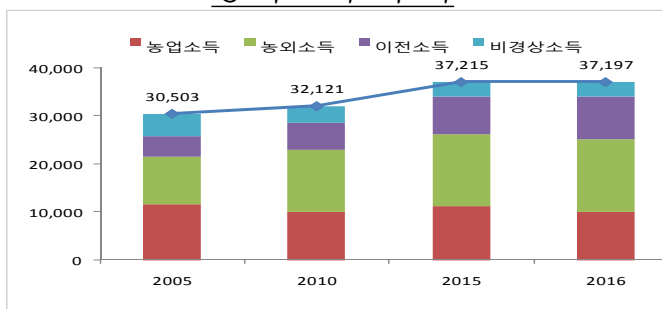
□ (농가소득) 농외소득과 이전소득은 증가한 반면, 농업소득은 정체

○ 도시근로자가구 소득 대비 농가소득 비율은 63.5%로 도농간 소득격차 여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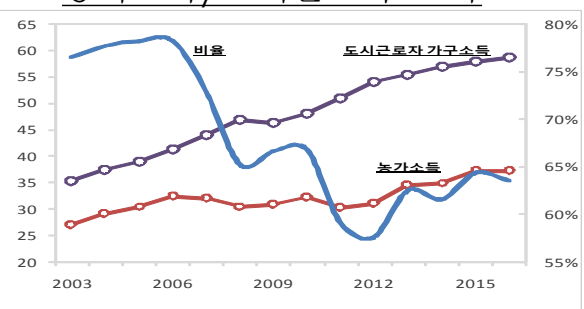
* 도시근로자가구 대비 농가소득(%) : ('05) 66.8 → ('13) 62.4 → ('16) 63.5

○ 다만, 70세 미만(전체농가의 61%) 농가의 소득(연 4,859만원)은 도시근로자가구 소득 대비 81% 수준

농가소득 추이



농가소득/도시근로자 소득



- (고령화) 도시화·산업화에 따른 청년층 이농으로 농가 고령화 심화
 - '16년 기준 40세 미만 경영주 농가는 전체 농가 107만호의 1.1%, 40세 미만 농가 인구는 19.1%로 급감(65세 이상 농가 인구 53.1%)
 - 한편, 귀농·귀촌 활성화 등으로 농촌(읍·면)인구가 증가세로 전환('10: 8,758천명 → '15: 9,392)되어 농촌 활력 창출에 기여
 - * 귀농 / 청년귀농 : ('15) 11,959가구 / 1,150가구(9.6%) → ('16) 12,875 / 1,340(10.4%)

 - (정주여건) 도시에 비해 생활여건이 취약하고, 농촌다움(Rurality)도 훼손
 - 도로 등 기초인프라 개선에도 교육·문화·의료 등 서비스 다양성, 접근성 부족으로 체감 삶의 질은 도시에 비해 낮은 수준
 - 개별 농산지 전용, 공장입주 등 난개발로 농촌의 환경·생태적 가치 훼손

 - (식품안전) 안전하고 품질 좋은 먹거리에 대한 관심과 요구 증가
 - 계란 살충제 검출 사태 이후 농식품 안전 관리, 농축산물 사육·재배환경에 대한 국민의 눈높이가 크게 높아진 상황

 - (환경) 생산 증대를 위한 과도한 투입재 사용 등으로 환경부담 증가
 - 과다 비료 사용 관행으로 질소·인 등 토양 영양과다 문제 발생
 - 밀집된 축산사육 형태는 분뇨로 인한 토양·수질 오염과 악취 문제를 야기하고, 가축질병에도 취약해 높은 사회적 비용 야기
 - * 질소·인 양분 불균형, 농경지 대비 가축 사육두수는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
- ◇ 시장개방 확대, 소비감소 등에 따라 양적인 성장 전략에 한계
 - 4차 산업혁명 기술과의 융복합 등을 통한 새로운 성장 전략 필요
 - 농업인의 경영안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사람중심 농정으로 전환
 - ◇ 농업 후계인력 부족과 환경오염은 농업의 지속가능성 저해
 - 청년 농업인 유입 확대, 환경 부담 저감 등 지속가능성 제고 필요

< 2018년 국민들이 바라는 농정 >

◇ '18년 국민들은 소득·가격 안정, 안전·품질관리 강화, 혁신성장, 쾌적한 농촌 공간 조성을 핵심 농정과제로 인식

- 농업인·도시민 모두 농산물 가격안정과 유통 혁신을 가장 중요한 농정과제로 인식
- 이외에 농업인은 소득 및 경영안정, 도시민은 농축산물 안전·품질관리 강화에 높은 관심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농정과제>

(농업인)			(도시민)		
순위	정 책	비중	순위	정 책	비중
1	농산물 가격안정과 유통혁신	19.2%	1	농산물 가격 안정과 유통혁신	17.6%
2	직불 중심 농정으로 전환	15.2	2	안전, 안심 먹거리 공급체계	16.9
3	농가 경영안전망 확대	14.0	3	농축산물 안전·품질관리 강화	15.5
4	농업·농촌 기반 일자리 창출	7.9	4	농가 경영안전망 확대	7.8
5	안전, 안심 먹거리 공급체계	7.1	5	농업·농촌 기반 일자리 창출	7.7
6	농축산물 안전·품질관리강화	5.4	6	먹거리 복지 실현	6.7
7	농촌 주민 삶의 질 제고	5.3	7	농식품 혁신성장 역량 강화	5.6
8	환경보전형 생산시스템 구축	5.1	8	농촌 주민 삶의 질 제고	5.4

* '17년 10.30~11.30 농업인 936명, 도시민 1,500명 조사 결과(농촌경제연구원)

◇ 농업인은 일손 부족(16.6%), FTA 등 개방 확대(14.6%)와 농업 생산비 증가(14.0%)를 농업 경영의 위협 요인으로 인식

Ⅲ. 2018년 농정 추진방향

1. 농정 개혁을 넘어 농업 대변화 추진

- '18년은 농정개혁을 넘어 농업 대변화를 준비하는 원년
 - 기존의 정책수단과 방법들을 재검토하여 농업인이 체감할 수 있는 과제부터 단계적으로 개편
 - 소득 3만불 시대를 맞이하여 우리 삶 속에서 농업의 역할과 기능이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농업·농촌의 가치를 재정립
 - 식품안전, 깨끗한 환경 등 소비자가 요구하는 가치들을 실현할 수 있도록 농식품산업의 체질 개선

- 농업 대변화를 위해 농정의 패러다임을 전환
 - (농정가치) 농업활동을 통한 '생산물' → '사람' 중심의 농정
 - ⇒ 농업인의 소득과 삶의 질,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중시
 - (농정방향) '농업 생산성' 제고 → '지속가능성', '혁신'에 중점
 - ⇒ 농업 혁신역량을 강화하면서, 환경 친화적 생산과 안전 먹거리 제공으로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 확보
 - (농정체계) '중앙정부 주도' → '현장 중심'의 '참여와 협력'
 - ⇒ 현장 목소리가 농정에 충분히 반영되도록 민관 협력 농정체계 구축
 - (투융자방향) '쌀', '규모화된 농가', '물적자본' 중심 → '품목 다양화', '청년과 취약계층', '인적자본' 투자로 단계적 전환
 - ⇒ 쌀 수급안정을 통해 재원을 확보, 다른 품목에 대한 정책지원, 영세농 사회안전망 확충 및 농업인 역량강화 지원 확대

2. 2018년 중점 추진방향

① 농산물 가격안정과 농가 경영안전망 확충

- 강력한 생산조정과 소비촉진으로 쌀 수급을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고, 가격안정 시스템 도입으로 농산물 전반의 수급안정 도모
- 직불금 단가를 인상하고, 공익형 직불제 확대 개편
- 재해 복구비 지원과 농업재해보험·농업인안전보험 강화

② 농식품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토대 마련

- 청년 영농창업 지원, 스마트팜 확산 등 농산업 혁신 생태계 조성
- 가축질병 방역 체계와 축산사육 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
- 농업과 식품산업 연계 강화, 맞춤형 기업지원으로 수출 확대

③ 국민이 안심하는 농축산물 생산과 환경 관리

- GAP, HACCP, 인증제 개편 등 농축산물 품질·안전 관리 강화, 축산환경의 근본적 개선과 악취, 분뇨 등 환경부담 저감
- 학교 과일간식 및 농식품바우처 시범운영, 식생활 교육 등으로 국민 식생활 개선과 영양 증진 도모
- 지역 내 생산-소비를 연계하고, 먹거리와 관련된 아젠다를 포괄하는 푸드플랜 수립

④ 누구라도 살고싶은 농촌 조성

- 읍면 중심지 활성화, 농촌자원 복원 등으로 소득 3만불 시대에 걸맞는 아름답고 쾌적한 농촌 공간 조성
- 교통·의료·주거 등 생활여건 개선과 농업인 사회안전망 확충
- 융복합 산업 고도화, 사회적 경제 육성 등으로 농촌 지역경제 활성화

IV. 주요업무 추진계획

비
전

걱정없이 농사짓고, 안심하고 소비하는 나라
- 농정개혁을 넘어 농업 대변화의 원년 -

중
점
추
진
과
제

농산물 가격과
농기경영 안정

- ① 쌀 등 식량 작물 생산체계 개편
- ② 농산물 수급안정과 유통효율화
- ③ 공익형 직접지불제 확대
- ④ 자연재해·사고로부터의 안전망 확충

농식품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 ① 농식품·농산촌 분야 일자리 창출
- ② 청년 농업인 육성
- ③ 스마트 농업 확산 등 성장동력 확충
- ④ 세계와 경쟁하는 식품산업 육성

국민 안심
농축산물 생산과
환경 관리

- ① 농산물 품질·안전 관리 강화
- ② 축산사육환경과 방역체계 혁신
- ③ 농축산업으로 인한 환경부담 저감
- ④ 국가·지역 푸드플랜 운영
- ⑤ 균형잡힌 국민 식생활 지원

누구라도 살고
싶은 농촌

- ① 3만불 시대, 살고싶은 농촌재생
- ② 농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
- ③ 사회적 경제 등 지역경제 활성화

추
진
체
계

참여와 협력에
기초한 농정

- ① 참여·현장 농정 추진체계 구축
- ② 지방과의 협력 농정 강화
- ③ 현장과 혁신의 FIRST 농정 추진

1. 농산물 가격안정과 농가 경영안전망 확충

1 | 쌀 등 식량작물 생산체계를 시장 수요에 맞게 바꾸겠습니다.

“ 가 , , 가 . ”

➔ 쌀 중심의 수급 정책을 쌀 소비 촉진, 밭작물 자급률 제고와 농지 이용 효율화가 종합 연계된 식량작물 생산 안정화 정책으로 전환

- * 밭작물 자급률 : ('16) 9.6% → ('18) 13.7 → ('22) 17.7
- * 벼 재배면적 : ('17) 755천ha → ('18) 705 → ('19) 655

구 분	현 행	개 선
쌀수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벼 위주 논 활용, 쌀 공급과잉 구조 ○ 식생활 변화 등에 따른 쌀 소비 감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논에 타 작물 재배를 유도하고 밭작물 자급률 제고 등 식량작물 생산안정화 ○ 소비패턴 변화에 맞는 쌀가루 및 쌀가공 산업 육성
품질 고급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수확 위주의 품종 재배법 유통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질 중심의 생산·유통 기반 조성 , 고품질 쌀 소비여건 조성
농지 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벼 중심의 농지 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지 제도와 농지은행 개편을 통해 농지이용 다변화 도모

[쌀 수급안정]

-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을 도입하여 벼 재배면적 5만ha 감축
 - 쌀에서 타작물로 전환 시 평균 340만원/ha*을 보전하고, 조사료·지역특화작물 중심으로 추진하여 타작물 수급 영향 최소화
 - * 평균 단가 내에서 품목별 소득차, 영농편의성 등을 감안하여 단가 차등화
 - 2~3모작 작부체계 개발·보급, 기계화 촉진 등 연계 지원

□ **쌀 가공 산업 육성 등 쌀 소비 패턴 변화를 고려한 수요확대 지원**

* 「제2차 쌀 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촉진 기본계획('19~'23)」 수립('18)

○ **식생활·가구형태·소비패턴 변화 등을 감안한 소포장(5kg 이하) 유통**

* 소포장 유통 시설 확충 및 소비자 편의성을 높일 수 있는 포장 개발 등

○ **안정적 원료 공급을 위한 가공용쌀 특별공급(가격할인) 지속, 쌀가루 전용품종·제분기술 개발 등으로 쌀의 활용도 제고**

* 농협과 연계하여 쌀가루 판매사업 체계화, 규격 표준화 및 홍보·교육 강화

□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차기('18~'22년산) 목표가격 인상 추진**

○ **관련 법령(농업소득보전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을 거쳐 정부안 제출 및 국회 동의 절차 추진(개정안 법사위 계류 중)**

* 물가상승률 반영에 따른 시나리오별 효과분석, 의견수렴(공청회·토론회 등)을 통해 사회적 갈등 최소화

[품질 고급화]

□ **벼 품종 개발과 보급 방향을 다수확에서 품질 고급화로 전환**

○ **벼 유전자원 연구를 통해 밥맛, 특수성분 함유, 기능성 등 다양한 품질 목표 설정하고, '중장기 벼 품종 육성 방안' 마련(3월)**

* 농진청, 도 기술원, 학계, 업계 등 민·관 합동 '벼 품종 전문가 TF' 구성·운영

○ **정부 보급종에서 다수확 품종 비중 축소 및 고품질 종자공급 확대**

* 다수확 품종 비중 : ('17) 35% → ('18) 27 → ('19) 20

□ 벼 계약재배 확대, 재배방식 개선 등 생산단계 품질 개선

- 규모화·단지화된 RPC·들녘경영체 등을 중심으로 고품질 벼 계약 재배 확대('17: 17천ha → '18: 20)
- 공공비축미 매입 시, 친환경 벼 시범 매입, 단백질 검사 기준 도입 및 지역별 대표 고품질 품종 매입 확대
- 친환경 벼 재배 확산 유도 및 질소 시비량 감축 등 품질 중심 재배매뉴얼 보급·교육 강화(3高3低 운동 전개)
 - * (3高) 밥맛, 완전미 비율, 쌀소비 / (3低) 질소질 비료, 재배면적, 생산비

□ 고품질 쌀 유통 활성화 및 수확 이후 품질 관리 강화

- 소비자가 맛 좋은 쌀을 선택할 수 있도록 등급기준을 개선하고 소비권장기한(Best before date) 도입검토 등 표시제 강화 추진('18.하)
 - * 싸라기 등 품위기준 및 단백질함량, 품종표시 등 품질 기준 표시 강화
 - * 쌀 등급 중 '미검사' 삭제 시행('18.10.14. 이후)
- 단일품종, 우수등급 쌀에 대한 지원 강화(RPC 물량배정 확대 등)로 수확 후 고품질 쌀 가공·유통 확대 유도

□ 쌀 품질에 대한 인식 제고 등 고품질 쌀 소비여건 조성

- 쌀 품질 관련 다큐 제작, 대량 수요처(학교·단체급식 등)의 쌀 품질 표시(등급, 품종 등) 유도 등 추진
- 쌀 가공식품 품질 제고를 위한 정부양곡 원료공급 시스템 개선
 - * 도정공장 책임가공제, 정선절차 강화, 탱크로리 등 벌크공급 도입 등 검토

[발작물 자급률 제고]

- 쌀 생산조정에 따른 콩 생산 확대에 대비하여 수요 확대 추진
 - 콩 정부수매량을 확대하는 한편, 수입량(TRQ 증량)은 최소화하고, 작황 등을 고려하여 '18년 수확기 추가수매(5천톤) 검토
 - * 정부수매량 : ('17) 30천톤 → ('18) 35~40 / 대두 TRQ 증량 : ('17) 53천톤 → ('18) 30
 - SPC* 선별·판매를 통해 수매 콩 품질을 제고하고, 공공기관(군·학교 급식) 등 대량 수요처 중심으로 국산 콩 소비 확대
 - * 콩 유통종합처리장(SPC) : 괴산, 문경, 파주 등 3개소 운영
- 밀 자급률 제고를 위한 '국산 밀 중장기 발전 방안' 마련('18.2월)
 - 용도별 품종개발, 정부보급종 공급 확대로 품질을 향상하고, 대량 수요처 확보와 국산밀 의무자조금 도입 등 추진
 - * 국내 환경 적응 초강력분 품종 육성 과제 수행('18~'21, 농진청)

[농지 이용 효율화]

- 벼 중심의 농지 이용을 다변화하기 위한 농지 제도개선
 - 시설농업, 다년생식물재배지 등으로 이용되는 농지의 임대차기간 연장(현행 최소 3년→ 5년)을 위한 농지법 개정 추진('18.하)
 - 주로 벼 재배지로 활용되는 간척지 중 염해지역에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설치가 가능하도록 일시사용 허용('18.하)
- 쌀 수급안정, 청년농 정착지원 촉진을 위한 농지은행 개편
 - 논 타작물 재배 확대를 위해 공공임대용 농지(논)의 타작물 재배 의무기간을 현행 2년에서 5년으로 연장(1월)
 - * 벼 이외 작물 재배 시 임대료를 최대 80%까지 감면하는 혜택 부여

2

수급안정 제도 강화 등으로 농산물 가격을 안정시키겠습니다.

“ , 가 10
가 . 가 . ”

➔ 5대 채소 중심의 가격안정제를 넘어 경영비 수준을 보전해줄 수 있는 사전적 가격안정시스템 구축과 유통 혁신

* 채소가격안정제 물량 : ('17) 생산량의 8% → ('18) 10 → ('22) 30

* 원예농산물 통합마케팅 취급액 : ('17) 3.7조원 → ('18) 3.9 → ('22) 5.0

구분	현 행	개 선
관리 대상	○ 5대 채소 위주	○ 과수·과채, 기타 품목까지 확대
주체/ 시점	○ 정부주도의 사후적 수급대책	○ 정부·지자체·생산자가 함께 수급 조절에 참여 사전적·선제적 대책
도매 시장	○ 경매중심 거래로 가격변동 완화 한계	○ 이미지 경매 등 거래제도 다양화 및 도매시장 경쟁체제 도입

[원예농산물 가격안정시스템]

□ 정부, 생산자단체, 관측기관 등이 참여하는 주산지 중심의 사전적 수급조절체계 마련

○ 생산·출하 조절을 위한 중앙주산지협의회(노지채소, '17: 4개 품목 → '18: 11개 품목*)와 과수·과채 의무자조금 확대('18년 3개 품목)

* ('18년 추가) 고추, 대파, 생강, 당근, 토마토, 풋고추, 참외

○ 채소가격안정제 대상 품목·물량 확대(고추, 대파 추가, '17: 8% → '18: 10)

* 계약물량의 50%까지 재배면적, 출하량 조절 등 이행의무를 농업인에게 부과하되, 농산물 가격을 평년의 80% 수준까지 보장

- 수급조절 결정의 **정확성·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한 지원 강화
 - 빅데이터 기반 수급예측모델(BIGFOS), 드론 등 첨단기기 활용으로 농업관측 고도화
 - 과거 재배면적, 소비트렌드 등을 고려한 적정 재배면적을 산출하여 생산량 조절을 유도하는 **생산예보제** 도입
 - 생산단계(과종·정식·생육·출하)별로 매뉴얼을 마련하고, 위기단계 기준 **재설정***과 **대상 품목 확대**(‘17: 5개 품목 → ‘18: 8개)
 - * 수급조절매뉴얼 상 ‘하락심각’ 단계에 생산중단가격(생산비+출하비 수준)을 반영하여 폐기 등을 통한 가격안정 도모

- 원예농산물 가격이 급락할 경우에도 최소한 **품목별 경영비 수준을 보전**하여 지속가능한 영농을 보장하는 방안 검토(‘18.하)
 - * 품목선정 기준, 지원방식, 지원수준 등에 대한 연구용역 추진

[유통 효율화]

- (산지) 교섭력 강화를 위한 **기초 생산자조직 육성과 통합마케팅 확대**
 - 공선·공동출하회 운영 우수 조직에 대한 자금지원 확대, 참여 농업인 **출하물량 APC 우선 취급** 추진
 - * 농협 공선출하회·공동출하회 육성(누계) : (‘17) 2,405개 → (‘18) 2,500
 - 인센티브 지원 등으로 **통합마케팅조직 확대**(‘17년 110개→ ‘18년 115), 참여조직 **출하비율 확대**(‘17년 출하액의 40%→ ‘18년 42)
 - * 신규 통합마케팅조직 대상 산지유통활성화 금리인하(0.5%p), 3년 연속 통합마케팅출하율 부진조직(15% 미만)은 산지유통활성화(융자) 지원 중단
 - 농협 경제지주의 품목단위 판매연합 조직을 단계적으로 **육성**하여 생산자 가격교섭력 강화 및 책임판매 실현
 - * (‘17) 2품목(마늘·토마토) → (‘18) 5품목(풋고추·양파 등 추가)

□ (도매시장) 거래제도 다양화와 경쟁체제 도입을 위한 기반마련

○ 견본·이미지경매 등 ICT 기반 **상물분리**(商物分離)거래 확대('18.하)

* 전북지역 도매시장 등 희망 지자체 대상 실행방안 협의 후 추진

○ 가락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에 맞춰 **시장도매인제 조건부 검토**

- 공정성·투명성 확보, 기준가격 훼손, 경매위축 등 시장도매인 도입 **선결과제 해결방안 확보** 후 추진(~'20)

○ 도매시장법인 평가 환류조치 강화, 법인 지정 시 공통조건(파레트율, 안전성 검사 등) 마련 등 평가제도 개선('18.상)

※ 도매시장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급변하는 농산물 유통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5년 단위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18.12)

* 주요내용: 환경분석, 발전전략, 유통관계자 역량강화, 시설현대화 계획 등

□ (직거래) 중소농 판로 확보를 위해 **유형 다양화** 및 **온라인 접근성 강화**

* 직거래규모 : ('17) 3.2조원 → ('18) 3.3조원 → ('22) 4.2조원

○ 대도시형 직매장, 1도 1대표장터 등 **농산물직거래 모델 개발**(각 1개소)

* (대도시형 직매장) 특별·광역시 등에서 운영되는 거점형 로컬푸드 직매장 (1도 1대표 브랜드 장터) 지자체 주관, 도내 생산 농산물 직거래 장터

○ 온라인 전문협력사(벤더) 협의체를 구성하여 우수 농가 발굴, 주요 오픈마켓(옥션, G마켓 등) 기획전 등 농식품 판로 지원(2억원)

○ 농가, 영농조합법인 대상 **모바일기반 쇼핑몰 제작·보급**(5개소)

* '16년 농축수산물 온라인 쇼핑몰 판매액 비중 : 인터넷 45%, 모바일 55%

3

공익형 직접지불을 확대 · 개편하겠습니다.

“ , . ”
가가

➔ 소득 보전 중심의 직불제를 공익형 직불제로 확대 개편

* 밭 직불금 단가(만원/ha) : ('18) 50 → ('19) 55 → ('22) 70

* 직불제 개편 연구 및 이행계획 마련('18) → 개편안 확정 및 법령 개정('19~'21) → 시행('22)

구분	현 행	개 선
정책 방향	○ 개방화에 따른 소득보전	○ 환경보전 등 의무를 강화하고, 공익 창출 효과를 보상
직불 단가	○ 밭 고정직불금 50만원/ha ○ 조건불리직불금 농지 60, 초지 35	○ 밭 고정직불금 55만원/ha ○ 조건불리직불금 농지 65, 초지 40

[직불제 개편]

□ 환경·사회적 공익을 창출하는 농업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직불제 개편 방안 마련('18.하)

○ 직불제로 지원하는 공익의 수준(개념)*을 명확화하고 공익 창출 (public goods)의 세부 내용을 구체화

* 공익개념(안) : 현재 관행농업 방식을 개선함에 따라 발생하는 공적 편익

* 공익수준(안, EU 등 사례) : (기본공익) 환경·안전 등과 관련된 기초 의무

(부가적 공익) 유기농, 경관창출 등 특별한 공익

○ 쌀고정·밭고정·조건불리 직불을 '22년까지 통합하는 한편, 환경보전 등 상호준수의무*를 부과(기본공익)하고, 지원 확대

* 농업 생산과 관련한 환경·사회적 의무를 농업보조 지급 조건으로 부과

- 부가적 공익창출을 위해 **특정목적형 프로그램** 방식 도입
 - * (예시) 친환경·경관보전 직불 등을 (가칭)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으로 통합 운영
- 차질없는 **직불제 개편(~'22년)**을 위한 **연차별 이행계획** 실행
 - * ('18) 개편방안 마련 → ('19) 농업환경프로그램 도입 → ('20~21) 관계 법령개정 → ('22) 공익형 직불 전면 시행
- **밭 고정·조건불리직불 단가 인상은 지속 추진***(ha당 5만원)하고, **변동 직불제는 쌀 적정생산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개편 추진**
 - * (밭) '17년 : 45만원/ha→ '18년 : 50 / (조건불리) 농지 55→ 60, 초지 30→ 35
- 변동직불제의 생산연계성을 완화하여 논에 타작물 재배를 유도하고, 중장기적으로 벼 수입보장보험을 도입하는 방안 등 검토
 - * 연구용역 추진(~'18.7), 전문가·농업계 등 의견수렴('18.8~)

[직불금 조기지급 및 사후관리 강화]

- 직불금 조기지급에 대한 현장의 요구(수확기 지출수요, 명절준비 등)를 반영, **11월 이후 지급하던 쌀·밭·조건불리직불금 9월에 지급**
 - 이행점검 분산 추진*, 스마트팜 활용 등으로 이행점검 조기완료
 - * (현행) 6~9월 → (개선) 논이모작 : 3~4월, 밭고정·조건불리 : 5~6월, 쌀 : 6~8월
- 직불금 부당수령 방지대책 추진 등으로 **제도의 신뢰성 확보**
 - * 최근 3년 간 부당수령 건수 : 856건 (착오·과실 682, 국유지 계약 미체결 144)
- 신규·관외경작자 등 **실경작 확인 강화**, **신고 포상금 확대** 및 **부정신청자 제재강화** 등 추진('18.상, 「농업소득보전법」 시행령 개정)

4

자연재해와 사고로부터 안전망을 확충합니다.

“ 가

가 ”

➔ 자연재해·안전사고의 예방과 사후 지원을 강화하고, 안심하고 농사지을 수 있는 농업 기반 정비

*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 ('17) 30.1% → ('18) 33 → ('22) 40

* 수리안전답률 : ('17 잠정) 61.4% → ('18) 62 → ('22) 66

구 분	현 행	개 선
재해 복구	○실거래가의 52%	○실거래가의 66%
재해 보험	○시·군간 보험료를 격차가 과다 ○대상품목(농작물) : 53개	○보험료를 상한 설정으로 격차 완화 ○품목확대 : 57개
안전 보험	○최근 손해를 미반영 ○산재보험보다 낮은 수준 보장	○최근 손해를 반영으로 보험료 인하 ○산재보험 수준의 상품 개발 및 보급

[재해지원과 보험제도 개선]

□ (복구지원) 복구비 지원 단가 인상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 개정 추진

○ 현장의 요구가 큰 농약대, 대파대 등의 지원단가 추가 인상 추진 (지자체현장 의견 수렴, '18.5)

* '18년부터 발생하는 재해는 '17년말 인상 단가를 적용하여 지원 강화

○ 농작물 피해도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에 포함될 수 있도록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액 산정기준 마련(연구용역 추진, '18.상)

* 기재부·행안부 등 관계부처 협의 병행(하반기)

□ (재해보험) 가입률 제고를 위한 농가부담 완화와 보장품목 확대

- 벼·사과·배 등 주요 품목 보험료를 상한선 설정으로 시·군간 보험료를 격차* 완화, 무사고 농가에 보험료 할인 확대(2월)

* (벼) 강원 철원 0.4%, 전남 진도 7.3, (사과) 강원 홍천 19.2%, 경기 양평 0.2

- 4개 품목 신규도입(기존 53품목 + 메밀, 브로콜리, 양송이·새송이 버섯)

- 병충해 보장 품목 점진적 확대('18년 고추 추가)

* 병충해 보장 품목: 벼(도열병, 벼멸구 등 4개 병충해), 감자(모든 병충해)

- 농작물 재해보험의 국가 재보험 운영 방식을 개편(초과손해율 → 손익분담)하여 민간보험사 과다이익 방지

* 기준손해율 초과시 국가가 모두 책임지는 방식에서 국가와 보험사가 손익을 분담하는 방식으로 전환, '17년 재보험기금 210억원 추가 적립

□ (농업인안전보험) 농가부담 경감, 보장수준 강화 등 제도개선

- 위험률 산출주기를 단축하여 매년 보험료 재산정(현행 3년 → 1년)

* '16년 손해율을 반영하여 위험률 재산정시 '18년 보험료 10% 인하 예상

- 간병·휴업급여 등 보상을 강화한 산재보험 수준의 신규상품 보급

* (간병) 5백만→ 50, (휴업) 1일당 2만→ 6, (재활) 5백만→ 30, (치료) 10백만→ 50

- 농작업 중 재해현황 분석*, 보험료 국고 지원비율 상향(50%→ 70) 등 제도개선 추진을 위한 방안 마련(연구용역, '18.상)

* 농작업 중 재해 원인 분석 및 재해로 인한 사망·상해자 수, 치료비용 등

[농업기반 정비]

□ (재해 대응) 가뭄 우려 지역의 항구적 용수개발과 배수개선

- 농촌용수개발 사업을 통해 가뭄 극심지역(경기·충남·전남)을 대상으로 수계연결사업 확대

* 아산호-삼교호-대호호, 아산호-금광·마둔지 수계연결 착수('18.하)

- 강수·저수 상황을 상시 분석·예측하여 가뭄에 선제적으로 대응

- 가뭄상황 모니터링, 가뭄우심지역 지도 작성 및 예·경보(매월), 영농기 가뭄우려 지역(남부지방) 용수확보대책 추진('18.6)

- 배수개선(2,778억원) 사업을 통해 상습침수피해 단계적 경감 추진

* 배수개선율 : ('05) 42.7% → ('10) 49.3 → ('15) 56.8 → ('18) 60.9

□ (안전 관리) 노후 수리시설의 기능 개선 및 보수·보강

- 경주·포항지진을 계기로 확대된 내진보강 대상 저수지*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내진보강 추진('18.6~)

* (기존) 총저수량 50만^m 이상(602개소) → (변경) 30만톤 이상(1,241개소)

- 내진보강 대상 43개 저수지 개보수, 지진계측기 설치(53개소)를 조기 추진하고, 재난대응 매뉴얼 개정('18.3)

□ (물관리 과학화) 농어촌공사 관리 수리시설을 대상으로 ICT에 기반한 물 관리 및 재해 정보시스템 구축·운영(~'25년)

- 물·시설 관리 계측시스템 구축 및 빅데이터 분석모형 개발('18.12)

2. 농식품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토대 마련

1 | 농식품 산업과 농산촌에서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 '18년 3만 3천개, '22년까지 17만개 일자리 창출

- 농신보·자금, R&D, 벤처 창업, 수출 등 정책 지원

[청년 창업 일자리 : '18년 4.7천명, '22년 34천명]

- 청년 농업인의 영농정착 지원을 확대하고, 창업 인큐베이팅 등 식품·외식 분야 창·취업 역량 강화
 - 창업농 1,200명에게 월 최대 100만원의 정착지원금을 지급하고, 이와 연계하여 농지·자금·교육 등 종합지원*
 - * 생애 첫 농지취득 지원, 경영실습 임대시설 조성, 농신보 우대보증 확대 등
 - 식품·외식 메뉴 개발부터 매장 운영까지 실전 경험이 가능한 창업 공간 제공, 해외 진출 식품·외식기업 인턴·취업 지원

[3만불 시대 신수요 일자리('18년 5천명, '22년 49천명)

- 3만불 시대에 맞춰 반려동물·승마·농촌산업 등 새로운 수요에 대응한 유망 산업을 육성하여 신규 일자리 창출
 - (반려동물) 동물간호 복지사 등 자격신설, 장묘업 등 서비스업 활성화, 펫사료 시장 창출 등 반려동물 관련산업 육성
 - (말산업) 승마시설('18년 14개), 말 조련센터(8개) 확충 등 고용 기반 조성
 - (농촌산업) 농촌관광해설사 양성('18년 제도 도입), 농촌관광 콘텐츠 개발 지원 등 농촌 자원을 활용한 지역 일자리 창출

[첨단 미래산업 일자리('18년 4.3천명, '22년 : 28천명)]

- 종자·농생명 소재, 곤충산업 등 고부가가치 미래 산업분야 개척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
 - 골든시드 프로젝트로 국산우수품종 수출 확대, 기능성소재 7대 중점분야* 중심의 R&D 및 미생물산업 육성지원센터 운영
 - * 천연 고분자, 향균, 건강증진, 사료첨가제, 동물백신, 생물농약, 친환경비료
 - 곤충종자 보급센터 구축 및 곤충산업 클러스터 조성 등을 통한 생산·보급기반 구축과 건강기능식품 및 반려동물 사료개발 등 신규 수요 창출
 - 농식품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자율주행 트랙터 등 첨단 농기계 개발로 과학역농 기반을 확충하고 관련 산업 일자리 창출

[산림을 활용한 특화 일자리 '18년 19천명, '22년 60천명)]

- 산림 공공일자리 창출, 산림 전문가 양성, 산림자원의 산업화 및 산림 복지 서비스 확대로 다양한 일자리 제공
 - 산불·산사태 등 산림재해, 산림가꾸기·도시 숲 관리 등을 통한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 지역의 목재·석재·임산물을 활용한 클러스터를 육성하고, 사회적 경제 일자리 확대를 위한 중간 지원 조직(산림일자리 발전소) 신설
 - 산림 복지단지(휴양, 치유, 교육, 레포츠) 조성 및 숲 해설사, 나무의사('18.6월 시행) 등 산림 특화 전문가 양성

2

청년들이 농업을 직업으로 선택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 가 . 가 ,
가 . ”

➔ 청년층이 영농 창업 전후에 겪는 소득 불안정, 자금·농지·기술 등 다양한 애로를 해소하여 청년이 돌아오는 농업으로 전환

* 40세 미만 경영주 비중 : 현 추세 지속시 '22년 0.5% 수준 → 1.4% 이상으로 확대 전환

* 농업계 학교 졸업생 취창업률: ('17) 33.1% → ('18) 34.6 → ('22) 39.2

구 분	현 행	개 선
맞춤형 지원	○ 영농초기 소득 불안정, 정착 애로	○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금 지급
	○ 농지, 창업자금, 교육 등을 각 기관 개별 접수, 별도 선발	○ 농지·자금·교육 등 맞춤형 패키지 지원

□ 농업의 혁신성장을 이끌 청년창업농 1,200명을 선발*하여 월 최대 100만원의 정착지원금 지급('18.4~)

○ 영농계획서 평가, 심층면접을 거쳐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의지, 실현 가능한 사업계획을 갖춘 청년창업농(창업형 후계농)을 선발

* 만 40세 미만, 영농경력 3년 이하로 재산 및 소득 등이 일정 수준 이하인 자

○ 정착지원금을 수령하는 청년 창업농에게 일정기간 영농종사, 교육 참여, 경영장부 작성 등 의무부여

□ 청년 창업농에게는 농지·자금·교육 등을 종합 지원

○ 2030세대에 대한 농지 지원을 강화하고, 귀농인 등 신규 농업인의 농지매입을 우대 지원하는 생애 첫 농지취득 지원 사업* 신설('18.1)

* 55세 이하 농지취득 이력이 없는 신규 농업인 대상(최대 100명), 1인 1ha 이내에서 45천원/3.3㎡의 농지매입 지원(일반농가 35천원)

- 청년창업농 영농 경험 축적을 위해 **경영실습 임대시설 조성**(‘18.하)
 - * 3,000㎡ 규모의 임대농장 30개소 조성, 개소 당 3명 내외의 청년에게 임대
- 청년 창업농이 후계농 자금 대출 시 **농신보 우대보증 확대**(‘18.4)
 - * (현행) 보증한도 2억원, 보증비율 90% → (개선) 보증한도 3억원, 보증비율 95%

□ **농고·농대, 귀농, 비농업분야 등 경로별 청년 유입 확대**

- 한농대 입학정원 증원(‘17: 470명→‘18: 550), 교육과정 개편 및 입시 제도 개선* 등을 통해 다양한 분야의 인재에게 양질의 교육 지원
 - * 영농기반 미반영 전형 비율 확대(‘17 : 28% → ‘18 : 30 → ‘19 : 40) 등
- 증가하는 **귀농희망 청년들이** 다양한 품목을 실습 후 창농을 실행할 수 있도록 **장기교육 과정*** 도입(‘18.3)
 - * 청년 귀농 희망자(50명)에게 6개월 과정의 실습교육, 컨설팅 등을 지원

□ **청년 창업농 법인화 및 투자 활성화 지원 등으로 성장 유도**

- **유한책임회사를 농업법인 유형에 추가하고**(~‘18.9), 농업법인에 대한 농림사업 지원 조건(출자금 1억원, 설립 1년 이상) 완화*
 - * ‘18년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예외규정 신설(‘18.1)
- **모태펀드***를 활용해 청년 창업농 경영체에 대한 투자 확대
 - * 농식품 벤처펀드(‘18~‘22, 연 100억원 이상), 지역특성화 펀드(‘18년 100억원) 신설

“

. 4

?”

➡ 스마트팜을 선도 프로젝트로 기술개발-자본투자-일자리가 선순환을 이루는 농업과 연관산업의 혁신 창업 생태계 조성

* 스마트팜 보급 목표(누적): ('17) 4,000ha → ('18) 4,510 → ('22) 7,000

* 밭농업 기계화율 제고 : ('17) 58.3 % → ('22) 75.0

구 분	현 행	개 선
정책 대상	○ 기존 농가의 스마트팜 전환 중심	○ 새로운 인력의 유입 촉진
정책 범위	○ 농업 생산과 식품으로서의 농산물에 중심을 둔 정책	○ 밭농업 기계화 등 투입재 산업 육성 ○ 농생명소재 원료, 미생물산업 등 새로운 소비처를 발굴
기술 지원	○ 전문가, 원천기술 중심의 R&D	○ 농업 현장 중심의 R&D
자금 지원	○ 보조사업 중심의 정부 자금 지원	○ 모태펀드 등 민간투자 활성화

[스마트팜 확산]

□ 준비-창업-성장-재도전의 스마트팜 혁신 창업 생태계 조성

- (창업보육) 창업보육 시범운영기관을 선정하고(3개소, '18.1), 청년 60명을 모집(18.3), 창업교육·경영실습 등 성장단계별 지원
- (자금지원) 스마트팜 종합자금* 지원, 청년 창업농 농신보 우대보증, 농식품 벤처펀드 도입 등으로 창업 자금지원 강화
 - * ('18년 규모) 1,000억원, (대출금리) 시설 1%, 운전 1.5%, (상환) 5년 거치 10년 상환
- (희생지원) 실패하더라도 재기할 수 있도록 농지·시설 매입 후 재임대, 경영희생자금 지원 등 창업 안전망 구축

- 스마트팜 단지 신규 조성(2개소, 총 40ha) 등 현장 확산을 지속 추진하고, 다양한 형태의 스마트팜 도입
 - 5대 채소(고추, 마늘, 무, 배추, 양파) 중심으로 노지 스마트팜을 시범 도입(5개소)하고, 새로운 작목 등 수직형 농장 모델 발굴(신규 3개소)
- 스마트팜 확산과 혁신창업 거점인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
 - 스마트팜 단지 기반조성과 같은 기존사업 연계, 민간 참여 프로젝트 발굴 등 다양한 유형을 고려한 조성계획 마련(~'22, 4개소)

[3만불 시대 새로운 수요 산업 육성]

- (반려동물) 반려동물을 안심하고 기를 수 있는 여건과 사람과 동물이 공존할 수 있는 기반 조성을 통해 관련 산업 활성화
 - (자격증 신설·공인) 동물간호 복지사 제도 도입, 애견 미용업, 펫 택시(동물운송업) 등 신규업종 영업 등록
 - (관련산업 체계화) 진료·장례 부담 완화를 위한 반려동물 표준진료제 도입 방안 마련 및 공공 동물장묘시설 설치 지원('18년 2개소)
 - 반려동물 유기사료 인증제 추진 등 펫사료 산업 육성
 - (제도 정비) '(가칭)반려동물 산업법' 제정 추진 등으로 산업 활성화 지원
- (승마) 승마대중화를 통한 한국형 레저 승마산업 육성 및 농촌관광 등 관련 산업과의 연계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농가소득 확대
 - (기반조성) 농어촌형 승마시설 환경개선 지원(연 10개소), 농어촌형 승마길 확대 설치*로 농촌 관광 승마 확대

* 농어촌형 승마길(누적) : ('17년) 57km → ('18년) 170 → ('21년) 500

- (저변확대) 자유학기제 승마체험 프로그램 다양화 등 학생승마 지원
 - * 학생승마 : ('17) 44천명 → ('18) 69, 유소년승마단 : ('17) 44개소 → ('18) 80
- (서비스 전문화) 승마지도사 국가 자격화, 말산업 종사자 보수 교육 등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승마상품의 상향평준화를 위한 협력승마시설 운영
 - * 협력승마시설 : ('16) 31개소 → ('17) 62개소 → ('18) 80개소
- (新식품 분야) 1인 가구 증가, 고령화 등 변화에 맞는 식품시장 확대
 - 가정간편식(HMR), 고령친화식품 시장 확대에 따라 신제품개발, 품질 관리를 위한 R&D 지원 및 소비자트렌드 분석 등 정보제공 강화
 - 식품산업과 ICT 기술을 접목한 푸드테크 스타트업에 대한 자금·마케팅 지원
 - 첨단 바이오기술을 활용하여 육류 및 화학적 첨가물 등 기존 식품 원료·소재를 대체할 수 있는 미래식품 개발·지원
 - * 예시 : 대체 육류, 식물성 달걀, 인공우유, 곤충활용 식품 등
 - 식품첨가물, 식품용효소 등 바이오 식품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 (산림) 산림자원을 활용한 특화된 일자리 창출
 - 산림복지서비스를 민간 주도의 산림복지전문업으로 육성하고, 나무 의사 자격제도 시행에 따른 양성 교육 시행
 - * 전문업 분야 확대 : ('17) 숲해설업 → ('18) 숲해설업, 유아숲교육업, 산림치유업
 - 임산물, 목재 클러스터를 육성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고 일자리 창출
 - * 밤, 고로쇠 등 임산물과 목재를 특화하여 생산·유통·관광을 융합한 클러스터 육성
 - 산불, 산사태등 재해분야 인력확충 및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
 - * 산림재해 일자리(12.5천) 및 공공산림가꾸기 등 재정지원 일자리(2.1천) 확충

[신산업 육성으로 미래농업 준비]

- (종자산업) GSP(Golden Seed Project) 수출 목표('18년 3,868만달러)달성을 위해 개발품종의 수출지원 강화
 - (수출 지원) 국산 품종 홍보를 위한 제2회 국제종자박람회를 개최 (10월)하고, 해외전시포 운영(중국, 인도, 인니, 베트남, 멕시코)
 - GSP 참여기업과 수출지원 기관(aT, KOTRA 등)이 참여하는 '수출 지원 협의체'를 구성하여 해외시장 판로확보 지원
 - (역량강화) 종자 협력네트워크를 활용, 중소기업의 수출품종 개발 지원
 - * (농진청, 전주) 육종기술 개발, (방사선육종연구센터, 정읍) 육종소재 개발 (종자산업진흥센터, 김제) 분자표지·기능성 분석서비스 제공
- (곤충·미생물) 생산농가 지원, 신규 수요 창출 등 시장규모 확대를 통한 곤충산업 발전 기반 마련 및 미생물 산업 육성
 - 곤충산업클러스터 조성 추진('18, 타당성조사) 등 생산·보급기반을 구축하고, 식품 및 사료 개발 등 곤충자원 신규 수요 창출
 - * 익은누에의 알콜성 질환 예방 건강기능식품 개발('17~'20, 14억), 식용곤충 활용 반려동물 사료 개발('18~'21, 19억) 등 연구 추진
 - 프로바이오틱스, 발효식품, 천연 살충제, 면역강화제, 축산악취 저감제 등 활용가치가 높은 미생물의 산업화 지원 확대
 - * 포스트게놈 미생물유전체 연구사업('18~'21, 283억) 등
- (생명소재) 실험실단계에 머물러 있는 소재가 실제 산업현장에서 이용될 수 있도록 7대 중점분야* 등 산업화 중심의 R&D 지원 강화
 - * 7대 중점분야: 천연 고분자, 항균, 건강증진, 사료첨가제, 동물백신, 생물농약, 친환경 비료
 - * 농생명소재산업화기술개발사업('20~) 예비타당성 조사 추진('18.상)

[4차산업혁명에 대응한 과학 영농기반 확충]

- (첨단 농기자재) 자율주행 트랙터, 농업용 로봇 등 첨단농기자재 분야 개발 및 보급 확대를 통한 과학영농 기반 확충
 - (개발) 자율주행 트랙터 등 첨단 농기계 R&D 확대(농진청, 기업 중심) 및 기계화율이 낮은 파종·정식(8.9%), 수확(23.9%) 작업 기계화
 - 작업효율이 낮은 파종·정식기, 굴취형 수확기 성능 우선 개선('18), 굴취·수집 등 다기능·고성능 기계 개발('19~'21)
 - * R&D 투자 : ('17년) 83억원 → ('18년) 94, '19년 이후 매년 100억 이상 투자
 - (보급) 성능개선·첨단 농기계를 신기술농업기계로 지정, 지자체를 통해 주산지 공동이용조직에 집중 보급하여 농작업 기계화 촉진
 - 신기술 농업기계로 지정받은 밭작물 농기계를 우선 보급, 국내 농기계 업체의 농기계 개발을 유도하고 고품질 농기계 생산 촉진
 - (수출 지원) 농기자재 수출활성화를 위한 수출기업 지원 강화
 - 중국, 동남아 등 신시장 개척을 위한 마켓테스트('18 신규, 4억원) 및 해외 농기자재박람회 참가 지원(4.5억원)
 - 국내 농기계, 농자재 수출확대를 위한 『대한민국 국제 농기계 자재박람회』 개최(천안, '18.10.31~11.3)
 - * 격년 개최, ('16) 28개국 453개 업체 참가, 28만명 관람
- 빅데이터 기술 활용 기반 구축 및 스마트 유통시스템 도입
 - 빅데이터를 쉽게 활용·분석할 수 있는 민·관 공동 플랫폼 구축
 - 농식품 빅데이터 생태계 구성에 필요한 핵심데이터 수집·제공
 - * 농경지 전자지도(팜맵)기반에 공공·민간정보(카드·통신사), IoT정보(스마트팜) 융합

- 스마트팜에서 생성되는 환경·생육·경영 정보수집 및 공유를 통해 빅데이터 활용가치 증대
 - * '17: 8품목, 210호 → '18: 19목, 240호 → '22: 10품목, 800호
- 돼지 영상 등급 판정을 통한 품질 자료를 활용하여 생산(종돈·사료·농가), 소비(이력관리·맞춤형 상품관리) 등 유통단계 전반의 스마트화 추진
 - * '17 : 1개소 시범도입 → '18 : 3개소

[현장중심 R&D 체계 구축]

- 농식품부 R&D 사업비 중 농업인·농산업체의 의무참여 예산 비중을 확대('17: 36%→'18: 42)하고, 이행점검 실시
 - 농업인·농산업체가 직접 연구기관을 선택하여 애로사항을 해결 하도록 바우처 방식의 R&D 지원 확대('17: 34억원→'18: 150)
- 현장의견 반영 및 참여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 현장에서 필요한 기술개발이 이루어지도록 수요조사 방식을 다각화 하고, 찾아가는 설명회(4회) 등으로 현장소통 강화
 - 능력 있는 농업인·농산업체의 참여 확대를 위해 제출서식 간소화, R&D 코디네이터*('18년 신규: 20명) 지원 추진
 - * 퇴직 연구자 등을 활용하여 보고서 작성·연구방향 점검·진도관리 등 지원
- 미래농정과 현안해결을 위한 7대 분야*에 집중 투자하고, 핵심과제 뒷받침을 위한 신규 R&D과제 기획
 - * 발농업 기계화, 기능성 식품, 가축질병, 농식품 안전, 농기자재 국산화, 소재, ICT 융복합
 - '18년 「4차 산업혁명의 농업접목」 과 「동·식물 질병 확산에 체계적 대응」 신규 R&D 사업 기획 추진('18.상)

[민간 투자 활성화]

□ (모태펀드) 민간자본의 농업분야 투자 유치 및 창업기업 생태계 조성

- 농업분야 혁신성장 지원 및 지역농산업 활성화를 위한 투자 확대
 - (농식품벤처펀드) 혁신모험펀드와의 공동 출자*를 통해 스마트팜 등 5년 이내 창업 경영체를 위한 민간투자 유치 지원
 - * 농식품 모태펀드 100억원 + 혁신모험펀드(중기부 등) 연간 100억원('18~'20)
 - (지역특성화펀드) 지역특성화 사업과 연계, 지자체·정부가 공동 출자하여 우수 농식품 경영체 발굴·지원('18년 100억원 결성)
- 농식품경영체의 성장단계에 따른 단계별·맞춤형 지원체계 강화
 - (투자 前) 예비 창업자, 창업 초기 기업·농업법인 등 대상별 맞춤형 투자금융 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컨설팅 제공 등
 - (투자 後) 투자받은 경영체의 경쟁력 강화와 성장을 위해 국내외 마케팅 및 경영·기술 컨설팅 지원
 - * 국제식품박람회 참가(5월 상해, 8월 베트남), 국내외 마케팅 상·하반기 1회

□ (농신보) 금융위와 공동으로 농신보 제도 개선 방안 마련(~3월까지)

- 시설투자비 상승을 감안하여 동일인 보증한도*를 확대하고, 소액 대출자 지원을 위한 전액보증 한도 상향을 검토
 - * (기존) 개인 10억원 / 법인 15억원 → (개선) 개인 15 / 법인 20
- 스마트팜·ICT융복합 사업자에 대한 예외보증 지원을 확대(개인 30억원, 법인 70), 스마트 농업 확산을 위한 금융지원 강화
- 농업분야 창업 활성화를 위해 창업초기(3년 이내) 농업인·농업 법인에게 부분보증 비율을 상향 적용(현재 85%)하는 방안 검토

4

세계와 경쟁하는 식품산업을 키우겠습니다.

“ ”
 “ 가 ”

➔ 농업과의 연계 성장을 넘어 식품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도록 지원하고, 외식분야의 청년 취창업 활성화를 추진

* 식품·외식분야 취업자 수 : ('16) 254만명 → ('18) 265 → ('22) 289

구 분	현 행	개 선
혁신 인프라	○ 영세한 산업구조로 식품·외식 기업의 경쟁력 취약	○ 미래유망분야 집중 육성, 청년 취창업 지원 등 혁신성장 도모
농업 연계	○ 국산원료 사용비중 증가세 둔화	○ 국산원료 사용의 지속적 사용 유도를 위해 수요자중심 정책발굴
수출	○ 주력시장(미·일·중)위주 수출지원	○ 新남방정책 등 수출 다변화 추진

[식품산업 기반 강화]

□ (취·창업 지원) 실습형·체험형 프로그램 제공 확대를 통해 식품·외식 분야에 청년 취·창업 지원 강화

○ 외식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이 임차료 부담 없이 창업기획, 매장 운영 등을 경험할 수 있도록 외식창업 인큐베이팅 확대

* 사업 개소수 및 지역 확대 : ('17) 1개소(서울) → ('18) 5개소(전국)

○ 청년인력이 식품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국내·외 인턴십을 확대 ('17:43명→'18:65명)하고, 기업탐방, TED형 강연 등 프로그램 운영

- 유엔식량농업기구 등 국제기구에 청년인턴 파견(50명)

○ 국가식품클러스터 內 '창업지원 Lab'('17년 4개팀→'18년 16)으로 가공식품 시제품제작 및 교육·멘토링 프로그램 지원

○ 역량있는 청년들이 해외 진출 한식당 및 외식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18:40명)하고, 농식품 청년 해외개척단* 운영(100명)

* 농식품 수출 선도기업과 1:1로 매칭하여 신흥 수출시장에 파견(3개월)

□ (유망분야 육성) 기능성식품시장 확대를 위한 (가칭) 기능성식품표시제* 신규 도입방안 마련

* 간소화된 절차(신고)를 거쳐 식품 제조자책임하에 과학적으로 기능성이 확인된 원료·성분을 활용한 식품 기능성 표시·광고

○ 선진국(일본 등) 사례를 분석하여 국내 여건에 부합하는 기능성 식품표시제를 설계('18.12)하고,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

- 소재별로 연구결과(기능성·안전성) 등을 취합·제공하는 '기능성 농식품 DB'를 구축('18.11), 기업의 기능성 소재 탐색 지원

□ (국가식품클러스터) 유망 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투자유치를 강화하고, 입주기업에 대한 상시 애로대응 시스템 구축

* 익산소재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계약업체(누계) : ('17) 50개사 → ('18) 75

○ 산학연 전문가의 기술 애로 진단과 세무, 인허가 등 경영활동에 필요한 각종 사항을 지원하는 '비즈니스 상담소' 운영('18.3)

○ 클러스터 중심으로 식품 R&D벨트(국가식품클러스터-한식연-농진청 등)를 조성하고 지역 우수인력과 입주기업 간 일자리 연계

□ (규제 합리화) 식품·외식산업 성장을 저해하는 규제를 발굴하고 관계부처 협의 등으로 개선

○ 업종 간 융복합을 통한 신시장 창출을 유도하고 외연을 확대

* 고령친화식품 범위 확대, 지역특산주 주종 확대(지역농산물 활용 맥주, 브랜드 포함) 등

[농업과의 연계 강화]

- 영세 식품기업이 원료 농산물을 신용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구매 이행보증보험*을 도입(3월)하고, 가공용 농산물 생산단지** 조성 확대
 - * 보험가입시 업체당 최고 5천만원 한도 내 국산 농축산물 신용구매 가능
 - ** (우수사례) 황등농협(전북 익산) - CJ 프레스웨이와 즉석밥용 벼 계약재배 : ('15) 2ha → ('16) 240ha → ('17) 500ha → ('18) 1,000ha(예정)
- 식품업체-생산자단체 간의 계약재배로 농산물을 조달하는 생산 단지에는 재배·수확·제품개발 등 지원
 - * (생산자단체) 병해충 공동방제, 장비 임차, 시범포 운영, 재배기술 교육 등
 - (식품업체) 계약재배 농산물을 이용한 제품개발 및 상품성 테스트 지원 등
- 민·관 협의체를 구성하여 식품 가공용 품종 개발을 확대하고 분산된 가공적성정보를 통합(가공적성정보센터)하여 식품업체에 제공
 - * 쌀·메밀·고추 등 44품목에 대한 가공적성 연구 및 논문·특허 등 정보
- '농공상융합형중소기업' 등 농업연계성이 높은 기업을 선발하여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정책수단 제공
 - 우수 농공상융합형중소기업(스타기업)이 필요한 정책*을 직접 선택 하고, 지원(업체당 1~2억원) 받는 '자율선택형 바우처' 도입('18.3)
 - * 경영·컨설팅, 포장·디자인, 마케팅·판로지원, 기술개발·연구 등
- 지역 식재료 사용 현황 등을 반영하여 지역별 우수 외식업 지구를 발굴·홍보(年 5개소)함으로써 외식업 성장과 농가 소득을 연계
 - 중앙정부 주도의 지구 육성을 지양하고, 지자체 및 민간 중심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관계법령 개정(외식산업진흥법, '18.상)
 - 식재료 공동구매 조직화('17:20개소→'18:40) 및 레스마켓 설치를 확대하여 농가 및 외식업체 동반상승 도모

[한식 및 전통식품 진흥]

- 평창동계올림픽 경기장 내 'K-Food Plaza'를 설치·운영('18.2)하고 국내·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식 집중 홍보('18.1~3)
 - 국내 우수 한식당 가이드 책자 배포(2만부)와 KTX 한식 홍보를 추진하고, 평창 및 강릉 선수촌에 국내산 한식 식재료 공급
 - * 선수촌 급식업체에 '건강한食서포터즈'를 파견하여 한식 알리미로 활동
 -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국내·외 식품산업 전문가를 초청하여 정보 교류의 장(Food Summit)을 마련하고, 국내 한식문화 홍보 병행
- 해외 우수한식당 인증제 시범 도입(10월)으로 해외 한식당 품질을 제고하고, 체계적 한식정책 추진* 기반 마련(한식진흥법 제정, '18.11)
 - * 한식정보체계 구축, 전문인력양성, 우수한식당인증, 국제교류·협력의 촉진 등
- '발효미생물산업화지원센터'를 건립(~'20)하여 우수 토착 발효종균 보급 확대 인프라를 구축하고, 전통·발효식품의 과학화 도모
 - 유용한 균주를 보유한 기관과 전통식품업체를 연계, 제품화 지원
 - * 연간 450톤 규모의 종균생산 시설 건립을 위한 사업자 공모 및 실시설계 용역 추진
- '전통주 및 지역특산주 경쟁력 강화방안'을 수립('18.2월)하고, 술 전문 연구지원 기관으로 '(가칭)한국술 연구소' 설립 추진(~'21년)
 - * 일본은 주류종합연구소(독립행정기관)를 통해 주류 연구·조사, 주류정보 제공
- 제조기술·미생물 등 양조기반을 공고화하고, 소규모 업체의 생산·유통 역량 제고

[농식품 수출 및 해외진출 확대]

- (시장 다변화) 기존 주력시장(일·중·미)에서 성장잠재력이 큰 아세안 등으로 수출시장을 다변화하고, 신시장 적극 개척
 - 정부-민간 간 협력을 통해 기획수출*을 확대하고, 기 진출한 국내 대형 유통망을 활용하여 동남아 지역 수출 확대(新남방정책)
 - * (사례) 한·미얀마 위생검역협상에 대비, 수입통관 실적 확보를 위해 우리 신선농산물의 미얀마 수출을 전략적 지원(바이어 매칭, 통관지원 등)
 - 파일럿요원(aT), 시장개척단(업체+전문가) 등을 성장 잠재력이 큰 다변화 전략국가에 사전 파견하여 정보수집 및 체계적 전략 수립
 - * (동남아) 대만·말련 (중동·중앙아) 카자흐 (유럽) 폴란드, (중남미) 브리질 (아프리카) 남아공 등
- (수출바우처) 사업 대상자가 원하는 사업을 직접 선택, 패키지로 지원받는 수출바우처 도입, 수요자 중심의 지원체계 구축
 - 글로벌브랜드 육성, 해외인증(Global GAP, ISO 22000 등), 수출컨설팅, 해외판촉, 바이어상담 등을 패키지로 지원
- (신선농산물 수출) 박람회·해외판촉 및 해외인증 지원 시, 신선농산물 및 국산원료 농식품 사용 업체를 우대
 - 품목별 수출통합조직* 집중 육성을 위해 해외마케팅, 수출물류비 등 지원체계를 수출통합조직을 중심으로 개편
 - * ('17) 버섯류 → ('18) 파프리카, 딸기 → ('19) 배, 토마토, 포도 → ('20) 사과, 복숭아 → ('21) 멜론 → ('22) 배추, 양배추 → ('23) 감귤 등
- (해외진출) 외식 프랜차이즈 기업의 해외진출 One-Stop 지원
 - '글로벌외식기업협의체'를 통해 해외진출 전문인력 양성, 식재료 수출 인증 지원 등 해외진출 관련 애로사항 종합 지원

3. 국민이 안심하는 농축산물 생산과 환경 관리

1 농장의 안전관리 시스템, 기본부터 충실히 다지겠습니다.

“가 , 가 .”

➔ 사후 수습 위주의 안전관리를 사전예방 생산체계 구축으로 전환하고, 부실하게 운영되던 인증제도 전면 개편

* 소비자의 농축산물 안전 체감도 : ('17) 54.8% → ('18) 58.5 → ('22) 70

* GAP 인증 농가비율 : ('17) 8.1% → ('18) 9 → ('22) 25

구 분	현 행	개 선
인증 제도	○ 축산물 살충제 관리기준 부재 등 위생·안전 기준 미흡	○ (친환경) 안전관리 기준 도입, 검사·위반행위 처분 등 강화 ○ (HACCP) 기준에 살충제 항목 추가
안전 관리	○ 출하전 농산물 안전성 조사에 집중 ○ 통합 먹거리 안전관리체계 부재	○ 생산요소에서 출하까지 통합적 안전관리 ○ 범정부 식품안전관리체계 구축

[농장 안전관리 시스템 강화]

□ 토양·물 등 생산단계 안전에 영향을 주는 요소 중점 관리

○ 안전한 농경지 관리를 위해 폐광산, 산업공단 등 오염우려 지역의 중금속 잔류조사 강화 및 농경지 비옥도 관리

- 중금속 기준을 초과한 농경지는 재배 농산물까지 추가 조사 추진 (기준 초과 농산물은 폐기 조치)

* 오염우려 농경지 중금속 조사 : ('17) 3,700필지 → ('18) 3,900필지

- 유기질 비료 품질관리 시스템 운영, 토양개량제 공동 살포 등으로 토양 유기물 함량을 높이고, 산성화 방지

○ 수질기준 4등급 초과 저수지 수질 개선 추진('18년 누적: 31개소, 252억원) 및 농업용 관정 수질 관리 강화

* 중금속 우려 저수지 수질조사(연1회 → 4회), 공공관정 수질검사(매 3년), 폐관정 점검 강화(연1회 → 2회), 공공관정 관리지원 시스템 구축('18년)

- 중금속 기준 초과 저수지는 급수 중단, 대체 급수 및 정화 조치

* (예시) 천안 입장저수지 비소 기준 초과로 급수 중단 등 대응('15)

□ 농약허용물질 목록관리 제도(PLS) 도입('19년~)에 따른 제도정비

○ 등록농약이 부족한 소면적 작물용 농약 직권등록을 확대('18.하, (1,600여개 등록 예정)하고, 오남용 방지 등을 위한 농약 이력관리제 도입

- 농약 판매 시 농약 바코드 정보와 경영체 등록 정보를 연계관리해서 원예, 가정용 농약을 제외한 모든 농약의 판매 기록 의무화

* 농약관리법 개정('18), 농약 이력관리시스템 도입('19~)

○ 농약 판매관리인 전문성 제고를 위해 자격요건* 및 안전 교육** 강화

* 농약·병해충 방제 관련 경력이나 자격 소지자로 한정(신규 진입자)

** 민간에서 운영되던 이수 의무교육을 공공 교육으로 전환(농진청)

○ 고령·영세농 등을 위한 찾아가는 교육(방문, 우편 등), 콜센터 운영 등 PLS 시행 대비 교육·홍보 강화

* 농업인 콜센터 : 1544-8572, 임업인 콜센터 : 1600-3248

□ 친환경 인증기준 내 안전관리 기준 확충, 사후관리 강화('18.상)

○ 인증기준에 환경오염 방지, 위생·안전 관리를 위한 기준 도입

* 농장 주변 오염 방지, 수확작업 전후 개인 및 작업장 위생관리 기준 등

- 농약 등 안전성 기준 위반 시 즉시 인증을 취소하고, 삼진아웃제 도입, 상습 위반자에게 과징금 부과 등 처분 강화
 - * 삼진아웃제 : 인증취소 처분을 3회 받은 농가는 친환경 인증에서 영구 퇴출
 - 인증기관의 인력 기준 강화, 3회 연속 “미흡” 평가를 받은 경우 지정 취소 등을 통해 인증기관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제고
 - * 축산물 인증 시 축산·수의분야 자격 의무, 인증심의관 교육·평가 강화 등
- GAP 인증제도를 내실화하고, 수요 확대를 통한 인증 참여농가 확대
- GAP 단체인증(전체 인증의 90%) ‘내부 심사제*’를 도입하고, 인증 기준 및 관리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을 상향(‘18.하)
 - * (현행) 2단계(서류·현장심사) → (개선) 3단계(단체 내부심사, 서류·현장심사)
 - 유통업체 자체 품질기준에 GAP를 적용하도록 민간 협업(MOU, 협의체 구성 등)을 강화하여 농가의 GAP 인증 참여 유도(‘18.상)
- 부처간 협업 등 안전관리체계 및 관련 법령 정비
- 범정부 식품안전 관리체계와 중앙부처-지자체간 식품안전 소통 채널 구축, 대국민 소통 거버넌스 운영 등 안전관리체계 정비
 - 농경지, 용수에 대한 안전관리 확대 등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상 안전관련 법령 정비(‘18.하)

[축산물 안전 관리 강화]

- 농가와 판매자 준수 의무 도입 등 살충성분 농약 관리 강화
- (농가) 안전 사용기준을 법제화하고, 위반 시 과태료 부과(‘18, 식약처 협조) 및 축산업 허가 취소 도입(‘19)
 - 방제 우수사례를 포함한 현장 매뉴얼 보급, 농가 교육 강화(연 2회)

- (판매자) 도매상, 동물약국, 동물병원에게 거래내역 기록 및 적정 사용법 고지 의무화('18)
- (검사·기반) 산란계 농장 계란에 대해 연 1회 이상 검사를 실시하고, 산란노계는 출하 전 검사 실시(검사인력·장비 확충)
 - * 검사장비 보강('17: 42억원 → '18: 160)과 담당 공무원의 계란·산란노계에 대한 조사권 강화(출하중지 등 긴급조치, 정보공개 권한 등)

□ HACCP 단계적 의무화, 공동 방제 등을 통해 위생적 사육환경 조성

- HACCP 인증기준에 살충제 항목을 추가하고, 대규모 산란계농장·종축장부터 단계적 의무화('18.12, 축산물위생관리법 개정)
 - * 타 축종은 경제성 평가 등 연구 용역을 거쳐 탄력적으로 의무화 적용
- 해충 방제 전문업체를 활용한 공동방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전문 방제업(가칭 '가축방역위생관리업') 신설 등 방제서비스 확대
 - 소규모 산란계 농장(5만 수 미만) 대상 축산업 전문방제 시범사업 추진(40개소, 7.5억원)
- '가축방역위생관리업*'을 신설('18.10,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하고, 방제 기술 실용화 연구 지원('18, 12.8억원)
 - * 진료행위 등 타 법령과 중복되지 않도록 축사 청소·소독, 진드기 방제 등에 한정

□ 수의사 처방 대상 동물용 항생제 품목을 '20년까지 40종으로 확대 ('18년 32종)하고, 무항생제 인증제 관리 강화

- 무항생제 축산물을 친환경 인증에서 제외하되 항생제 사용 저감 제도 취지를 유지할 수 있도록 별도 인증으로 운영
 -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제에 쏠 생애 항생제 사용금지 원칙 적용
- 내성균 모니터링을 확대하고, 생산자 대상 교육 및 지도점검

2

사육환경과 가축질병 방역체계를 혁신적으로 바꾸겠습니다.

“ , , AI가 ”

➔ 성장 중심의 축산업을 생산단계에서부터 부정적 외부효과를 차단하고, 공정 경제에 부합하는 지속성장 가능하도록 전환

* '18년에는 산란계 사육환경 집중개선, '19년부터는 나머지 축종 개선 추진

구 분	현 행	개 선
사육 환경	○ 밀식·밀집 사육, 시설·관리기준 미흡	○ 사육밀도·시설·관리 기준 강화신설
경쟁력 제고	○ ICT 등 활용 초기 단계 ○ 가금 유통체계의 안전성·투명성 부족	○ 스마트축사 확대로 생산성 향상 ○ 달걀 세척·냉장 유통 확대, 닭고기 가격의무공시제 실시
방역	○ 체계적인 AI 예방 미흡 ○ 농가의 방역 전문성 부족	○ 새로운 방역 관리 프로그램 도입 ○ 가축방역위생관리업 신설·활용 확대
계열화	○ 계열화사업자의 계약 농장 관리 미흡	○ 계열화사업자 방역 책임, 불공정 행위 감시 강화

[축산 사육환경 근본 개선]

□ 사육 밀도 기준, 시설·관리 기준 신설·강화로 축산업 허가제 보완

○ (사육밀도) 산란계 사육밀도를 낮추는 기준을 설정*(7월)하고 기타 축종도 조사를 거쳐 사육밀도 완화 추진(~12월, 축산법 시행령 개정)

* 산란계 사육밀도를 0.075㎡/마리(현행 : 0.05)로 완화(신규 농가는 '18.7월부터, 기존 농가는 '25.7월부터 적용)

○ (시설 기준) 악취 저감 및 분뇨 신속 처리, 차단 방역 등을 위해 강화된 시설 기준 설정(연구용역 후 법령 개정안 마련, 12월)

- (예시) 「악취방지법」에서 규정한 악취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토록 악취저감시설(예 : 바이오필터, 바이오커튼 등) 설치 의무화

- (관리 기준) 가축사육업자에게 **축사·가축의 위생관리 의무 부과**
 - 사육시설·가축을 **위생적으로 관리할 의무**, 출입자 제한 의무, 관계자 출입시 작업복 및 신발 착용 의무 등 신설('18.7)
 - 축사 내 **암모니아 농도 및 밝기 기준 준수 의무**, 가축 건강 점검 및 기록관리 의무 등 부과(~12월, 축산법 시행령 개정)

□ 축산 정책에 공간적 관리 개념을 도입하여 축산 입지 개편

- 가금 밀집사육지역 내 농장 간 일정 간격(500m 이상)이 확보되도록 이전, 인수·합병·법인화 유도 및 시설개선 지원
 - '18년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지자체·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가금 밀집사육지역 재편 계획 수립·확정(9월)
- 철새도래지 인근 3km, 농업진흥구역, 가금류 농장 500m 내 신규 가금(닭·오리) 사육업 허가 금지(축산법 개정, 상임위 계류 중)

□ 사육환경 개선 촉진을 위해 시설 개선과 시장 차별화 지원

- 강화된 허가 기준 준수를 위한 시설 개보수·신축에 대해서 축사 시설현대화 자금을 우선 지원하고 보조율도 상향(연중)
- 농가의 사육환경 개선 노력을 소비자가 알고 선택할 수 있도록 사육환경표시제 도입('18.하)
 - 대형 유통업체, 소비자단체·생산자단체 등과 협력하여 개선된 기준에 따른 축산물 유통 및 소비 촉진('18.하)
- 축산 농가 점점 체계 개선, 축산 관련 법령상 의무 미이행자에 대한 재정사업 지원 제한 등 정책 추진 체계 재설계 방안 마련('18.하)
 - 농가별 체크리스트 관리, 중점관리대상농가 지정, 사육환경관리 요원 지정, 통합 관리시스템 구축 등 추진

[축산업 경쟁력 제고]

□ 안전성 확보와 가격 투명성 제고 등 소비자의 요구에 맞도록 축산물 유통·가공 제도 개선

○ (달걀) 위생적으로 유통되도록 세척·냉장 유통 확대 지원

* 계란유통센터 지원사업 신규 추진('18 : 신축 2개소, 증축 2개소)

** 계란가공장·집하장·등급시설 지원 사업을 통해 저온창고, 냉장차량 등 냉장 보관유통체계를 위한 시설지원

○ (닭고기) 계열화사업자가 판매가격을 농식품부에게 보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정부는 닭고기 가격 공개* 추진

* 닭고기 가격 의무공시제 도입(「축산계열화법」 개정, ~'18.6)

○ (쇠고기) 마블링 중심의 쇠고기 등급제를 보완(하반기), 사육 장기화로 인한 지방량 증가(도체중 감소)를 방지하고 소비 트렌드에 부응

□ 생산성 향상을 위해 한우·돼지 품종 개량 지속 추진

○ (한우) 후대검정두수, 후보씨수소 선정 확대 등 한우 개량의 효과성 향상으로 출하월령과 도체중 개선('15: 31.2개월, 436kg → '25: 28, 455)

* 후대검정두수 : 6두('16년) → 10두('20년), 후보씨수소 60두 → 90두

○ (돼지) 종돈장간 정액을 교환하는 개량 네트워크 사업 강화를 통해 한국형 두록* 육성 및 돼지 생존산자 수 증가('15: 12두 → '25: 13)

* 외국에서 개발한 두록 품종에 한국 고유의 유전자(예시: 흑돼지 유전자) 삽입

□ '22년까지 ICT 활용 스마트 축사 5천호를 보급하여 생산성 향상

* 스마트 축사 보급(누적) : ('17) 750호 → ('18) 1,350 → ('22) 5,750

○ 축사 환경관리, 가축 사양관리, 경영분석 등을 위한 ICT 장비 도입 지원(ICT융복합확산사업, 연중)

○ ICT 장비 표준화(12월)로 축산 데이터 공유·활용 기반 마련

[가축 질병 방역체계 개선]

- 올림픽 대비 강원도 소규모 농장 등 방역 취약대상 점검 및 관리 강화
 - 올림픽 종료 시까지 모든 전통시장(26개소)에 살아있는 가금 유통을 금지하고, 가금 도축장 소독 점검 등을 위한 인력 배치
 - 경기장 소재 등 6개 시군에 방역 전문인력을 파견(검역본부 12명), 방역기술 컨설팅, 방역실태 점검 등 지원
 - * 경기·강원·충북도 15개 시·군에 30명 특별방역단 배치

- AI 예방을 위한 새로운 방역 관리 프로그램 도입
 - 소규모 가금농가 대상 가축거래상·도축장·전통시장 등을 등록·관리하는 '산 가금 유통 방역 프로그램' 시범실시('18.3)
 - '19년부터 동 프로그램 미가입 시, 전통시장·가든형식당 등으로 산 가금 유통 불허('22년부터는 산 가금 유통 원칙적 금지)
 - 전업규모 가금농가 대상 '가금 자율 방역 프로그램' 마련 및 시범실시를 위한 연구용역 추진('18.6)

- 구제역 백신 접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백신 일제 접종을 정례화하고, 백신의 국산화도 차질없이 추진
 - 전국 소·염소 일제 백신접종(연 2회 : 4, 10월) 실시
 - 돼지는 동절기 이전에 과거발생 등 취약지역 중심으로 일제 접종하되, 항체양성을 제고를 위해 백신접종 프로그램 개선('18.2)
 - 구제역 백신 국내 제조시설 건립 추진('18~'19)

[축산계열화사업 제도 개선]

- 축산계열화사업자가 계약농장의 방역 실태를 점검토록 하는 등 방역 책임 강화('18.6월, 「축산계열화법」 개정)
 - 계열화사업자는 계약농장이 「가축전염병 예방법」, 「축산법」 등 법령을 준수하였는지 확인 후, 위탁 계약을 체결토록 의무화
 - 계열화사업자의 계약농장에서 AI 발생 시, 모든 계약 농장에 대해 일시(48시간 이내) 이동중지명령 발령('18.상, AI SOP 개정)
 - 계열화사업자에게 수의사 채용(또는 위촉) 의무 부과
- 상대적으로 유리한 지위를 누리는 계열화사업자의 불공정행위 감시 강화('18.6, 「축산계열화법」 개정)
 - 계열화사업자 의무 등록제를 도입하고, 사업자의 사업 종합평가 결과에 따른 등급평가제 시행 및 평가결과 공표 추진
 - 계열화사업자는 사업현황, 계약조건 등이 포함된 정보공개서를 정부에 등록하고, 계약 전에 계약농가에 사전제공토록 개선
 - 계열화사업자별 계약농가협의회 설치 및 협의 의무화
 - 계열화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명문화, 부당행위로 인한 농가 피해 시, 사업자가 3배까지 배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 계열화사업자의 가축 소유권, 계약 농장 평가 방식 등 세부 제도 운영방식 개선방안 마련(상반기)
 - 전문가 T/F 운영, 연구용역(~3월) 등을 통해 불공정 해소

“ 가 가 ”

➔ 농산물 중심의 친환경농업 정책 범위를 생태·환경보전까지 확대 하고, 악취, 분뇨 등 축산업의 외부효과를 내부화하여 환경 부담 저감

*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 비율 : ('17) 5.0% → ('18) 5.2 → ('22) 8.0

*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누계): ('17) 1,029호 → ('18) 1,750 → ('22) 5,000

구 분	현 행	개 선
정책 범위	○ 개별 농가단위, 농법 중심 정책	○ 지구단위로 농업환경 보전 활동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도입
친환경 농업	○ 친환경농산물 생산 확대	○ 저투입농업 생산기반 확충 및 친환경 농산물 유통 활성화
친환경 축산	○ 분뇨자원화시설 악취방지 중심	○ 농장 및 광역단위 악취개선 지원 ○ 양분총량 관리 등 근본대책 검토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 도입]

□ 농업환경 개선이 필요한 지구와 지자체 간 협약을 통해 주민들이 환경보전 활동을 이행하는 농업환경 보전 프로그램 도입

○ 실증연구 지구를 선정(3~5개소), 시범 추진을 통해 프로그램 구체화('18)

○ 주민들로 구성된 사회적 경제조직 등이 스스로 관리계획을 수립

- 지역의 영세 고령농, 장애인 등 취약계층도 함께 참여하는 공동 활동 중심으로 프로그램 구성

* 영농·생활폐기물 수거, 전통농법·농업경관 보전, 공동공간에 화목·초화류 식재, 농업 및 공동체문화 유지·계승, 생태교란 식물 제거 등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 육성]

□ (생산) 저투입 생산기반의 확충을 통해 환경친화형 농업 유도

- 환경친화형 농업 실천 농가의 부담 경감을 위해 친환경농업 직불금 단가 인상 및 유기지속직불금 지급기한(3년) 폐지

* '17년 대비 품목별로 논 10만원/ha, 채소·특작·기타 10, 과수 20 인상

- 친환경농업 지구를 확대('18: 12개소)하여 생산기반 규모화

- 지역별로 특화된 저투입 농법 개발·보급을 위해 연구센터 확충

* 친환경농업 연구센터 10개소 건립('08~'18, 준공 8, 조성중 2)

□ (유통·소비) 다양한 유통채널 확충과 새로운 부가가치의 창출

- 친환경 공공급식, 직거래·홈쇼핑·온라인 등 다양한 판로 확충

* 서울시 공공급식 친환경농산물 공급 확대 MOU 체결(2월), 직거래 장터·홈쇼핑 런칭 지원(4개소), 온라인몰 입점 지원(2억원) 등

- 친환경농산물 구매 시 그린카드 포인트*를 지급하는 매장을 확대하여 환경보전을 위한 가치 소비에 인센티브 부여

* 친환경 생활 실천 시 포인트를 적립하고, 초록마을('17), 이마트·농협 하나로유통·올가홀푸드('18 예정) 등에서 사용

- 물류센터 활성화 및 광역단위 산지 유통조직 확대('17: 1개소→ '18: 4)

□ (가치확산) 친환경농업의 환경·생태보전 기능 확산

- 안전성 중심의 친환경농업 개념을 토양·생태계 건강의 유지·증진 기능까지 확대

- 친환경농업의 환경보전 기능을 중심으로 소비자 홍보·교육 확대

* 소비자 접점 매체를 통해 가치 홍보, 초등학생의 친환경 현장체험 지원 등

[양분 · 악취 문제 개선]

- (농장관리) 악취 민원이 많은 중점 악취지역(19개)을 중심으로 **광역 축산악취개선사업***을 확대('18년 3개소, '22년까지 총 23개소)
 - * 광역단위로 시설 개선, 컨설팅 등 패키지 지원
- 가축분뇨처리 **매뉴얼**을 보급하고, **특별관리 농장**을 지정하여 모니터링 강화
- 축사에 **악취측정기**를 설치('18년 45개소)하고, **축산악취관리센터** (축산환경관리원)에서 ICT를 활용한 **악취 모니터링** 추진
- **사후 관리강화**, 지정 기준 보완을 통한 깨끗한 축산농장 확대('18: 750개소)
 - * 축산환경관리원, 축산환경컨설턴트 등 활용, 철저한 사후관리
- (기반 · 제도) 분뇨 처리 기반을 확대하고, 농경지에 투입되는 양분의 총량을 관리하는 **양분관리제 도입 검토**(환경부 협조)
 - **대규모**(1일 70톤 이상 처리) **공동자원화시설 액비 성분 분석기**('18: 9개소) 및 **부속도 판정기 보급 확대**('18: 20개소)
 - * 공동자원화시설에 악취 측정기 설치 의무화
 - 양분관리제 도입을 위해 **양분수지 산정방법**(양분부하계수 등)의 **표준화**를 통해 **지역별 가이드라인 제시**(연구용역 추진)
 - 양분관리제 시행 지자체에 공공처리시설 지원 등 인센티브 제공
- (매몰지 사후관리) 기존의 매몰 방식을 **랜더링**(고온 분쇄) 등 소멸 방식으로 단계적으로 전환, 기 조성된 매몰지 **환경관리 강화**(연중)
 - '10~'11년 조성된 **4,751개** 매몰지 중 **환경오염 위험도가 높은 매몰지**부터 순차적으로 **발굴·소멸처리**('18년, 940개소)
 - 랜더링 시설(1개소), 이동식 소각·열처리 장비(20대) 지원('18)

[무허가 축사 적법화]

- (축산농가) 지역상담반, 자금지원 등 적법화 적극 지원
 - 지역상담반, 정부합동 점검반을 활용하여 축산농가 현장 컨설팅 지원
 - 시설비, 설계비, 측량비 등 적법화를 위한 자금 지원
 - * 시설개보수, 측량비, 설계비 등은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지원, 가축분뇨처리 시설 설치비용은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으로 지원
 - 시·도별 가능인력을 조사하여 건축사의 지역별 안배 유도 (건축사 협회, 농협)
 - 축산단체장 간담회 등으로 적법화 이행 독려 및 공감대 형성
- (관계부처) 중앙 TF 등 관계부처 협업 강화로 적법화 이행 지원
 - 무허가 축사 축산농가 중 노력하는 농가에 대한 구제방안 마련
 - 환경부와 협의하여 노력하는 농가 판단 기준을 마련하고, 적법화 추진을 위한 대안 강구
 - 현장 애로사항, 부서간 이견 사항 등은 중앙TF에서 해결·조율
 - 검토결과는 해당부처에서 지자체 담당부서로 통보토록 조치
 - 관계 장관 간담회를 통해 제도개선 방안 등 적법화 대안 협의
- (지자체) 시·도부지사 영상회의, 워크숍 등을 통해 지자체 협력 강화
 - 축산단체 요구사항에 대해 적극적인 검토 협조 요청
 - 시·도부지사 영상회의를 통해 지자체 추진상황 점검·독려
 - 지자체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반 운영으로 원스톱 민원처리

4

지역 먹거리의 생산과 소비를 연계해 나가겠습니다.

“ . . . ”

➔ 지역 내 생산-소비 연계로 생산자-소비자 상생 구조를 만들고, 먹거리와 관련된 아젠다를 종합 조정·관리하는 푸드플랜 수립

* 지역 푸드플랜 수립 지자체 : ('18) 8개 지자체 → ('22) 100개

구 분	현 행	개 선
정책 관점	○ 효율성 중심의 산업적 관점	○ 안전·신선한 먹거리와 상생·환경·복지 등 통합적 관점
거버 넌스	○ 생산자 중심의 마케팅 위주 생산자-수요처간 거버넌스 부재	○ 민관협의체 구성과 생산-소비 아우르는 푸드플랜 마련

[국가 푸드플랜]

□ 정부·생산자·소비자 등이 참여하는 민·관 거버넌스를 통해 핵심 아젠다*를 설정하고, 세부 실천과제 구체화

* 모든 사람에 대한 건강한 먹거리 보장, 국민 식생활·영양 개선, 환경보전형 농식품생산 확대, 먹거리 생산기반 관리, 로컬푸드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

○ 국가 푸드플랜 마련을 위해 부내 전담 T/F를 구성('18.1)하고, 식품 안전·복지·영양균형 등 세부 정책프로그램 구체화(연구용역, ~'18.9)

□ 관계부처 간 협의, 대국민 토론회, 지역 푸드플랜과의 상호 피드백을 거쳐 '국민 먹거리 종합계획' 수립·확정('18.12)

[지역 푸드플랜]

- 지역 유형별(농촌형, 도시형, 도농복합형)로 선도지자체를 선정(8개소)하여 지역 푸드플랜 구축 시범사업 실시('18.1~)
- (계획수립 연구용역) 지역 내 먹거리 심층 실태조사*, 맞춤형 조달 체계 구축, 정책과제 구성 등 지원
 - * ① 농가별 품목·생산규모·인증현황, ② 유통업체 현황·취급량·품목, ③ 급식, 직매장, 소매점, 마트, 가공·외식 분포현황 및 취급량 등 조사
- (교육) 지역 공무원, 영양사 등 관계자 이해도 및 공감대 제고를 위해 지역 푸드플랜 강의·워크숍 실시
- (거버넌스) 지역 내 합의를 통한 먹거리 과제도출을 위해 민·관 협의체 구성 및 토론회·공청회 개최 지원
- 지역 여건에 적합한 맞춤형 푸드플랜 기초모델* 개발·보급(~'18.11)
 - * (농촌형) 군소 시·군 수요통합 모델, (도농복합형) 먹거리 지역순환 모델, (도시형) 먹거리 보장형 도-농 공급협약 모델 등
-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기초모델을 정립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보급함으로써 우수사례 공유·확산
- 지역 푸드플랜 운용 시 요구되는 물류시설, 직매장, 안전성검사 등 관계부처·유관기관의 관련 재정사업을 포괄지원('18.10~)
- 원예산업종합계획, 과수산업발전계획 상 투자계획을 푸드플랜에 포함시키고 향후 동 계획을 푸드플랜으로 대체(~'19년)
- 「농산물 직거래법」을 개정하여 지자체의 푸드플랜 수립 및 수급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조항 명시(~'18.12)

5

국민이 균형잡힌 식생활을 하도록 돕겠습니다.

- “ ”
- ➔ 과일간식 등 건강한 먹거리를 경험함으로써 균형잡힌 식습관을 형성하고, 사회적 취약계층의 식품 접근성 개선
 - * 국민 식생활 만족도(%): ('15) 42 → ('18) 43.5 → ('22) 50
 - * 과일간식 지원 학생 국산과일 선호도 증가(%p) : ('17) - → ('18) + 5 → ('22) + 20

구 분	현 행	개 선
식생활 교육	○ 학교현장의 식생활 교육을 위한 정책 접근 부족	○ 식생활교육과 연계한 제철 과일 간식 제공(주 1회)
식품 복지	○ 소득계층 간 영양격차 지속	○ 농식품 기부활성화, 농식품 바우처 도입 등 국민 영양안전망 구축

[학교 과일간식 지원]

- (기반조성) 학교 과일간식 지원 관련 법적근거 등 마련('18.2)
 - 학교 식생활교육 지원 시 과일간식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 식생활교육지원법 개정안 법사위 계류 중
 - 과일 품질기준, 대상 학교 및 과일간식 가공업체 선정기준을 마련하고, 전국단위 공모로 적격 가공업체* 풀(pool) 제시('18.3)
 - * 공모일 현재 식품안전관리(HACCP) 인증 업체 중에서 심사하여 선정
- (간식지원) 전국 6천여 개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교실을 이용하는 학생(전체 24만여명) 대상 과일간식 제공('18.4)
 - * 지자체의 추경예산 편성이 지연될 경우 9월부터 공급
 - 1인당 150g*의 조각과일을 킷과일 등 신선편이 형태로 HACCP 인증 시설에서 가공하여 공급(학생 1인당 주 1회, 연간 30회)
 - * WHO가 권고하고 있는 11~18세 1회당 과일공급량(100~150g) 적용

[건전한 식생활 가치 확산]

- (식생활 교육) 다양한 식생활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지역단위 식생활 교육모델 구축 등으로 건전한 식생활 가치 확산
 - 초등학생 대상 식습관 교육(식습관 학교 운영) 등을 확대하고, 교육 현장(어린이집·학교 등)에 실용적 콘텐츠* 및 교안 보급
 - * 어린이집 '텃밭·미각교육' 지원, 영유아·초등학생 농업·농촌 체험교류 지원 등
 - 표준 교육프로그램 개발, 지역 연구 및 체험 인프라 조성 등 '지역 단위 식생활교육 시스템 구축' 시범추진('18년, 3개 지역)
- (식습관 개선) 아침밥 먹기 생활화와 쌀 간편식 소비 지원 등으로 균형 잡힌 영양섭취 및 식습관 개선 유도
 - 대학생 '천원의 아침밥' 캠페인 확산('17: 10개 대학 → '18 : 20), 기업 협력을 통한 직장인 대상 쌀 간편식 할인판매 등 추진

[취약계층 대상 농식품 지원 확대]

- (바우처) 저소득층 영양상태 개선을 위해 식생활 교육을 병행한 '농식품 바우처' 제도 도입 검토
 - 현금부조가 아닌 식품 구입액에 비례하여 지원하는 방식, 특정 품목 구매제한 등 올바른 식품 선택환경 조성 방안 검토
 - * 사업 추진체계 설계, 타당성 검토 등을 위한 연구용역 실시(2~9월, 5억원)
 - 사회적 취약계층 대상 농식품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개정 추진('18.12)
- (농식품 기부 활성화) 농산물 공급과잉 품목 등을 푸드뱅크와 협력을 통해 제공함으로써 취약계층 영양개선 및 수급안정에 기여
 - 농식품 기부 활성화 협의체 소속 단체·협회 대상 기부 의향 사전조사(3월)를 통해 정기적 기부 유도

4. 누구라도 살고싶은 농촌 조성

1 3만불 시대, 살고싶은 농촌으로 재생하겠습니다.

“

”

➔ 새로운 농촌뉴딜을 통해 일터·삶터·쉼터로서 살기 좋은 농촌을 조성하고, 농촌과 도시의 포용적 균형성장 도모

* '22년까지 활력거점(신활력) 100개소, 생활거점 1,600개소 조성

구 분	현 행	개 선
지역 역량	○ 고령화·과소화 등으로 지역역량 미흡	○ 대학·연구소·전문가가 참여하는 혁신주체 육성 및 역량배양
체감도	○ H/W 중심, 주민 체감도 저하	○ 농촌마을 주민을 고려한 체감형 S/W 프로그램 확대
농촌 환경	○ 도시화·난개발로 농촌경관 훼손	○ 자연·생태·문화 등 농촌다움복원

[활력 넘치는 일터]

□ 특화산업 육성과 생활·문화 기반 구축을 패키지로 지원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농촌 신활력 플러스*** 신규 추진('18: 10개소)

* ('18) 10개소 → ('19) 20 → ('20) 20 → ('21) 20 → ('22 누계) 100

○ 대학·연구소·주민 등이 참여하는 **혁신조직**을 구성하고, **자원 발굴, 산업기반 고도화, 생활문화 콘텐츠 개발** 등 특화산업 육성

- 정부는 지역순환경제, 생태문화 등 기본모델을 제시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창의적 사업 유도

○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을 포괄 지원하는 **'계획협약'** 시범 도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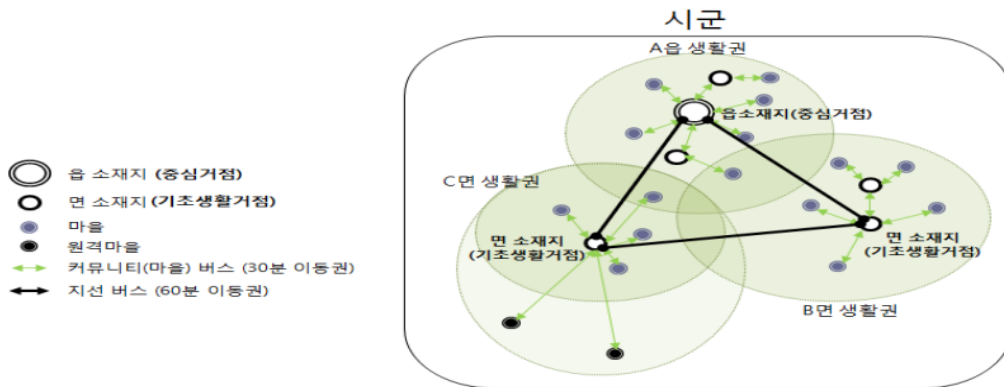
*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상호협약을 체결하고, 산업·문화·복지 등 동 협약에 포함된 **관련 사업은 일괄 지원**(개별사업 심사 생략)

[고르게 잘사는 삶터]

- 농촌 어디에서나 일상생활에 불편 없도록 중심지~기초생활거점 ~마을을 연결하는 '3·6·5 생활권*' 구축('18.하)

* (예시) : (30분) 노인·영유아 보건복지 서비스 / (60분) 창업지원, 평생교육 서비스 / (5분) 독거노인응급관리, 건강모니터링 등 안전·응급 연락체계

< 3·6·5 생활권 개념도 >



- (중심거점) 문화·교육 등 서비스 제공과 공동시설이 집중된 최상위 거점으로서 중심지(읍) 100개소* (~'22) 조성('18년 5개소)
 - * ('15~'17) 67 → ('18) 5 → ('19) 5 → ('20) 5 → ('21) 8 → ('22) 10
 - 중심지활성화사업 신규 추진 시, 배후마을 주민을 고려한 체감형 프로그램 도입 의무화(총사업비의 10%)
- (기초생활거점) 면소재지에 생필품, 돌봄교실, 건강상담·진료 등 기초서비스 공급거점 500개소(~'22) 조성('18년 100개소)
 - 접근성이 제한된 원격지, 인구 감소지역 등 취약지역 우선 고려
- (창의마을) 노후 주거지 정비, 무선방송·안전 가로등 등 생활편의 시설을 도입한 창조적 마을 1,000개소(~'22) 조성('18년 200개소)

[도시민과 함께 하는 쉽터]

□ 농업유산, 산림·하천 생태권, 공동체 등 농촌 자원 발굴 및 보전을 위해 '농촌다움복원사업' 신규 추진(개소당 20~30억원 지원)

○ 무분별한 도시화와 농촌 난개발을 방지하고, 아름답고 쾌적한 농촌 공간 구현을 위해 사업 콘텐츠 중점 지원

- 행정구역에 관계없이 마을, 읍면, 시군 등 다양한 범위 참여 허용

(예시) 역사·문학 탐방을 테마로 지역 내 자원을 연계한 '토지길'(하동군)



○ (조성배경) 소설 「토지」의 실제 배경인 하동 지역 곳곳을 역사문화탐방로 조성

○ (코스) 평사리 공원~들판~동정호~최참판댁~조씨고택~취간림~악양루~평사리공원(18km)

□ 농촌 경관, 농업기술 및 지역공동체 등 농업·농촌 자원에 대한 보전·관리 체계화로 농촌의 공익적 가치 증진

○ 농촌의 고유한 농업유산자원 지역을 대상으로 자원조사, 자원의 발굴·복원 및 환경 개선 지원

* 지원내용 : 3년간 15억원 지원(국비 70%), '22년까지 누계 20개 선정 추진(매년 2개소 선정)

○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 확대 및 세계중요농업유산 모니터링 등 보전가치가 높은 농업유산 보전·관리 강화

* 국가중요농업유산 '22년까지 총 20개소 지정(세계중요농업유산 4개소) 목표

□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개관('20년)을 위한 전시물을 확보('18.2~) 하고, 설계 및 건축공사 발주('18.10) 추진

2

농촌 주민의 삶의 질을 높ی겠습니다.

“ , , 가 ”

➔ 교통·의료·교육 등 기초생활 인프라를 확충하고 고령농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며 양성이 평등한 농업·농촌 구현

* 농촌주민 정주 만족도(10점 만점): ('16) 5.62 → ('18) 5.66 → ('22) 5.7

* 농촌형 교통모델 시행 지자체 수: ('17) 18개소 → ('18) 82

구 분	현 행	개 선
복지 증진	○ 일부 지역 100원택시 도입('17년 18개소)	○ 농촌형 교통서비스 전 군지역으로 확대
국민 연금	○ 농외소득이 많은 경우 국민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저소득농업인이 지원대상에서 제외 되지 않도록 국민연금법령 개정 추진
여성	○ 공동경영주 등록 시 배우자 확인 필요	○ 배우자 확인 없이도 공동경영주 등록 가능

[기초서비스 접근성 제고]

□ 농촌지역에 복지서비스 접근성을 높여 농촌주민의 삶의 질 제고

- (교통) 100원 택시 등 농촌형 교통서비스를 全 郡지역으로 확대 ('18: 82개소)하고, 지역주민의 참여를 통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 (의료) 농촌지역 분만 등 공공의료를 강화하고 농업인 직업성 질환에 대한 연구·예방 활동 추진
 - 분만취약지역('17년 34개군) 지정 기준 완화 및 서비스 지원 확대(복지부 협업)
 - 농업안전보건센터(5곳)를 통한 무료 건강검진 추진(5천명)
- (교육) 농촌 유학 활성화를 통해 농촌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1 읍·면, 1초·중학교' 설치·유지전략 마련(교육부 협업)
 - 농촌유학 시설·인적 역량 제고, 교육프로그램 내실화·다양화, 다큐제작 방영 등 홍보 확대('18년 유학센터 25개소, 유학생 수 260명)

- **(보육)** 소규모 보육시설 확대('18년 52개소), 영유아 혼합반 허용 등 추진 (복지부 협업), 농촌지역 영유아 아동수당 지급(9월)
 - * 월평균소득 90% 이하 가구 72개월 이하 영유아 대상 월 10만원 지급
- **(인력)** 취약농가에 영농도우미, 행복나눔이 등 인력 지속 지원
 - * 사고·질병·여성농업인 교육 시 영농도우미 지원(15천가구), 고령자·다문화 등에 행복나눔이 지원(14천가구)
- **(문화)** 지역자원을 활용한 주민 참여형 문화 활동 지원 확대
 - * 교육문화복지 27억원('17 : 175개소 → '18 : 200), 농촌축제 5억원(57개소 → 70)

[공적연금 지원확대]

- (농지연금) 가입률 제고를 위해 지속적 제도개선과 홍보 추진
 - 농지 감정평가율을 상향 조정(현행 80% → 90)하여 월지급액 증액*
 - * 월지급액 약 12.5%: (현행 80%) 100만원 → (90% 적용) 112.5
 - 신규상품* 위주로 가입대상자 및 자녀층에 대한 맞춤형 홍보로 가입대상자의 채무부담 및 자녀반대 등 부정적 인식 해소
 - * 일시인출형(종신), 전후후박형(종신), 경영이양형(기간)
 - (가입대상자 대상) 안내서 발송, 전화·상담, 직접 방문 등
 - (자녀층 대상) TV·신문 등 방송매체, 지하철·버스 광고, SNS 등
- (국민연금) 농업인에 대한 국민연금 지원 사각지대 해소 및 지원 확대
 - 저소득농업인이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관련 법령 개정
 -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 개정 : (현행) 농외소득이 농업소득보다 많은 경우 제외 → (개선) 과세소득·재산기준 적용(예 : 과세소득 27백만원 미만 지원, 재산 6억원 이상 제외)
 - 보험료 지원액 상향*, 보험료 지원 일몰 연장 추진('19 → '24, 복지부 협업)
 - * 기준소득금액(월 최대지원액) 인상 : '17년 91만원(40,950원) → '21년 100만원(45,000)

□ (기초연금) 소득·재산(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 인상

* '17년 단독가구 월 119만원(부부 190.4만원) → '18년 단독가구 131만원(부부 209.6만원)

○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인상 : '17년 20.6만원(부부 33만원) → '18년 25만원(부부 40만원) → '21년(안) 30만원(부부 48만원)

○ 기초연금 인상으로 농촌지역 65세 이상 노인 약 86만명에게 지급되는 연금액 증가(실제 월 평균지급액 '17: 약 18만원 → '18: 22)

[여성농업인 역량 강화]

□ 공동경영주 등록 절차 개선(1월), 후계농업인 교육에 양성평등 교육 의무화 및 교육 이수 후 부부공동경영협약 작성 유도

* 공동경영주 등록시 배우자 확인 서명란을 삭제, 여성농업인 스스로 공동경영 여부를 선택하도록 '농어업경영체법' 시행규칙 개정

○ 조합 업적평가 반영 등 제도개선, 교육·홍보를 통해 농협 조합원 및 임원에 여성농업인 참여 확대('17: 조합원 31.5%/임원 6.1% → '18: 35%/10)

□ 도우미 지원 확대, 결혼이민여성 대상 일대일 후견인제 및 여성농업인 특화 건강검진 지원 등 맞춤형 복지 제공 추진

○ 도우미 지원범위 확대(출산·사고·질병·취약가구 → 교육도우미 추가), 지원단가 인상(6만원 → 7), 결혼이민여성 멘토·멘티 풀 구축(1천건)

○ 여성농업인 특화 건강검진 실시를 위한 검진항목, 검진대상 및 소요재원 검토를 위한 연구용역 추진('18.하)

* 향후일정 : ('18) 연구용역 → ('19~'20)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개정 → ('21) 시범사업

○ 지자체의 '행복바우처' 지원연령 가이드(20~75세 이하)를 제시하고 지자체 평가에 반영하여 지원 확대 유도

3

사회적 경제 등을 활용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습니다.

“ 가
가 . ”

➔ 농촌융복합산업 지역단위 발전체계 고도화 및 사회적농업 확산 등을 통해 농업인 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지역단위 네트워크/농촌융복합산업지구(누적): ('17) 25개소/16 → ('18) 38/20 → ('22) 92/36

구 분	현 행	개 선
융복합 산업	○ 청년 농업인의 참여 저조	○ 융복합산업 경영체 성장 단계별로 청년 창업 지원체계를 구축
농촌 관광	○ 정부 주도의 관광 콘텐츠 개발·보급으로 차별화된 즐길거리 부족	○ 농촌현장 주도로 지역의 특색있는 농촌관광 콘텐츠 개발·운영
사회적 농업	○ 일부 지역에서 민간 차원의 사회적 농업 실천 사례 존재	○ 사회적농업 실천조직을 지원하여 (시범사업 9개소) 사회적농업 확산

[농촌융복합산업 경영체 육성 및 지역단위 확산]

□ (경영체 육성) 성장 단계별 지원으로 경영체의 안정적 성장 유도

- 성장 단계별 전문가 컨설팅 및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확대('17: 69개소 → '18:74)등을 통해 농촌융복합산업 경영체의 성장 지원
 - 사업모델 공모전을 개편하여 귀농·귀촌 인력의 참여를 확대하는 등 청년 창업 촉진('18.5)

○ 지역 내 농산물 사용, 계약재배 실적 등 지역 내 농업인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인증제 개편 추진*('18.3)

* 농촌융복합인증사업자 확대: ('17) 1,397개소 → ('18) 1,500(목표)

○ 농촌융복합산업 제품 판로 및 홍보 등을 지속 지원

○ 농촌융복합시설제도*의 현장 정착을 위해 지자체 조례제정 독려

* 특례 규정에 따라 국토계획법 상 생산관리지역에 음식점·숙박시설 등 설치 가능

- (지역단위 확산) 지역 특화산업 거점을 육성하기 위해 농촌 융복합 산업지구 사업 추진방식 체계화
 - 지역내 1·2·3차 산업주체 간 연계수준*을 평가하여 지구를 지정하고, 기술개발 컨설팅 도입 등 사업방식 개편('18.6)
 - * 지역 내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와 농업인 간 계약재배(수매), 협력방식 등
 - 청년·고령농 참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사업대상 선정

[현장 중심의 농촌관광 활성화]

- (지역 특화 콘텐츠 개발) 농촌현장 주도로 지역의 음식·숙박·체험을 연계한 특색있는 콘텐츠 개발·운영 지원
 - 농촌관광 협의체*를 통한 상향식 콘텐츠 개발방식 도입(6개소)
 - * 농촌관광 사업자와 전문가·현장활동가 등으로 구성
 - 동식물·곤충을 활용한 치유·건강증진 프로그램 개발·보급(10개소)
- (운영주체 육성) 농촌 정착 가능성이 높은 청년층을 농촌관광 전문인력으로 양성하고, 기존 운영주체의 역량 제고
 - 한농대 교과과정을 통해 농촌관광 교육을 실시하고, 도농교류법을 개정하여 농촌관광 해설사 양성·지원방안 마련
 - 농촌관광 등급제와 연계한 멘토링 시스템 신규 도입(200개소)
- (농촌여행 기반구축) 농촌관광 등급제를 개편하는 등 품질관리를 강화하고, 초·중학생 대상 농업·농촌 체험 활성화 지원
 - 농촌관광 등급제를 개편*하고(12월), 농어촌민박의 위생기준 강화** (6월)
 - * 도농교류법 하위법령 개정: 불시·사후평가 신설, 우수등급 대상 정책사업 우대 등
 - ** 농어촌정비법 및 하위법령 개정: 위생기준 구체화 등 숙박업에 준하는 기준 도입 등

[사회적농업 활성화 등 농촌 활력 증진]

□ 농업·농촌 가치를 활용하여 다양한 사회서비스를 창출하는 사회적 농업* 실천조직 육성

* 농업활동을 통해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돌봄·교육 등을 제공하여 사회적응을 돕고, 고용으로 연결하여 사회통합을 도모하는 활동

○ 사회적농업 실천 조직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운영 및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하는 시범사업 추진('18년 9개소, 528백만원)

* 프로그램 예시: 농업자원을 활용한 장애인 재활프로그램, 노인 돌봄서비스, 직업 농업교육 프로그램, 취약계층 대상 농산업 일자리 제공 등

- 농진청에서 개발 중인 치유농업 프로그램과 연계 추진

○ 사회적농업을 지원할 근거인 사회적농업법 제정 추진(12월)

□ 농촌 지역의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 (인력) 한농대, 귀농귀촌센터에 사회적경제 관련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농촌지역의 사회적경제 인력 양성

* 귀촌희망자 DB와 농촌의 사회적 일자리 매칭 추진

○ (창업) 지역 내 유희시설을 창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여 사회적농업 조직의 기반 마련 지원

- 사회적농업 조직은 자금 조달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지역기금 조성, 클라우드 펀딩 등을 통한 자금지원 방안 마련

□ 농업인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적근거 마련('18)

○ 농업인의 새로운 소득원 창출과 재생에너지 확산에 기여

5. 참여와 협력의 농정 거버넌스 구축

1 | 현장 중심의 농정 추진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 ”

➔ 현장에서 정책의 문제와 답을 찾고 농업인 참여형 거버넌스를 통하여 현장 눈높이에 맞는 농정 개혁 추진

구 분	현 행	개 선
현장 농정	○ 일회적이고, 성과 확인 곤란	○ 장관부터 직원까지 현장농정 체화 정책 개선 사례 창출(이력관리)
농특위	○ 관 주도의 농업·농촌정책 수립	○ 농업인, 정부가 함께 중장기 농업·농촌의 발전방향을 협의하는 대통령 자문기구 설치
농어업 화의소	○ 대의기구로서의 위치·역할 불안정	○ 농정참여 주체로서 위상 제고

[현장농정]

□ (계획수립) 주요 정책 분야별 현장 농정계획 수립*(분기)

* 주요 관심분야 선정 후 현장 방문일정 등 마련(필요성, 관심분야, 일정 등)

- 특히, 담당자가 현장농정의 주요 점검사항(왜/무엇을/언제/누구/어디서 /어떻게, 5W1H)을 확인할 수 있는 매뉴얼을 통해 계획의 실효성 확보

□ (이행점검) 주요 현장 이슈에 대해 현장의견 수용 노력, 정책 개선 이행단계를 평가(매월)하고, 현장 만족도* 재점검(분기)

* 실제 현장에서 제기한 의견 확인, 요구사항 부합, 합리적 대안 제시 여부 등

- 이행단계 평가에 따라 우수사례 후보군을 발굴하고, 현장 만족도 점검 결과 등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우수사례 선정

- (우수사례 확산) 현장농정 개혁 우수사례를 전 직원이 공유하고, 농업인과 국민이 공감하는 현장농정의 가치 창출
 - 장관 포상, 통합성과 평가 가점 등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온라인 네트워크(예시, 온-나라 포털 등)를 활용하여 자발적 확산 유도
 - 현장 공감도 제고를 위해 '농정개혁 시·도 보고대회'(1~2월중) 및 '농업인의 날(11월)' 등 대규모 행사를 활용하여 우수사례 확산

[농어업 · 농어촌특별위원회]

- (운영기반 조성) 농특위 설립 · 운영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 및 운영 예산 확보 등 운영기반 조성('18.상)
 - 농특위설치법 제정을 위한 국회·법정부 공감대를 형성하고 위원회 운영방안을 구체화한 하위법령 제정 등 추진
 - * 농특위 설치를 위한 법률안이 총 4건 발의되어, 국회 농해수위 계류
- (위원회 운영) 위원회 구성 및 발족, 위원회 분기별 위원회 개최 등 위원회 본격 운영 추진('18.하)
 - 다양한 의견수렴과 숙의를 위한 균형잡힌 위원회 구성 · 발족('18.9)
 - * 농어업계 · 소비자 · 관련 전문가 등 각계 대표 위원 구성, 분야별 분과 위원회 구성 등
 - 본회의 분기별 1회 개최, 필요시 수시 개최 등 연 최소 4회 이상 위원회 개최 추진

[농어업회의소 설립·운영 활성화 지원]

□ 농업인의 대의기구로서 한국형 농어업회의소 역할 명확화

- 지역 농정 추진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유도
 - 국가와 지자체에 대한 농업 정책 자문·건의 및 위탁사업 수행, 농업에 관한 조사·연구 및 교육·훈련 실시 등
 - * 거창농업회의소 : 농업인 역량강화 교육, 귀농·귀촌인 교육사업, 찾아가는 마을만들기 주민교육, 농촌공동체 우수사업 등 추진
- 기존 농업단체와 차별화될 수 있도록 고유 역할과 안정적 운영 방안 모색을 위한 한국형 농업회의소 모델 연구('18)

□ 농어업회의소 컨설팅 지속 지원('18.상, 2억원)으로 공감대 확산

- '17년 종료 예정이었던 시범사업을 '18년 이후에도 확대 추진하여 농어업회의소 설립 활성화 및 공감대 형성 노력 지속 추진
- 기초농어업회의소 시범사업 지역 선정, 설립준비 및 향후 운영방향 등 전반에 대한 컨설팅 지원(약 5~10개소)

□ 농어업회의소 설립 법적 근거 마련('18.하)

- 현재 발의되어 있는 농업회의소법안(2건) 국회 논의 대응, 전문가 및 현장의 의견수렴 등 농어업회의소법 제정 지원

2

지방과의 협력 농정을 강화하겠습니다.

“ 가 , . ”

➔ 지방의 농정역량 제고 지원 및 중앙·지방 간 역할 분담 명확화 등 자율적·혁신적인 지방분권 농정 구현

구 분	현 행	개 선
지방 농발	○ 형식적인 계획 수립, 환류 미흡	○ 주기적 이행 점검 및 실행력 제고를 위한 환류체계 구축
농정 소통	○ 중앙정부 주도 농정	○ 농정현안 협의회 정례화를 통한 소통 강화
역량 강화	○ 중앙정부의 획일적인 농정 지도	○ 지역과의 스킨십 강화를 통한 자발적 역량 강화 유도

[지방의 농업·농촌발전계획 수립 지원]

□ 자체 농정 여건과 농정 방향을 바탕으로 각 지자체별 5년 단위 ('19~'23) 농업·농촌발전계획 수립 유도

- 지방 계획수립지침 마련('18.3), 전문가 자문단 구성 등 중앙은 지방 계획 수립을 지원
- 농식품부 소관 사업의 사업자 선정 시, 지방 계획에 반영된 사업을 우선 선정하고, 농업 관련 정부업무평가와 연계하여 지원
 - * '19년부터 농촌지역개발사업자 선정과 연계하고, '20년 이후 농업 생산·유통·가공·소비 관련 타 사업으로 연계 추진
- 지방 계획 이행을 위해 필요한 사업 군에 대해 일괄 지원하는 방식으로 예산 지원체계 개편 추진
- 지방 농발계획에 대한 주기적 이행 점검과 우수 지자체 시상 등 환류체계 구축으로 실행력 제고

[중앙-지방 간 농정소통 강화]

□ 중앙-지방 간 농정 현안 협의회 정례화 등 상호 소통 강화

- 행정부지사·농정국장 회의 및 시·군 농정협의회 개최 등으로 지역 현장 의견 수렴 및 농정 홍보 추진
- 주요 농정대책 마련 시에는 지자체·현장 농업인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 순회 설명회 개최 등으로 공감대 형성

□ 농정개혁위원회* 시·도 보고대회 개최('18.2~3월) 추진

- * 현장 농업인, 생산자·소비자단체, 지자체 등 범 농업계가 참여하여 현장 중심의 농정개혁방향을 모색하는 농식품부 장관 직속 자문기구
- '17.8월 위원회 발족 이후 중앙 단위에서 추진한 농정개혁성과를 지역으로 확산하고, 지역과 함께하는 농정개혁 본격화
 - 지자체 제안 과제 등에 대해 농정개혁위원회 논의를 통해 농정 개혁 핵심과제를 도출하고, 추진방안 마련('18.상)

[지방 농정추진역량 강화]

□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수행 가능하고, 지방이양이 가능한 사무를 조사·발굴하는 등 지방분권 농정 추진을 준비

□ 업무 분야별 중앙·지자체 농정 담당자 워크숍 개최

- 농정방향에 대한 현장 공감대를 형성하고, 농정 우수 사례 발굴·공유·홍보 등으로 성과 확산
 - 새정부 국정과제·비전 공유를 위한 시장·군수·구청장 간담회 개최('18.2)

□ 시·군 공무원을 대상으로 컨설팅, 교육·연수 프로그램 마련 등 지자체 농정 담당자의 전문성 제고

3**현장과 혁신을 최우선으로 하는 FIRST 농정을 추진하겠습니다.** **현장(Field)**

- 정책 담당자가 팀단위로 현장을 방문해서 문제와 답을 찾는 '현장 방문의 날' 운영
- 성과 공유 토론회와 우수사례 발표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한다.

 혁신(Innovation)

- 매주 수요일 퇴근전 60분간 'FIRST 60토크'를 통해 정책과 일하는 방식을 혁신하는 방안 도출
- 월 1회 전직원 '역량 FIRST 강좌'를 실시해서 사회·문화 트렌드 등 직원들의 인문 교양 역량 강화

 책임(Responsibility)

- 의견 수용 노력 정도, 만족도 등 매월 현장농정 성과 평가
- 우수사례와 추가과제 발굴을 위한 지역 순회 농정성과 설명회 개최

 공감(Sympath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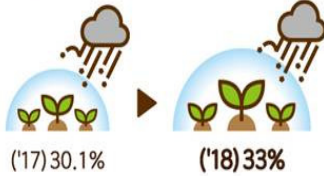
- 농정개혁위원회를 운영하고, 청년농 타운홀 미팅을 분기별로 개최하는 등 고객과의 소통 확대
- 국민 생각함, 국민 정책디자인단 운영하고, 클라우드 시스템을 통한 정보 공유를 통해 부내외 소통 강화.

 신뢰(Trust)

- 주요 격무 직위 근무자에게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 검토.

• 1. 농업인은 소득·재해 걱정을 덜게 됩니다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



채소가격안정제 참여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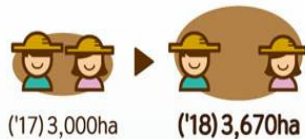


통합마케팅 출하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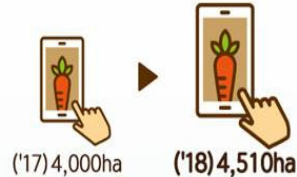


• 2. 농식품 산업은 지속가능한 성장의 토대를 마련합니다

2030세대 비축농지 임대지원



스마트팜 보급 확대(누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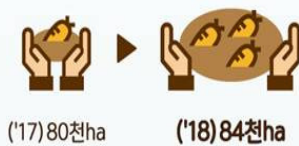


스마트축사 보급(누계)



• 3. 소비자의 농축산물 안전에 대한 신뢰도가 올라갑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



깨끗한 축산농장(누계)



GAP 인증농가 비율



• 4. 농촌은 누구나 살고 싶은 공간으로 변해갑니다

100원 택시 개소수



귀농 가구수



농지연금 월지급액(평균)



2. 보도자료

2018년 1월 29일 11:00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담당관실 윤원습 과장(044-201-1311), 김형식 서기관(1317) / 제공일 : 1월 29일 (총 18매)
김세진 사무관(1324)

걱정없이 농사짓고 안심하고 소비하는 나라

3만 3천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농정을 추진하겠습니다.

= 2018년 농림축산식품부 업무계획 =

《 주 요 내 용 》

□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월 18일과 23일 두차례에 걸쳐 국무총리에게 올해 핵심정책을 보고하고, 이를 포함한 **2018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업무계획**을 발표하였다.

* 업무보고 주제: ①농업 대변화 원년, 일자리를 대폭 늘리고, 소득안전망을 확충하겠습니다. ②국민건강의 첫걸음, 안전하고 깨끗한 농장을 만들겠습니다.

① 농식품 부문에서 총 33천개(22년까지 17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

- 청년농업인 1,200명에게 영농정착지원 자금 지원(월 최대 100만원)과 함께 자금·농지·교육 등을 종합지원하여 청년 창업붐을 일으킨다.
- 반려동물, 승마산업 등 3만불 시대 수요 증가 산업과 종자, 농생명소재와 첨단 기자재 산업 육성을 통해 일자리를 만든다.

② 쌀 등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시스템을 강화한다.

-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을 통해 벼 재배면적 5만ha를 감축하고, 식량원조협약(FAC)을 통해 5만여톤(460억원)을 해외원조한다.
- 주요 채소의 채소가격안정제를 확대*하고, 과수·기타 채소는

주산지협의회와 의무자조금 단체를 중심으로 재배면적과 출하량을 조절하는 가격안정시스템을 체계화한다.

* (17) 무, 배추, 마늘, 양파 / 생산량의 8% → (18) + 고추, 대파 / 10% → (22) 30%

③ 국민 눈높이에 맞는 동물복지형 축산을 만든다.

- 악취없는 축산업을 위해 분뇨 처리 매뉴얼 보급, 특별 관리 농장에 대한 시설개선, 컨설팅 집중 지원 등 농장관리를 강화한다.
- 7월부터 신규 산란계 농장에 넓어진 사육 밀도를 적용하고, 기타 축종의 사육면적도 단계적으로 넓혀간다.
 - 가금 사육지역은 농장간 거리가 500m이상 되도록 재배치를 추진한다.
- 과거 조성된 구제역 매몰지 중 오염도가 높은 940개소를 우선 발굴·소멸 처리하고, 2022년까지 모두 처리한다.

④ 직불금을 확대하고, 경영안전망을 확충한다.

- 직불금 단가를 지속 인상하고, 소득보전 중심의 직불제를 공익 창출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확대·개편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 농약대·대파대 등 재해복구비 단가를 실거래가의 52%에서 66%로 대폭 인상하고, 농업인 안전보험의 농가부담도 경감한다.

⑤ 혁신선도과제인 스마트팜의 창업 생태계를 구축한다.

- 창업보육센터 운영, 종합자금 지원, R&D 바우처, 경영회생자금 지원 등으로 준비-창업-성장-재도전의 창업생태계를 조성한다.
- 창업 보육, 생산기반시설이 통합된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조성한다.

⑥ 농산물 안전관리를 기본부터 충실히 다진다.

- 친환경 인증의 안전관리 기준을 강화하고, 부실 기관, 위반 농가 제재를 강화한다.
- 지역 주민의 환경보전 활동을 지원하는 농업 환경 보전 프로그램 도입을 준비한다.

- 소면적 작물재배에 필요한 농약까지 직권 등록하고, 농약 이력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모든 농약의 판매기록을 의무화한다.

⑦ 국민의 균형잡힌 식생활을 지원한다.

- 어린이의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위해 올해부터 전국 6천여개 초등학교 돌봄교실 학생 24만명에게 과일간식을 제공한다.
- 국민건강과 농가 경영비 절감에 기여토록 마블링 중심의 쇠고기 등급 기준을 육색, 지방색을 종합평가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

⑧ 지역 푸드플랜과 국민 먹거리 종합계획을 수립한다.

- 지역 내 생산과 소비를 연계한 안전한 먹거리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푸드플랜 수립을 지원한다(8개 지자체).
- 생산과 소비, 안전관리, 식생활, 환경보전을 아우르는 국민 먹거리 종합계획을 수립한다.

⑨ 농촌맞춤형 복지체계를 강화한다.

- 농지연금 활성화를 위해 월지급액을 12.5% 인상(농지 감정평가액 상향)하고, 홍보를 강화한다.
- 100원 택시를 82개 전 郡 지역으로 확대 운영하고, 장애인 등 농촌 취약계층에게 농업활동을 통한 돌봄,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 농업 실천조직을 육성한다.

⑩ 현장과 혁신을 최우선으로 하는 FIRST* 농정을 추진한다.

- * 현장(Field), 혁신(Innovation), 책임(Responsibility), 공감(Sympathy), 신뢰(Trust)
- '현장 방문의 날'을 운영하고, 'FIRST 60토크'를 통해 정책과 일하는 방식을 혁신한다.
- 청년농 타운홀 미팅을 분기별 개최하는 등 고객소통도 확대한다.
- 농특위, 농업회의소 설치를 적극 추진하여, 협치 농정을 강화한다.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 이하 농식품부)는 지난 1월 18일과 23일 두차례에 걸쳐 국무총리에게 올해 핵심정책을 보고하고, 이를 포함한 2018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업무계획을 발표하였다.

* 업무보고 주제: ①농업 대변화 원년, 일자리를 대폭 늘리고, 소득안전망을 확충하겠습니다. ②국민건강의 첫걸음, 안전하고 깨끗한 농장을 만들겠습니다.

[2017년 농정성과]

□ 농식품부는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현장 중심의 농정 개혁으로 농정 신뢰를 회복하고, 향후 5년간의 국정과제 추동력 확보에 주력하였다.

○ 이전 정부에서 주어진 예산과 정책 환경의 제약 하에서 과거와는 다른 신속한 의사결정과 과감한 선제조치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농정 성과를 창출하였다.

□ 한발 빠른 대처로 20년전 수준에 머물던 쌀 값을 회복하였다.

○ 역대 최초로 햅쌀 가격 형성 전인 9월말 수확기 대책을 발표하고, '10년 이후 최대 시장격리 물량인 37만톤을 포함한 총 72만톤을 정부가 매입하는 수확기 대책을 조기에 확정하여 시행하였다.

○ 그 결과 쌀값은 대책 발표 이후 15만원을 넘어섰고,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 ('17.6) 126,767원/80kg → (10) 151,013 → (11) 153,048 → (12) 155,579 → ('18.1.15) 158,712

○ '대학생 천원의 아침밥' 등 쌀 소비 촉진 정책과 쌀가공 식품 개발 지원 등을 통해 매년 1~2.6kg이던 쌀 소비량 감소 폭이 작년에는 0.1kg으로 크게 줄어들었다.

○ 아울러, 국산 쌀 5만톤(460억원) 원조를 위한 식량원조협약(FAC) 가입절차를 완료하였다.

□ 붉은불개미, 계란에서 살충성분 농약 검출, AI 발생 등 위기상황에 신속히 대응하였다.

- 붉은불개미 발견 시 긴급 방역조치를 통해 사태를 조기에 수습하였으며,
- 계란에서 살충 성분 농약이 검출된 즉시 모든 농장의 출하를 금지하고, 전수검사를 실시하여 부적합 계란을 전량 폐기하였다.
 - 재발방지를 위해 관계부처 합동 '식품안전개선종합대책'을 수립하였다.
- AI는 H5형 항원 검출 즉시 이동통제와 예방적 살처분을 실시하고,
 - 계열화사업체에서 AI가 발생할 경우, 소속농장 전체에 이동중지명령을 발동하는 등 과거보다 신속하게 조치하고 있다.
- 그 결과 전년 동기 발생건수 340건에 비해서 이번 겨울에는 발생건수가 전년의 4.7% 수준인 16건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 쌀 우선지급금 환급, 용산 화상경마장 문제 등의 갈등을 해소하였다.

- 적극적인 현장소통으로 '16년산 우선지급금 환급 사태'를 원만히 해결*하고, 타협을 통해 마사회 용산 장외발매소를 폐쇄하였다.
 - * 농식품부-농업인단체-농협간 협약(8.24)을 통해 우선지급금 환급 해결방안 마련

□ 청탁금지법의 농산물과 가공식품의 선물비 가액기준을 현실화하여 소비촉진을 도모하였으며,

- * 농수산물과 농수산물이 50% 넘게 포함된 가공품의 선물비 상한액 상향 (5만원→10), 경조사비는 5만원으로 낮추되 화환 포함 시 10만원까지 허용
- ** 최근 설 선물 사전예약 판매액이 전년에 비해 적게는 22%에서 최대 160%까지 증가
- 농산물 가공품의 원재료 비율을 확인할 수 있는 스티커 부착, 품목별 소비촉진 대책 마련 등 후속 조치를 추진하였다.

[2018년 농정추진방향]

- 2018년에는 2017년의 농정 성과를 바탕으로 농업의 대변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 쌀 중심의 농업을 개혁해서 전체적인 식량 자급률, 농지이용 체계와 연결된 근본적인 작부체계의 전환과 재배치를 추진하고,
 - 쌀값 회복으로 절감된 예산과 자원은 밭작물 기반정비, 축산업 근본적 개선, 공익형 직불 확충 등에 활용해서 농업의 체질을 바꿔나간다.
- 축산은 그동안 수익성에 중점을 둔 성장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환경 부담을 줄이고, 축산사육 환경을 동물복지형으로 개선한다.
- 채소, 과일 등 원예농산물은 품목별·지역별로 생산자를 조직화하고, 향후 전국 조직으로 키워나가면서,
 - 주산지 협의회, 의무자조금 등 품목별 조직을 활용, 선제적으로 수급을 조절하는 가격 안정시스템을 구축한다.
- 4차산업혁명 기술 중심의 과학 영농기술이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에 대응하여 자율주행, 빅데이터 등 첨단기술 R&D를 확대한다.
 - 먹는 농업을 뛰어 넘어 농생명소재, 반려동물, 승마 산업 등의 분야로 농정의 외연을 확장한다.
- 2018년 문재인 정부는 개개인의 삶의 기반인 일자리를 확대하고, 정책과 예산으로 국민의 삶을 꼼꼼하게 챙겨서 국민이 삶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해 나갈 것이며,
 - 농림축산식품부도 일자리를 대폭 늘리고, 농업인과 국민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현장 중심의 농정 혁신을 추진한다.
 - 2018년 농식품부 업무계획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I. 농산물 가격안정과 농가 소득안전망 확충

1. 쌀 등 식량작물의 수급을 안정시키겠습니다.

- 쌀 중심의 수급 정책을 쌀 소비 촉진, 밭작물 자급률 제고 등과 연계된 식량작물 생산안정화 정책으로 전환한다.
 - 우선,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을 통해 벼 재배면적 5만ha를 감축(평균 340만원/ha 보전)한다.
 - 타작물에 미치는 수급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사료·지역특화작물 등 자급률 제고가 필요한 작물 중심으로 전환한다.
 - 고품질 벼 개발·보급을 확대하여 쌀 품질을 고급화하고, 식생활과 소비패턴 변화를 감안, 소포장(5kg) 유통을 확대한다.
- 쌀 생산조정에 따른 콩 생산 확대에 대비하여 수요 확대를 추진한다.
 - 콩 정부수매량을 확대하는 한편, 수입량(TRQ 증량)은 최소화하고, 작황 등을 고려하여 '18년 수확기 추가수매를(5천톤) 검토한다.
 - * 정부수매량 : ('17) 30천톤 → ('18) 35~40 / 대두 TRQ 증량 : ('17) 53천톤 → ('18) 30

2. 생산자 조직화를 통해 농산물 가격을 안정시키겠습니다.

- 주산지협의회를 중심으로 주요 채소에 대해 사전 수급조절 의무를 부과하고 평년가격의 80%를 보장하는 채소가격안정제를 확대하고,
 - * ('17) 무, 배추, 마늘, 양파 / 생산량의 8% → ('18) + 고추, 대파 / 10% → ('22) 30%
- 과수·기타 채소도 주산지협의회와 의무자조금 단체를 중심으로 생산자 단체를 조직화해서 재배면적과 출하량 조절을 조절하는 가격안정시스템을 체계화한다.
- 파종부터 수확까지 단계별 수급조절매뉴얼 마련과 빅데이터·드론 등을 활용한 농업 관측 고도화로 가격안정시스템을 뒷받침한다.

3. 농업인의 자연재해 걱정을 덜어드리고, 안전보험을 강화하겠습니다.

□ 농약대, 대파대 등 재해복구비를 대폭 상향 지원*한다

- 재해피해 발생시 복구비 지원(대파대·농약대) 단가를 실거래가의 66%(현행 52%) 수준으로 인상해서 적용한다.

* (농약대) 채소류 30만원→ 168, 과수 63만원→ 175, 일반작물 22만원→ 52
(대파대) 엽채류 297만원→ 410, 과채류 392→ 619, 일반작물 220만원→ 266 등



- 나아가,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에 농작물 피해도 포함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18.하)해 나갈 예정이다.

□ 재해보험은 주요 농작물(사과·배·벼) 재해보험료를 상한 설정과 무재해 농가 보험료 할인으로 농가 부담을 완화*한다.

* (사례) 정읍시 사과농가 재해보험료 : 작년 260만원/ha → 올해 162



- 대상품목 확대(신규도입: 메밀, 브로콜리, 양송이·새송이 버섯)와 병충해 보장 품목 추가(고추) 등으로 보장수준도 강화한다.

□ 농업인 안전보험료를 작년에 비해 10% 인하하고, 산재보험 수준으로 보장을 강화(간병·휴업급여 등)한 농업인안전보험 상품을 보급한다.

○ 작년에 비해 4만원 정도 더 부담하면 산재보험 수준의 보장을 받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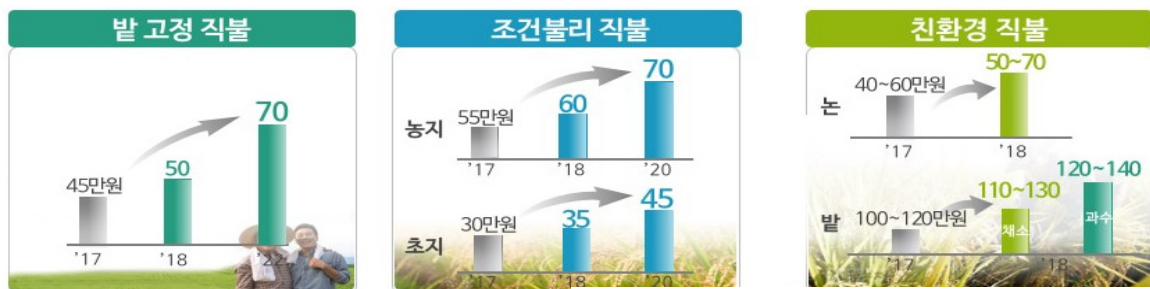
* 일반형 보험료 96천원(농가부담 48천원) 간병급여 500만원, 상해질병 최대1천만원
 산재2형 보험료 181천원(농가부담 90천원), 간병급여 5,000만원, 상해질병 최대5천만원



4. 직불금을 확대하여 농업인 소득을 높ی겠습니다.

□ 쌀·조건불리 직불금 단가 인상*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현재의 직불제를 환경·사회적 공익을 창출하는 농업 활동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확대·개편하는 방안을 마련한다('18.하).

* (쌀) '17년 : 45만원/ha → '18년 : 50 / (조건불리) 농지 55 → 60, 초지 30 → 35



* 쌀고정 및 조건불리 직불금 지속 인상 (ha당 5만원)

<직불제 개편방향(안)>

○ 쌀고정·밭고정·조건불리 직불을 '22년까지 통합하는 한편, 환경보전 등 상호준수의무를 부과(기본공익)하고, 지원 확대

* 농업 생산과 관련한 환경·사회적 의무를 농업보조 지급 조건으로 부과

○ 부가적 공익창출을 위해 특정목적형 프로그램 방식 도입

* (예시) 친환경·경관보전 직불 등을 (가칭)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으로 통합 운영

Ⅱ. 농식품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토대 마련

1. 농식품산업과 농산촌에서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 청년 영농정착지원, 청년농 농지지원, R&D 바우처, 농식품벤처펀드, 농신보 우대보증 등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해서,
- 농식품 산업과 농산촌에서 올해 총 3만3천개 '22년까지 17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
 - 청년 창업농 육성, 스마트팜 확산, 식품·외식 창업취업 지원, 농식품 벤처 활성화 등으로 일자리 4.7천개 확대(~'22년, 34천개)
 - 반려동물·승마 등 3만불 시대 새로운 일자리 5천개 발굴(~'22년, 49천개)
 - 종자·곤충·기능성식품 등 첨단 미래 산업 일자리 4.3천개 창출(~'22년, 28천개)
 - 산림복지 서비스 등 산림을 활용한 특화 일자리 19천명 창출(~'22년 60천개)
- 농식품 분야일자리 TF를 구성해서 분야별 성과를 점검한다.

2. 청년들이 농업을 직업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올해부터 청년농업인 1,200명을 선발하여, 영농정착지원 자금 월 최대 100만원을 지급하고, 자금·농지·교육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 청년·신규 농업인의 농지매입을 우선 지원하는 생애 첫 농지취득 지원 사업*을 신규 추진('18.1)하고,
 - * 농지취득 이력 없는 농업인(55세 이하) 농지매입 시, 1ha이내 45천원/3.3㎡ 지원(일반 35천원)
 - 창업농의 경험 축적을 위한 경영실습 임대농장 조성('18.하)과 함께, 농신보 우대보증*, 모태펀드를 활용한 자금 지원을 확대한다.
 - * (현행) 보증한도 2억원, 보증비율 90% → (개선) 보증한도 3억원, 보증비율 95%

◇ 청년농 패키지 지원 내용

분야	관련사업	주요 지원 내용
초기 안정	영농정착지원금	▶(요건) 재산·소득 일정 기준 이하 등 ▶최대 100만원/월, 최장 3년간
농지	맞춤형 농지지원	▶한도 2ha, 임대 우선 지원
자금	창업 자금 융자	▶후계농 자금(한도 3억원) 또는 귀농 창업자금(한도 3억원)·주택자금(75백만원)
	농신보 우대보증	▶창업자금 농신보 보증비율 95%(기존 90%)로 상향 ▶전문교육을 이수하고 스마트팜을 창업하는 경우 한도 30억원(개인), 보증비율 확대 추진
교육	경영실습 임대농장	▶시설을 갖춘 농장(3,000㎡이내) 임대(30개소)
	선도농가실습지원	▶월 80만원 한도 교육훈련비 지원(창업예정자)
주거	귀농인의 집	▶주택 임대(1년이내)
	체류형지원센터	▶거처 및 교육지원(1년이내)

3. 스마트 농업 확산과 함께,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겠습니다!

□ 스마트팜을 확산하여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농업의 혁신성장을 이끌고, 준비-창업-성장-재도전의 스마트팜 창업생태계를 구축한다.

* '17년 4천ha, 750호 수준의 스마트 온실, 스마트 축사를 '22년까지 7천ha, 5,750호로 확대

○ 스마트팜 창업보육센터(시범 3개소, 60명)를 통해 청년들이 팀단위로 창업교육·경영실습 등 창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고,

- 스마트팜 종합자금* 및 농식품 벤처펀드 등 창업 자금지원과 R&D 바우처 제공으로 기술지원을 강화한다.

* ('18년 규모) 1,000억원, (대출금리) 시설 1%, 운전 1.5%, (상환) 5년 거처 10년 상환



- 창업보육부터 생산기반 시설까지가 통합된 혁신거점인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22년까지 4개소 조성한다.

◇ 스마트팜 창업농 지원내용

- (창업보육)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18년 60명 선발) 지원(최대 1년 8개월간 교육비 무료, 농업법인 취업지원 등)
- (정착지원금) 3년간 최대 100만원의 영농정착지원금 지급
- (자금) 스마트팜 종합자금(금리1%, 최대 30억원, 5년거치 10년상환)
- (펀드) 스마트팜 펀드(총 조성액 500억원, '20년까지 투자잔액 390억원)
- (농지) 매입비축농지 장기임대(10년 이상) 지원

□ 3만불 시대 성장잠재력이 큰 반려동물·말 산업 등을 중점 육성한다.

- 반려동물 관련 자격증을 신설 추진('18.3월)하고(동물간호복지사, 애견미용·행동교정 등), 공공장묘시설('18년 2개소) 등 관련 서비스업을 지원한다.
- R&D, 유기사료 인증제 도입 등을 통해 펫사료 산업도 육성한다.
- 승마시설 개선(15개소), 농어촌형 승마길 조성(170km) 등 기반 조성과 함께, 학생승마체험(7만명), 유소년승마단 확대('21년까지 100개소)로 말산업 저변 확대도 추진한다.

□ 종자·농생명 소재 등 생명산업을 육성하고, 4차산업혁명에 대응한 과학 영농기술을 확충한다.

- 천연고분자, 동물백신을 비롯한 7대 중점 분야의 기능성 소재 개발 R&D를 확대하고,

* 농생명 소재 산업화 기술개발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추진('18.상)

- 농식품 데이터를 민간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고,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한 정밀 생육환경 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 자율주행 트랙터, 드론 등 첨단 농기자재 보급을 위한 R&D 투자와 사업화를 지원한다.

* 미래농정 현안해결을 위한 발농업 기계화, ICT 융복합 등 7대 분야에 집중 투자

4. 세계와 경쟁하는 식품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 식품·외식 산업 성장기반을 다지고, 청년 취창업을 지원한다.
 - 1인가구 증가 등 시장변화에 맞춘 가정간편식(HMR), 고령친화 식품 육성을 위해 R&D 및 사업화 추진에 15억원을 지원한다
 - 한식진흥법 제정으로 체계적 한식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농식품 수출업체에 수출바우처를 제공하여 맞춤형 수출지원도 강화한다.
- 식품·외식 창업희망자 대상 창업공간 제공과 청년들의 해외 취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청년 일자리를 확대한다.

Ⅲ. 국민이 안심하는 농축산물 생산과 환경 관리

1. 농장의 안전관리시스템, 기본부터 충실히 다지겠습니다.

- 농업용 저수지와 관정의 수질 모니터링 정화사업을 추진하고, 농약 사용기준을 철저히 지키고 기록한다.
 - '19년부터 시행되는 농약 잔류허용기준 강화*에 대비, 소면적 작물재배에 필요한 농약까지 직권 등록하고, 농약 이력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모든 농약의 판매기록을 의무화한다(가정·원예용 제외).

* 농약허용물질관리제도(PLS, Positive List System) : 미등록 또는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농약 원칙적 사용금지(불검출 수준인 0.01ppm 적용)

□ 인증제 개편, 생산·유통 기반 확충을 통해 친환경 농업을 내실있게 확산해 나간다.

○ 친환경 인증의 위생·관리 기준을 상향하고, 상습 위반자에 삼진아웃제*를 도입하는 등 사후관리를 대폭 강화한다(~'18.상).

* 인증취소 처분을 3회 받은 농가는 친환경 인증에서 영구 퇴출

○ 친환경 실천 농가의 부담 경감을 위해 친환경농업 직불단가를 인상*하고, 유기 지속직불금 지급 기한을 폐지한다.

* '17년 대비 품목별로 논 10만원/ha, 채소·특작·기타 10, 과수 20 인상해서 과수의 경우 ha당 120만원에서 140만원으로 인상

○ 또한, 친환경 물류센터 활성화와 광역단위 친환경 산지 유통조직 확대(1개소→4),를 통해 친환경 농산물 유통기반을 확충한다.

□ 아울러, 농업환경 개선이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주민들의 환경보전 활동을 지원하는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 도입을 준비한다.

○ 2018년에는 3~5개 지역을 대상으로 실증연구와 시범 사업을 추진하고, 세부적인 사업방식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2. 국민 눈높이에 맞는 동물복지형 축산을 만들겠습니다.

□ 가축질병 예방과 식품안전 확보를 위한 동물복지형 축산 로드맵을 만들어 사육밀도, 시설·관리 기준을 강화한다.

○ 산란계 신규농장은 금년 7월부터 보다 넓어진 사육밀도 기준을 적용하고, 육계, 임신한 돼지의 사육면적을 단계적으로 넓혀나간다

* 산란계 사육밀도를 0.075㎡/마리(현행 : 0.05)로 완화(신규 농가는 '18.7월부터, 기존 농가는 '25.7월부터 적용)

- 축사에 암모니아 농도, 조명 기준을 설정하여 가축 건강을 관리하고, 학대 행위를 금지한다.
- 강화된 기준에 맞는 시설 개보수·신축 등에 30% 보조율을 적용한 자금을 지원하고, 농가의 사육환경 개선을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사육환경 표시제를 도입한다.(‘18.하)
- 가금 밀집사육지역 내 농장간 일정 간격(500m)이 확보되도록 농장의 이전, 인수·합병 등을 지원하고, 철새도래지 인근 3km 이내 신규 가금농장 설치는 금지한다.



- 가축질병 상시 예방체계 구축과 함께, 새로운 방역관리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 모든 가금 전업농장·부화장(5,676개소)에 CCTV를 설치하여 상시로 방역상황을 점검하고, AI 항원뱅크 구축 등을 추진한다.
 - 살아있는 가금류 유통 금지를 위해 산 가금 유통 방역 프로그램*을 시범 실시(3월)하고, 농장부터 판매단계까지 방역·유통 관리한다.
 - * '19년부터 프로그램 미등록 시 산 가금 유통 불가('22년부터 산 가금유통 금지)
 - 구제역 예방을 위해 소, 돼지, 염소 등 백신 일제 접종을 정례화하고, 백신 제조시설 건립('18~'19) 등으로 백신 국내생산체제도 구축한다.

□ 가축분뇨·악취 등 축산업으로부터의 환경부담 완화를 위해 중점 악취지역(19개)을 중심으로 광역 축산악취 개선사업*을 지속 확대하고('18년: 3개소→ '22년: 23), 깨끗한 축산 농장을 확대(750개소)한다.

* 광역단위로 악취시설 개선, 컨설팅 등 패키지 지원

○ 또한, 축사에 악취측정기를 설치('18년 45개소)하고, 축산악취관리 센터에서 ICT를 활용한 악취 모니터링 등으로 지속 점검한다.

□ 가축 매몰지 중 사체 분해여부 확인 없이 관리 해제된 4,751개소에 대해 올해 환경오염 위험이 큰 940개소를 우선 발굴·소멸처리하고, 2022년까지 나머지 매몰지도 소멸 처리할 계획이다.

4. 건강·안전·안심으로 소비자·생산자와 소통하겠습니다.

□ 어린이의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위해 올해부터 전국 6천여개 초등학교 돌봄교실 학생 24만명에게 과일간식 제공한다('18.4~).

* 1인당 150g의 조각과일을 컵과일 등 신선편이 형태로 HACCP 인증시설에서 가공하여 공급(학생 1인당 주 1회, 연간 30회)

□ 저소득층이 적정 수준의 농식품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농식품 바우처' 제도의 도입도 준비한다.

* 사업추진체계, 지원방식, 적정제공 규모 등 구체적 방안 마련(연구용역, ~'18.9)

□ 생산과 소비, 안전관리, 식생활, 환경보전을 아우르는 국민 먹거리 종합 계획을 수립하고,

○ 8개 지자체를 시작으로 지역 순환형 생산-소비 시스템이 정착될 수 있도록 지역 푸드플랜 수립도 지원한다.

□ 국민건강과 농가 경영비 절감(연간 1,161억원)에 기여토록 마블링 중심의 쇠고기 등급 기준을 육색, 지방색을 종합평가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

IV. 누구라도 살고싶은 농촌 조성

1. 3만불 시대, 살고싶은 농촌으로 재생하겠습니다.

- 지역자원을 활용한 특화산업 발굴과 생활·문화기반을 패키지 지원하는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을 도입하여 활력 넘치는 일터를 조성하고,

* ('18) 10개소 → ('19) 20 → ('20) 20 → ('21) 20 → ('22 누계) 100

- 농촌의 문화·교육 등 서비스 전달체계를 '중심지~기초생활거점~마을'로 연결하는 3·6·5 생활권* 구축, 고르게 잘사는 삶터를 마련한다.

* (예시) : (30분) 노인·영유아 보건복지 서비스 / (60분) 창업지원, 평생교육 서비스 / (5분) 독거노인응급관리, 건강모니터링 등 안전·응급 연락체계

- 또한, 농업유산 등 농촌의 생태·문화자원을 통해 쉼터로서 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확산하는 농촌다움 복원사업을 신규로 추진한다.

2. 농촌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농촌 사회적경제를 활성화하겠습니다.

- 고령농 노후 생활자금을 지원하는 농지연금의 월 지급액을 인상*해서 가입자를 '17년 8,631명에서 '18년 12,000명으로 확대한다.

* 농지 감정평가율을 현행 80%에서 90%로 상향 시, 월 지급액 12.5% 증가

- 100원 택시를 전 군지역(82개)에서 확대·운영하고, 영농도우미·행복나눔이(29천 가구) 등 찾아가는 복지서비스와 함께,



- 다문화 여성 1:1 후견인제 도입(1천명) 등 농촌지역 여성에 대한 맞춤형 복지도 확대한다.

- 농촌 사회적경제조직 등이 농업 활동을 통해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돌봄·교육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농업을 활성화한다.

- 올해 시범적으로 사회적농업 실천 조직 9개소를 대상으로 프로그램 운영 및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하고, 향후 본격 확산을 추진한다.

V. 현장과 혁신을 최우선으로 FIRST 농정 추진

- (현장) 정책 담당자가 팀단위로 현장을 방문해서 문제와 답을 찾는 '현장 방문의 날'을 운영하고, 성과 공유 토론회와 우수사례 발표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한다.
 -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와 농업회의소 설치를 적극 추진하여 협치농정의 체계를 구축한다.

- (혁신) 매주 수요일 퇴근전 60분간 'FIRST 60토크'를 통해 정책과 일하는 방식을 혁신하는 방안을 도출한다.
 - 월 1회 전직원 '역량 FIRST 강좌'를 실시해서 사회·문화 트렌드 등 직원들의 인문 교양 역량을 강화한다.

- (책임) 매월 현장농정 성과를 평가하고, 우수사례와 추가과제 발굴을 위한 지역 순회 농정성과 설명회도 개최한다.

- (공감) 농정개혁위원회를 운영하고, 청년농 타운홀 미팅을 분기별로 개최하는 등 고객과의 소통을 확대하고,
 - 국민 생각함, 국민 정책디자인단 운영과 클라우드 시스템을 통한 정보 공유를 통해 부내외 소통을 강화한다.

- (신뢰) 주요 격무 직위 근무자에게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 김영록 농식품부 장관은 "농림축산식품부는 올 한해 모든 업무 추진과정에서 현장, 혁신, 책임, 공감, 신뢰의 FIRST 농정을 추진하여 국민의 삶을 더 꼼꼼히 살피고, 체감하는 성과를 내겠다."고 밝혔다.



별 침

[별첨1]

2018년 업무계획

- 농업기술혁신으로 국민의 삶의 질 향상 견인 -



농촌진흥청



목 차



I. 2017년 성과와 평가	185
II. 2018년 업무추진 여건	193
III. 2018년 업무추진방향	197
1. 기본방향	199
2. 연말 이루고자 하는 모습	200
IV. 주요업무 추진계획	201
1. 주요정책	204
2. 당면현안	227
[붙임] 2018년,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228

I . 2017년 성과와 평가

1. 주요성과

2. 평가 및 반성

1. 주요성과

- ◇ 문재인 정부 출범 원년으로 쌀 수급안정, 안전 먹거리, 기후변화 등 현안해결과 국정과제 중심의 사업추진에 역량을 집중
- ◇ 첨단기술 융복합을 통한 미래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스마트 농업 등 기술혁신을 가속화하고 농업농촌 활력을 증진

1 쌀 수급 안정 및 밭농업 생산기반 확충

- 농업인단체 등과 민·관 합동으로 「3저·3고 운동」을 추진하고 쌀 생산조정제 지원을 위한 「식량산업기술팀」 신설('17.11월)
 - * 3低(재배면적, 질소비료, 생산비), 3高(밥맛, 완전미율, 소비)
- 세계 최초로 건식 쌀가루 전용품종 개발 : ‘한가루’, ‘수원542호’
 - * 쌀가루를 이용한 쌀식빵·쌀맥주 등의 제조방법 개발 및 기술이전으로 쌀 소비확대에 기여(수입 밀 20만톤 대체시 수입 대체 효과 806억원)
- 쌀국수·쌀파스타 산업화를 위한 전용품종 보급 : ‘새고아미’, ‘새미면’
 - * (경남 고성) 쌀국수 매출 : ('16) 1.6억원 → ('17) 5, 재배단지 : ('16) 20ha → ('17) 35
- 밭작물 논 재배를 위한 관·배수 기능 겸비 지하수위 제어시스템 및 트랙터 부착형 저비용 무굴착 암거배수 매설기술 개발('17, 특허)
 - * 논↔밭 전환 및 정밀 물관리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작부모형 다양화를 통한 생산성 향상(참깨 32%↑)과 기존 대비 설치비 47.4% 절감

		
쌀가루 전용품종 ‘한가루’ (밀가루와 유사한 둥근 전분)	국수 전용 쌀 품종 재배확대 (경남 고성)	논 지하수위 제어시스템 (논-밭 전환 및 정밀 물관리)

2 신성장동력 창출

- 한국형 스마트팜 1세대 모델(4종) 개발, ICT 기기 단체표준(온실용 25종, 축사용 19종) 등록으로 국내 스마트팜 산업의 성장기반 구축
 - * 스마트팜 설치비 30% 절감(단동형 : 7백만원 → 5, 연동형 : 20백만원 → 14)
- 세계 최초로 영상인식 기술을 이용한 초정밀 과채류 접목시스템 개발로 접목성공률 95% 이상 실현(노동력 50% 절감)
- 국내외 유전자원을 확보(보리 등 6,166자원)하고 유용형질의 특성을 평가(24형질)하여 정보를 민간육종회사(11개사)에 제공
 - * (협업) 농진청 ↔ 실용화재단 ↔ 민간육종연구단지(김제) ↔ 국제종자박람회



- 여성 갱년기 질환과 피부노화를 막는 식물성 에스트로젠¹⁾ 성분을 일반 콩잎보다 5배 많이 함유한 기능성 콩잎 생산기술 개발
 - * 재배가 쉽고 1년 3기작이 가능해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17: 22ha → '18: 80)
- 4차 산업혁명 기술 인공지능 딥러닝 알고리즘을 활용한 벼멸구 예찰 자동화 기반 구축(인식률 90%)
- 농장형 치유농업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농장 적용 효과 검증
 - * (아동) 긴장감 76%↓, 인성 6%↑, (성인) 스트레스, 긴장, 분노 각 72%↓
- 미세먼지 제거 효능이 우수한 식물(아이비 등 4종)을 선발하고 사물 인터넷(IoT) 기반의 미세먼지 저감 시스템 개발

1) 에스트로젠 : 여성 건강유지를 위한 대표적인 호르몬으로 피부노화의 주요 원인인 콜라겐 합성 및 분해에 관여함

3 먹거리 안전 및 경쟁력 제고

- 대장균을 간편하게 찾아내는 휴대용 검출기 개발로 장비가격을 1/4로 낮추고, 분석시간(4일 → 12~18시간) 및 비용(30천원/건 → 5) 절감
 - * 농식품 산업현장 및 급식소에 보급 시 장비비·인건비 등 1,815억원 절감 예상
- 세계 최초로 AI 바이러스에 저항성을 갖는 '미니항체(3D8)단백질' 개발
 - * 달걀에 주입해 생산한 닭에서 저병원성 AI 바이러스 증식 30% 감소 확인
- '설향' 등 딸기 국산품종 보급률 향상 : ('15) 90.8% → ('17) 93.4
 - * 싱가포르, 홍콩, 태국 등 수출 확대 : ('10) 26.1백만불 → ('16) 34.1 → ('17) 44
- 국내육성 고품질 감귤 '하례조생' 보급을 통해 조수입 34% 향상 (3,200원/kg → 4,300)
 - * '하례조생' 묘목 수요량 1년 만에 3배 증가 : ('16) 4,000주 → ('17) 12,000



4 농축산물 부가가치 향상

- 새싹보리를 이용한 간 기능 개선(알코올성 지방간 26%↓) 건강기능 식품 개발로 농산물 부가가치(62배↑) 및 농가소득 향상
 - * 계약재배 : ('14) 5ha → ('17) 50, 농가소득 28% 향상(39천원/40kg → 50)
- '삼채'의 복합기능성을 과학적으로 입증하고 식품소재화하여 수출
 - * '삼채 떡볶이 소스' 베트남 수출(55만\$) 및 재배면적 50배 증가('11: 6.6ha → '17: 330)
- 익힌 숙잠의 피부미용 효과(피부흑화 41%↓) 구멍, 수술용 봉합사, 3D 프린팅 뼈 고정장치(뼈 접합효율 10%↑) 등 잠상소재 개발
 - * 세계 최초로 치과용 실크 차폐막을 개발하여 기술이전 및 임상시험 완료('17)

5 농업인 복지 및 농촌 활력증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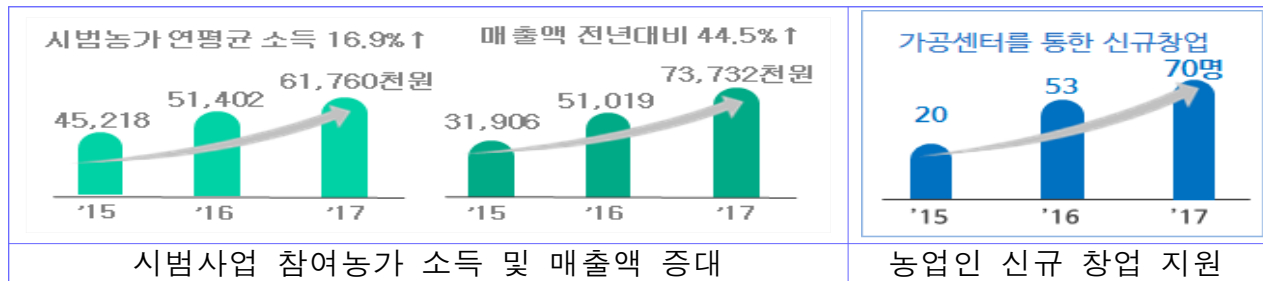
- 농산물 가공상품화와 창업을 위한 **농산물종합가공센터 확대**(‘16: 44개소 → ‘17: 69) 및 **소규모 창업을 위한 기술지원**(33개소)

* 시범사업 참여농가 연평균 소득(16.9%↑) 및 매출액(44.5%↑) 증가, 농산물 종합가공센터를 통한 신규 창업 증가(70명, 32.1%↑)

- **신규 농업인 대상 교육·창업지원 등 영농정착시스템 구축**

* 기초영농교육(45백명) → 현장실습·창업교육(700명) → 창업지원(9개도원)

※ 귀농 현장실습 교육생 만족도(‘17) : 91.9점(지원과정 93.9, 교육 90.5 등)



- **농촌진흥사업 분야 일자리 창출 및 기반 구축**

- 일자리 전담부서(농업빅데이터일자리팀) 신설(‘17.11월)

* 스마트농업전문가 체계적 육성(105명) 및 농작업안전보건기사 자격 신설(‘17.12월)

- 실용화재단에 「일자리센터」신설(‘17.7월) 및 일자리 396명 창출

* 직접고용 41명, 농식품 특허 사업화 등 지원사업을 통한 기업고용 355명

- **농업현장의 위험요소 개선으로 안전한 작업 환경 조성**

* 작목별 안전관리 실천 지원(85개소) 및 안전수준 향상(‘16: 44.8% → ‘17: 48.1)

- **고령농업인의 사회경제적 활동 지원으로 농촌공동체 활성화**

* 농촌건강장수마을 만족도 : (‘16) 86 → (‘17) 90.8

- ◇ 국조실 주관 「정부업무 특정평가」 2년(‘15~‘16) 연속 우수기관 선정
- ◇ 행안부 주관 2016년 행정관리역량평가 우수기관(차관급 1위)
- ◇ 세계 혁신연구기관 2년(‘16~‘17) 연속 선정(The State of Innovation Report)

2. 평가 및 반성

- 안정적 식량공급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1인당 쌀 소비량 감소, 발작물 자급률 정체 등 실질적 성과는 미흡
 - 쌀의 대량 소비처 발굴을 위해서는 현장 수요 예측이 중요하므로 기술개발 단계부터 산학연 협업연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자급률 향상을 위해 사료용 벼, 맥류, 옥수수 등 다양한 조사료 품종 개발과 밭농업 기계화 확대 등 안정생산체계 구축 필요

- 4차 산업혁명 기술을 농업에 접목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시급
 - 농업 R&D 성과를 일자리 창출로 연계하기 위한 체계적 분석 및 청년, 귀농귀촌인 등에 대한 창업·창농 지원 인프라 부족
 - 신규농업인의 영농실패로 인한 逆귀농·귀촌 방지를 위해 체계적인 영농교육 및 일자리 창출 지원 필요

-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의 연구개발 성과 향상 시급
 - 로열티 및 개방 확대 대응을 위해 국산품종 개발·보급을 강화하고 개발기술의 실용화율 제고를 위한 대책 마련 필요
 - 신기술 실증연구와 보급된 영농현장 간의 기술·생산량 격차 해소 미흡

- 안전·복지 등 삶의 질 향상에 대한 국민적 요구 증대
 - 미승인 LMO 등에 대해 민관협력을 통한 철저한 사후관리로 국민 우려 불식 노력 필요
 - 고령화, 1인 가구 증가 등 농촌문제에 대응하여 공동체 활성화와 생산적 복지 등 적극적 지원을 통해 삶의 질 향상 견인 필요

Ⅱ. 2018년 업무추진 여건

Ⅱ. 2018년 업무추진 여건

- **(대외)** 세계 경기 회복세로 인한 신시장 개척·수출 확대 등 농산업 지속 성장 기회요인과 글로벌 리스크 상존
 - 한·미 FTA 개정협상 요구, 국제유가 불안, 기후변화 등 우리 농업을 둘러싼 위험요인 지속
 - 주요 법률의 시행에 따른 농식품 시장에서의 국가간 경쟁 심화
 - * 나고야 의정서 이행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법률’ 시행(8월)

- **(대내)** 농정 패러다임의 변화(소득, 지속, 복지)와 농업의 다원적 가치 중시 등 농산업 발전의 사회·정책적 기반 강화
 - 국민 대다수(94%)는 ‘국가가 식량안보를 위해 최대한 농업을 보호하고 지켜야 한다.’고 인식(‘16년 국민의식조사, KREI)
 - 삶의 질을 중시하는 가치관의 확산과 안전·복지, 건강·휴양 등 욕구 표출은 우리 농업·농촌의 발전에 좋은 기회
 - * 국내 건강기능식품 시장규모는 약 2조6천억원, 연간 8.2% 성장세(‘16, 식약처)

- **(농업·농촌)** 첨단 기술의 농업분야 확산이 가속화되고 융복합 기술, 농산물 안전 및 귀농·귀촌 등에 대한 수요는 증가
 - ICT·BT 융복합 기술과 정부의 4차 산업혁명 대응 정책 수립 등 농산업의 첨단 고부가가치 성장산업화를 위한 여건 성숙
 - 미래성장 동력원으로 스마트팜, 로봇, 종자, 곤충 등이 부각
 - * ‘혁신성장을 위한 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 대응계획’ 발표(‘17.11, 관계부처 합동)
 - 안전먹거리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가축질병 예방을 위한 동물 복지형 가축생산기술 개발 수요 급증
 - * HACCP 인증 농가수 증가(누계) : (‘15) 6,452농가 → (‘17.6) 7,168 (11%↑)

Ⅲ. 2018년 업무추진 방향

Ⅲ. 2018년 업무추진 방향

1. 기본방향

◇ 문재인 정부 2년차, 국정과제 이행과 현장밀착형 연구개발·보급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전인하는 가시적인 성과창출

□ (국민안전) 식량의 안정생산과 안전한 먹거리 공급 지원

- (수급안정) 논 이용 발작물 생산기술의 개발·보급을 통한 쌀 적정 생산, 발작물 자급률 향상 등 식량의 안정생산 지원
- (안전먹거리) 친환경 안전농축산물 생산 및 가축질병 예방 강화

□ (혁신성장) 첨단 융복합 기술을 접목한 미래 성장동력 확보

- (스마트농업)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첨단 융복합 기술을 농업생산 시스템에 결합하여 생산성 향상 및 농업현장으로 해결
- (신성장동력) 생명공학, 식용곤충 등 농업분야의 신성장동력 발굴

□ (개방대응) 농업의 경쟁력 제고 및 국제기술협력 강화

- (경쟁력향상) 국산품종 육성·보급, 생산성 향상 및 품질고급화 등을 통한 대외 우위 확보로 우리 농산물의 경쟁력 제고
- (글로벌협력) 개도국 맞춤형 지원 및 기술 강국 등과의 협력 강화

□ (농촌활력)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민 삶의 질 향상 지원

- (지역발전) 신기술 확산과 특화산업 육성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고 농업지식과 경영능력을 겸비한 전문인력 양성
- (삶의 질) 도시·치유농업 육성 및 농작업 안전 등 농업인 복지 향상

2. 연말 이루고자 하는 모습

	2017	2018	2017	2018	2017	2018
기초 기반 · 혁신 성장	1,223 	2,893 	44 	55 	17 	31 
	PLS 대비 농약등록(적용대상)		스마트팜 표준화(종)		곤충기능성 신소재 개발(건)	
식량	823 	10,000 	16 	18 	14 	16 
	사료용 벼 재배확대(ha)		발작물 품종 보급률(%)		식량작물 생산성 증가율(%)	
원예	25.7 	27.0 	29.3 	30.2 	14.4 	15.1 
	원예작물 국산품종 보급률(%)		인삼특작 국산품종 보급률(%)		스마트팜 시설원예 신기술 보급면적(ha)	
축산	31.2 	28 	3 	5 	28.8 	30 
	한우 사육기간 단축(개월)		축산물 소비확대 기술개발(종)		IRG 종자 자급률(%)	
농촌 활력	11.8 	12.2 	1,220 	1,285 	35 	285 
	창업사업장 연평균 소득증가율(%)		신기술보급 일자리 창출(명)		농작업 안전사고예방 현장전문가 양성(명)	
국제 협력	10 	20 	0 	5 	35 	43 
	개도국지원 ODA 시범사업		아프리카 현지 벼 품종등록		선진국·국제기관협력(기관)	

IV. 주요업무 추진계획

1. 주요정책

2. 당면현안

업무추진체계도

농업기술혁신으로 국민의 삶의 질 향상 견인

목 표

- 첨단기술 융복합을 통한 미래성장 및 수출 산업화
- 안전한 먹거리 생산 및 농업·농촌 활력 제고

중점추진과제

안전한 먹거리 생산	미래성장동력 확보
<p>1. 식량 안정생산 및 기후변화 대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쌀 적정생산 / 쌀 소비촉진 / 밭농업 기계화 / 기후변화 대응 <p>2. 친환경 안전농축산물 생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환경·유기농업 / 안전먹거리 / 가축질병 예방 / 농자재 안전관리 	<p>3. 4차 산업혁명 융복합 기술 개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마트팜 / 무인·자동화 기술 / 정밀예측 <p>4. 신성장동력 창출 및 농축산물 부가가치 향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자생명공학 / 곤충 / 기능성 소재 / 농식품 자원
경쟁력 강화 및 글로벌 협력	농업·농촌 활력증진
<p>5. 개방 대응 경쟁력 강화 및 수출농업 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예특작 / 축산 / 수출지원 <p>6. 글로벌 농업기술협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도국 기술지원(ODA) / 국제기술협력 	<p>7. 지역경제 활성화 및 전문인력 양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차산업화 / 신기술 보급 / 인력양성 / 지역상생(혁신도시 시즌2) <p>8. 삶의 질 향상 및 현장소통 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촌 복지 / 도시·치유농업 / 영농현장 지원

1. 주요정책

1 식량 안정생산 및 기후변화 대응

가 쌀 적정생산

- ◇ 쌀 생산조정제 지원 및 조사료 자급률 향상기술 개발·보급
 - 사료용 벼 재배 확대 : ('17) 7품종, 823ha → ('18) 9, 10천

□ (논 이용) 쌀 생산조정제 지원을 위한 기술 개발·보급

- 논 이용 사료작물 연중 생산기술 및 발작물 작부체계 개발
 - * 남부지역 하계(벼)-추계(IRG 등) 2·3모작 작부체계 등 현장연구(경주, 고성)
- 발작물·조사료 전문생산단지 육성(250개소)과 논 배수개선 등 타작물 재배 시범사업 추진(10개소)
 - ※ 특정품목 쓸림방지·수급영향이 적은 품목의 종자알선창구 운영(~5월)
- 논을 이용한 소득원의 다변화를 위한 유기농벼+담수어종 경제성 분석 및 농업생태 환경평가(메기 등 3종)

□ (조사료) 자급률 향상을 위한 품종개발 및 보급 확대

- 사료용 벼, IRG 등 신품종 개발·보급 : ('17) 64품종 → ('18) 72
 - 재배기술, 사료용 벼를 급여한 비육우의 육질분석 등 현장지원
 - * 농업인이 현장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종합매뉴얼 개발·보급
 - 종자 건조·정선 기술 개발 등 IRG 생산·보급 기반 구축
- 지자체와 연계한 지역 맞춤형 종자생산·보급체계 확립
 - * 중·북부(호밀, 춘파용 귀리 등), 충청이남(청보리, IRG 등) 현지 채종 및 보급
- 가뭄·한파 등 돌발 재해 대비 조사료 안정생산 기술 개발 및 보급
 - * 대체품종 파종기술 : 추파(밀, 보리 등) → 춘파(귀리, 청보리 등)

나 쌀 가공산업 활성화 및 소비촉진

◇ 건식제분 전용품종 육성 및 용도 다양화를 통한 소비촉진

- 쌀가루 전용품종 개발(누적) : ('17) 3품종 → ('18) 5

□ (품종·재배) 쌀가루 전용품종의 안정성 증진 및 생산비 절감

- 우량계통의 수발아 민감성, 수량성 및 재해 저항성 개선
 - * 전주615호(분질, 복합내병성), 전주631호(분질, 수량성 향상·수발아 저감)
- 쌀가루용 품종 생산성 향상 및 노동력 절감 재배기술 개발
 - 질소비료 처리 및 지역별 이앙·직파재배 기술(6개도) 등
- 전용품종 가공원료곡 대량 증식 : 한가루 등 3품종 250톤

□ (용도다양화) 쌀가루 이용 식품 소재 및 식의약 소재 발굴

- 용도별 원료특성 구명 및 품질평가기준 설정(건면)
 - 수분함량, 쌀가루 배합비 등 압출면 최적 제조조건
- 쌀 부가가치 향상을 위한 가공·발효식품 등 활용성 증진
 - 다이어트·환자용 죽 제조방법, 쌀 맥주, 프리믹스, 분말 등
- 신수요 창출 산업용 소재 및 혈당개선 소재 적용기술 개발
 - 쌀가루를 이용한 어린이 놀이용 가루 및 점토, 기능성 증대 등

□ (소비촉진) 우리 쌀 소비확대를 위한 교육·홍보

- 학교급식·외식업체 등 대상 전문교육 확대('17: 30만명 → '18: 44)
 - * 급식단체 등 전문가(2만명), 외식업협회 연계 업체교육 지원(42만명)
- 들녘경영체 등과 합동으로 국민공감대 확산 「쌀사랑 운동」 전개
 - * 국산 원료곡 이용 가공제품 경진 및 아이디어 공모전, 쌀빵 나눔행사 등
- ※ 쌀의 비만·당뇨 예방효과 언론 브리핑 등을 통해 부정적 인식 불식(2월)

다 | 밭농업 기계화 및 생산성 향상

- ◇ 기계화·표준화 및 현장보급 강화를 통한 밭작물 생산기반 확대
 - 논재배 밭작물(콩) 생산성·소득 향상 : 소득 30~50% 증대

□ (기계화) 밭작물 농기계 개발, 적합품종 육성 및 재배기술 표준화

- 무 복합과종기, 고추 정식기, 수집형 마늘수확기 등 맞춤형 밭작물 농기계 및 콩 전과정(과종~수확) 기계화 기술 개발
 - 지난해 개발한 감자 전과정기계화 기술 현장실증(4~10월)
- 기계화 적응성 품종 육성 : 콩(밀양316호), 팥(밀양36호) 등
- 재배양식을 표준화(들깨 : 수확기계화 등)하고, 기계과종에 적합한 육묘기술(잡곡 : 점과·산과 등) 개발

□ (생산성) 밭작물 생산성 향상 및 안정생산기술 개발

- 밭의 수분함량에 따라 물공급을 자동으로 조절하는 지중점적관개 시스템('17, 특허출원) 현장 실증(김제)
- 간척지 밭작물 안정생산을 위한 염류제어 기술을 개발하고 사료작물 적합품종 선발 및 작부체계 구축(맥류, 옥수수 등 연중 생산모형 개발)
- 가공업체 맞춤형 빵용 초강력분 밀 품종 육성 강화('18~'20)
 - ※ 국산밀 자급률 제고를 위한 밀 연구강화 방안 종합계획 수립(2월)

□ (현장보급) 밭작물 선도경영체 육성 및 생산단지 확대 지원

- 콩·잡곡 등 밭작물 권역별 선도단지 조성(47개소, 1,600ha)과 농작업 전과정 기계화가 가능한 공동경영체 육성(19개소, 400ha)
- 밭작물 수출단지 조성 및 가공 원료곡 생산기술 지원
 - * (천안) 들깨 가공연계 수출단지(30ha), (전북) 팥 식품기업 원료곡 생산단지

라 기후변화 대응

◇ 이상기상에 적응할 선제적 농업재해 대응기술 개발·확산

- 온실가스 배출계수(누적) : ('17) 15종 → ('18) 17

□ (온실가스) 농업분야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및 감축기술 개발

- 국가고유 온실가스 배출계수 개발('17: 15종 → '18: 17, 누적) 및 배출권 거래제 대응 지원(국가 감축이행 통계생산)
- 저탄소 농산물 인증을 위한 전과정평가목록(LCI: Life Cycle Inventory) 구축(15종)

□ (영향평가) 기후변화 영향·예측 및 적지·생산성 변동 대응

- 농업분야 기후변화 실태 및 영향·취약성평가(기상·기후, 재배적지·생산성, 병해충 등) ※ 실태조사(매년), 영향·취약성 평가(5년 1주기)
- 기후변화 대비 적응기술 개발을 위해 新시나리오 조건에서 가뭄에 따른 발작물 생육반응(생장속도, 광합성량)을 평가(콩, 감자)
※ 「기후변화연구사업단」 발족('17.12) : 기관·분야간 협업강화 및 실용화 촉진

□ (재해경감) 선제적 가뭄 대응 및 인공지능 활용 병해충 예찰

- 물질약 최소 관개량을 산정(옥수수, 배추)하고 토양 유효수분을 기반으로 한 발가뭄 현황·예경보 서비스(166개 시군)
- 인공지능 활용 벼멸구 자동예찰시스템 시범적용 및 신뢰도 검증
- 자동화 기술 고도화를 통한 멸구 인식률 향상 : ('17) 90% → ('18) 95

□ (신소득작물) 기후변화대응 신품종 및 재배기술 개발

- 고온적응, 기상재해 및 병충해 저항성 품종 개발('17: 235종 → '18: 250)
- 아열대작물 유전자원 도입·평가(55종/누계) 및 유망작물 재배기술 매뉴얼을 발간(15종/누계)하고 신기술 시범사업 추진(38개소)

2 친환경 안전농축산물 생산

가 친환경 유기농업 및 안전먹거리 공급

- ◇ 지속 가능한 농업환경 보전과 농산물 안전관리기술 현장확산
 - (부처협업) 농경지 잔류성 유해물질 안전관리기준 설정 : 3건

□ (환경보전) 선진국형 프로그램 도입으로 공익형직불제 지원

-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²⁾ 지원을 위한 농업환경지표 개발 추진
 - ※ 공익형 직불제(농식품부) : ('18) 프로그램 도입 → ('20) 확대 → ('22) 시행
- 농업환경지표 및 농업환경보전활동 평가·이행점검 매뉴얼 개발
 - * ('18) 생산성, 보전효과, 보전활동 비용 등 DB 구축 → ('19) 실천매뉴얼

□ (기반조성) 안전먹거리 공급 지원을 위한 시스템 구축

- DDT 등 잔류농약 및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기준 설정(환경부 협업)
 - 토양 및 농업용수 중 잔류화학물질 다중분석법 개발
- 종자에서 비료까지 유기농산물 생산기반 구축을 위해 유기종자 소독기술(6종) 및 유기채소 생산기술(8작물) 개발

□ (현장확산) 유기농 실용화 및 GAP 확산을 위한 현장애로 해결

- 생물자원(농업미생물·천적 등)을 활용한 친환경 병해충 방제 확대 등 유기농산물 생산 종합관리기술 현장실증(9개도, 10작물)
- GAP 활성화를 위한 전문가를 양성(3과정 270명)하고 버섯용 고깔 등 현장 요구도가 높은 간편장비 개발·보급
 - ※ GAP 확산을 위한 소비·유통·생산단체 및 정책·기술 민관 전문가 대토론회(상반기)
- 지방농촌진흥기관의 농산물 안전성 검사기능을 대폭 강화
 - * 잔류농약·수질·중금속 등 안전성 분석실 지원 확대 : ('17) 16시군 → ('18) 30

2) 환경부하를 줄이고 공익적 가치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프로그램(토양·용수 등 5개 분야 45개 세부활동)

나 AI 등 악성 가축질병 예방

- ◇ 사육환경 및 축사시설 개선 등으로 가축질병 사전 예방
 - 닭진드기 제어기술 : ('17) 포획기술 → ('18) 1 → ('22) 3

□ (닭진드기) 현장적용 가능한 병해충 종합관리(IPM)기술 개발

- 산란계 농장의 닭진드기 모니터링 기법 확립 및 감염실태 분석
 - 포획장치 형태 및 계사 내 설치 기준 제시, 닭진드기 감염률 조사
- 식물추출물, 자외선 조사기술 등을 활용한 융합형 방제기술 개발(1종)
 - 닭진드기 오염농가에 대한 기술적용 및 검증 : 5개소

□ (가축질병) 신소재 및 품종개발 등 종합적 질병예방기술 확립

- 미니항체(3D8) 단백질을 이용한 항바이러스 사료첨가제 개발
 - * ('18) 미니항체 단백질 효과 검증 → ('19) 단백질 운반체 개발 → ('20) 현장 실증
- 유전체정보를 활용한 AI 저항성 닭 계통 선발 및 육성
 - * ('18~'20) 유전체 빅데이터(국제공동) → ('21) 바이오마커 → ('22) 계통선발
- 생체분해캡슐을 적용한 간편한 돼지 백신접종기술 개발
 - * ('17) 생체흡수성 평가 → ('18) 자동접종장치 개발 및 항체형성 확인
- ※ 평창올림픽 기간중 고강도 차단방역 및 축산환경 개선을 위한 기술지원 강화

□ (복지·사양) 가축 사육환경 개선을 위한 복지기준 및 사양기술 개발

- 국내 농가적합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기준 개선안 제시
 - * 동물복지농장 인증기준 보완·개선 : ('18) 산란계 → ('19) 돼지 → ('20) 육계
- 가축 행동을 기반으로 하는 동물복지 평가기술 개발(산란계, 돼지)
- 동물복지형 산란계 다단식 사육시설(Aviary) 이용 사양기술 개발
 - * 사육면적, 햇대·난상³⁾ 적응, 사료급여, 산란특성, 행동특성 등

3) 햇대 : 닭이 앉아서 쉬는 공중에 놓인 막대기, 난상 : 닭이 알을 낳는 틀

3

4차 산업혁명 융복합 기술 개발

가 한국형 스마트팜 기술 개발

- ◇ 인공지능·빅데이터 기반의 스마트 농업기술 개발 및 실용화
 - ('16) 1세대(편의성) → ('18) 2세대(생산성) → ('20) 3세대(플랜트 수출)

□ (표준화) ICT 기자재 표준화 및 2세대 스마트팜 클라우드 구축

- 스마트돈사 등 축산분야 환경센서 표준안(11종)을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단체표준(TTA)으로 등록
- 스마트팜 장비의 국가표준 등록(누계 55종)을 위한 표준안 마련(12종)
 - ※ ('16~'18) 단체표준 55종 → ('18) 국가표준 12종 → ('20) 국제표준 3종
- 생산성 향상을 위한 한국형 2세대 스마트팜 표준모델(토마토) 개발
 - * 환경·생육량 빅데이터 수집 → 기계학습·추론모델 → 인공지능 의사결정서비스

□ (핵심기술) 빅데이터·인공지능 활용 2세대 스마트팜 핵심기술 개발

- 생육관리 소프트웨어(방울토마토 등 4품목) 및 생체정보를 활용한 가축사료 적정 급여모델(돼지, 젓소) 개발
- 현장실증을 통한 생산성 향상 모델(딸기, 파프리카 등 4종) 고도화

□ (취업·창업) 스마트팜 전후방 연관산업 취업 및 창업 지원

- 스마트농업전문가 육성사업(105명), 강소농 지원사업 및 스마트팜 테스트베드 등을 통한 전문가 취업·창업 지원
 - * 과학영농시설(도원·시군센터)를 첨단 실습장으로 조성·운영(40개소)
- 시설 원격제어, 노지 자동관수 등 신기술 시범사업 확대
 - * ('17) 26과제, 196개소(시설원예·축사) → ('18) 28, 203(노지, 저장·유통 등)

나 무인·자동화 기술 및 정밀 예측·대응

◇ 농작업의 자동화·정밀화로 생산성 향상 및 수급안정 지원

- 병해충 자동예찰·진단 소프트웨어 및 스마트트랩 개발 : 2종

□ (자동화) 4차 산업혁명 융복합 기술 기반 첨단농업 구현

- ICT 활용 농업생산시설 관리자동화 및 현장애로기술 개발 추진
 - 비닐온실에 적용하는 농작업로봇 모델개발 및 운용 가이드라인 설정
- 한국형 젓소 로봇착유기 및 돼지 액상사료자동급이기(1,000두 규모) 현장실증 및 시범운영
- ICT기반 병해충 자동예찰 진단용 S/W 및 스마트트랩 개발(2종)

□ (정밀예측) 위성·무인기 활용 작황평가 및 수급안정 지원

- 위성·무인기 영상을 활용한 5대 채소 주산지 재배면적 및 작황 추정('17: 배추·무·양파·마늘 → '18: 고추)
 - ※ 수급 민감 농작물에 대한 농업관측 정보 생산·제공(배추 등 3작물, 농경연 공동)
- 무인기를 활용한 벼 세균성 병해 탐지 조건 구명 및 발생면적 추정, 원격탐사 기반의 동계 맥류·사료작물 구분 및 작황평가
- 노지 채소 적정 생산 기술지도를 위한 빅데이터 기반의 수확량 예측 모델 개발('17: 건고추 → '18: 건고추[고도화], 배추)

□ (정보제공) 기상재해 조기경보 확대 및 병해충 발생예측 강화

- 농장맞춤형 기상재해 조기경보 서비스 확대('17: 10시군, 20작물 → '18: 17, 25) 및 시스템 실증을 통한 위험관리체계 고도화
- 농작물병해충관리시스템을 활용한 병해충 발생예측 및 적기방제
 - * 무인공중포충망(40개소) 채집 멸구류 자동판별기술 개발 및 시스템 탑재

4

신성장동력 창출 및 농축산물 부가가치 향상

가 종자산업 및 농업생명공학 육성

- ◇ 종자산업과 농업생명공학 육성을 통한 고부가 신수요 창출
 - 유전체 빅데이터 해독(누적) : ('17) 26품목 → ('18) 42

□ (종자산업) 농업유전자원 활용 강화 및 종자산업 지원

- 보유 유전자원의 유용형질 특성조사(30천 자원) 및 유망자원 발굴
- 민간육종회사 등과 연계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온·오프라인을 통한 맞춤형 유전자원·정보 제공

※ 품종개발 로드맵, 중앙-지방간 협력방안 등 종자자급률 향상 대책 마련(2월)

□ (유전체) 농생명자원 유전체 해독 및 빅데이터 구축·활용

- 참깨, 울무 등 표준유전체 신규 해독(6품목) 및 딸기, 오이 등 종자산업 지원을 위한 유전체 해독 고도화(10품목)
- '유전체 빅데이터 육종활용 지원시스템'을 개선하고 작목기관 및 민간기업 등과의 현장활용 협력 강화(국화, 고구마, 양파 등)

□ (신산업기술) 농업생명공학 활용 신소재 발굴 및 실용화

- 유전자가위 등을 이용한 신육종기술 개발 및 유용유전자 발굴
 - * 대량 분석용 분자마커 개발(누적) : ('17) 370개 → ('18) 800
- GMO 개발목표를 전환(농산물 → 기능성·의약품 소재)하여 국민 우려를 불식하고 연구개발의 공감대 형성
 - ※ GM작물 환경위해성평가 표준화 기술 개발 : ('17) 벼 → ('18) 콩, 유채
- 이종이식 거부반응 관련 면역유전자제어 돼지를 생산하고 각막 이식 영장류의 생존기간 연장(234일 → 1년)

나 곤충 이용 식의약 소재 개발

- ◇ 곤충을 이용한 고부가가치 소재 개발로 신바이오산업 창출
 - 기능성 식의약 소재 발굴 및 산업화 : ('17) 17건 → ('18) 31

□ (소재개발) 식용곤충·양잠산물 소비확대를 위한 용도 다양화

- 갈색거저리를 이용한 영양균형식(노인식, 수험생용 등 12종) 제품 개발 및 특수환자식(수술환자) 효능 임상 연구(제약회사·병원 공동)
- 식용곤충 활용 조미류, 장류 등 식품 소재 개발 다양화(2종)
- 익힌숙잠의 건강기능식품(인지기능개선·치매예방) 산업화를 위한 지표성분, 안전성검정 등 기준규격 설정
- 양잠산물(누에가루, 동충하초 등)의 소비시장 확대를 위한 기능성 약용작물 소재와의 복합제형 개발

□ (산업화) 곤충 유래 신소재를 이용한 산업화 적용기술 개발

- 의료용 실크 소재의 산업화 기반구축(실크 봉합사, 3D 프린팅) 및 치과용 시제품 개발(구내염 치료용 연고제, 가글 등 3종)
- 식용곤충을 이용한 반려견 사료첨가제 개발 및 가축용 천연항생제를 보유한 누에 대량생산체계 구축
- 봉독의 고부가 수요 확대를 위한 의약품(여드름 치료 등 3종) 소재 개발 및 원료의약품 등록을 위한 임상시험 추진(대학·산업체 공동)

□ (현장확산) 곤충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술보급 및 홍보 강화

- 곤충활용(사료화, 외식·창업 등) 시범사업 추진(4과제, 17개소)과 전문인력 양성기관 확대(15개소 → 20)
- 호텔셰프 팸투어(상반기), 식용곤충 페스티벌(6월), 산학관연 협의체 운영

다 기능성 소재 및 식품산업화 기술 개발

◇ 농생명 자원을 활용한 고부가 기능성 신소재 개발 및 산업화

- 기능성 소재 개발 : ('17) 5종 → ('18) 8

□ (소재발굴) 농산물을 이용한 기능성 및 의약·산업용 소재 발굴

- 무·양배추(심혈관질환), 황기·강황(항비만·간 보호), 잇꽃(인지능 개선), 엉겅퀴(관절건강) 등 기능성 소재 개발
- 새싹보리(간 기능), 콩 발아배아(여성갱년기) 등 기능성 소재의 동물·인체적용 시험을 통한 안전성 및 효능 평가
- 김치유산균·쑥부쟁이(면역), 인삼(뼈건강), 황기(관절건강) 등 건강 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등록 추진(식약처)
- 감귤을 이용한 다양한 향장용, 의료용 기능성 젤 개발 등 산업화 지원

□ (식품산업화) 농식품 가공 및 식품소재화로 6차산업화 지원

- 비만 예방 등 건강 식생활을 위한 한식중심 식단 및 레시피 개발
- 국내에서 주로 소비되는 식재료의 건강영향 평가 및 활용
- 발효미생물 등록(5종) 및 고산도 식초용 종균 보급을 통한 빙초산 사용 저감화 추진
- 발효가공식품의 농가 맞춤형 6차산업화 지원(시범사업 7품목, 53개소) 및 전통주 품질향상을 위한 민관협력 '우리 술 프로젝트' 추진
- 쌀 편이가공품, 영양소재 식품을 개발(라이스볼 등)하고 냉·해동 식품의 품질유지(감귤) 등 농산물 소비확대를 위한 가공기술 개발
- 우유·유제품 소비활성화를 위한 소비자 니즈 분석 및 트렌드를 반영한 축산식품 제조기술 개발

5 개방 대응 경쟁력 강화 및 수출농업 지원

가 원예·특작 분야 경쟁력 제고

- ◇ FTA 대응 로열티 절감 및 수출 확대 신품종 육성·보급
 - 국산품종 보급률(주요 6작목) : ('17) 41.7% → ('18) 42.4

□ (품종육성) 국산 보급률 제고를 위한 시장 맞춤형 품종개발

- 딸기 '아리향('17)' 시범재배를 확대('17: 8개소, 1ha → '18: 10, 5)하고, 농가 조기정착을 위해 재배기술을 보완한 맞춤형 매뉴얼 보급
- 자가적과성 사과 '원교가-72호', 주스용 고향기 배 '원교나-73호', 껍질째 먹는 포도 '원교라-47호', 미니호접란 '원교F2-37' 등 육성
- 지황, 삼주, 당귀 등 수입의존이 큰 약용작물의 국내 적응품종 개발

□ (보급확대) 소비자 및 시장 지향형 신품종 보급

- 우리 품종 전문생산단지 조성으로 산지조직 시장대응력 확보
 - * 사과 '황옥'(김천), '홍금'(정선), '루비에스'(영천) 등
- 도매시장·대형마트 관계자 대상 신품종 시장성 평가 및 홍보
 - * 신품종 개발 간담회(3회), 시장성 평가('아리향' 등 23품종) 추진
- 농협과 협업하여 수도권 소비자 대상 우리품종 판매 정례화
 - * 전국단위물량 과수 7품목을 대상으로 연간 6회 실시(100톤 목표)

□ (안정생산) 과수 무병화 기술 개발·보급, 인삼 연작장해 경감 및 약용작물의 친환경 안정생산 지원

- 과수 육종단계부터 바이러스를 제거하여 무병묘 보급기간 단축(5~7년)
- 인삼 뿌리썩음병 종합방제체계(담수처리, 미생물 활용 등) 구축 및 약용작물 GAP 표준기술 개발(초석잠 등 4작목)

나 축산 분야 경쟁력 제고

◇ 축산농가 소득증대를 위한 가축 생산성 향상 기술개발·보급

- 한우 비육기간 단축 : ('17) 31.2개월 → ('18) 28

□ (가축개량) 가축개량 효율성 제고 및 토종가축 산업화 추진

- 초음파를 이용한 한우의 유전능력평가(등심단면적, 지방함량 등) 기술을 개발하고 새로운 개량 형질 발굴로 가축개량 효율화
- 토종자원 및 개량종을 활용한 우수품종(계통) 개발 및 산업화
 - 「흑염소 개량사업」 개량체계 개발(가축검정기준 개정, '18~'19)
 - 개발가축(난축맛돈, 우리흑돈, 토종닭)의 민간보급체계 구축·이전

□ (생산성) 축산물 자급률 제고, 생산비 절감을 위한 생산체계 마련

- 주요 축종별 생산성 향상 및 품질 고급화 기술 개발
 - * (한우) 비육기간 단축(31.2개월 → 28) 기술, (돼지) 생산성(MSY) 향상 사양기술, (가금) 단단하고 위생적인 달걀 생산 기술 등
- 생산비 절감을 위한 신규 사료자원 확보 및 최적 급여체계 구축

□ (냄새저감) 축산냄새 저감기술 현장보급 및 정책지원 강화

- 친환경 축사관리기술 제시 및 축종별 분뇨배출량 재산정
 - * (냄새) 암모니아·황화수소, (분뇨) 돼지·닭 등 9축종, (관리기술) 축사세척방법
- 개방형 돈사 밀폐에 따른 냄새저감효과 및 생산성 분석(농식품부 협조)
- 미생물 활용, 사육시설 개선 등 종합기술 시범사업(10시군) 추진

□ (반려동물) 반려견 사료의 국산화 및 질병예방 기술 개발

- 국산 농산물 등을 활용한 기능성 사료(비만·당뇨·치석 예방) 및 간식 개발
- 반려견 퇴행성 유전질환(안구질환) 조기진단 유전자마커 발굴(15종)

다 수출 지원기술 개발 및 현장애로 해결

◇ 수출확대 및 안전한 유통을 위한 선도유지 기술 현장보급

- 기술적용(누계) : ('17) 딸기 등 6품목 → ('18~'19) 10(복숭아, 배추 등)

□ (수출지원) 수출 농산물 안전관리 및 선도유지 기술 개발·보급

- 수출대상국 농약잔류기준(IT) 설정 확대('17: 12국가 21,300품목 → '18: 12국가 23,000) 등을 통한 농산물 안전생산 기반 구축
- 품종별 딸기 선도유지(CO₂ 처리·MA포장) 기술 및 수출용 엽채류의 수확후관리 체계 확립(상추·깻잎: 기술보급, 배추: 캐나다 시범수출)
- 수출 과실, 인삼, 버섯의 부패억제 선도유지 기술 보급
 - 포도 수출용 선도유지 기술 보급('17: 화성 → '18: 천안, 영동)
 - 인삼(수삼, 새싹인삼)·버섯 수출용 MA포장 기술 개발(베트남 시범수출)

√ 중국 생산단지(하이난성 등팡시) 이용 국산 국화 '백마'의 일본 수출 추진 : 30만본

□ (유통지원) 선진국형 유통환경 및 안전한 품질관리체계 개선

- 단기 유통온도 설정 등 도매시장 유통 채소(당근, 토마토 등 5종)·과일(사과 등 3종)의 계절별 최적 환경조건 확립
 - * 도매시장 내 손실률 감소 : (관행) 15~20% → (개선) 5~10
- 농산물산지유통센터용 손실경감기술, 농가용 선도유지 체계 현장 적용(양송이 등) 및 플라즈마 이용 채소(배추, 양파) 저장기술 확립

□ (현장지원) 수출현장 애로 해소 및 유망품목 육성

- 현장 맞춤형 컨설팅을 통한 수출확대(수출증가율 목표 : 12%) 지원
 - 유망 수출단지 대상 유관기관합동 집중컨설팅으로 품질향상(6개소)
- 개발기술 적용 및 실증 등으로 유망품목 육성(당조고추 등 5품목)

6

글로벌 농업기술협력

가 개도국 기술지원(ODA)

- ◇ 전략적·통합적 ODA 사업 추진기반 구축 및 성과확산
 - 시범사업 농업생산성 향상률 : 기존대비 25%이상

□ (전략적 ODA) 국익우선 외교정책에 부합하는 사업 추진

- 중점협력국인 아프리카 가나에 신규 KOPIA⁴⁾센터 설치('18)
 - 국가협력전략(CPS)에 따라 농업생산성 향상과 소득증대에 주력
 - * 추진일정 : MOU 체결(2월) → 소장 파견(5월) → 개소식(8월)

□ (통합적 ODA) 민관협력 및 부처 간 융합 우수사례 도출

- KOPIA센터별 협업전략 수립(상반기), 『1센터 1협업사업』 추진
 - '농산업 수출확산과 연계된 민관협력'이 가능한 사업을 우선 검토
 - * 산업부 ODA로 생산한 트랙터를 베트남 KOPIA 센터에 투입
- 「ODA 농업기술 매뉴얼」 발간·보급을 통한 우수성과 확산
 - * 캄보디아(양계), 스리랑카(양파 종자), 필리핀(벼 종자), 볼리비아(씨감자)

□ (협의체 성과확산) 대륙별 맞춤형 기술지원 및 현장적용 강화

- (AFACI⁵⁾) 국제미작연구소를 통한 내염성 벼 품종 선발·보급 : 9개국
 - * 메콩강 연안 등 동남아시아 염해 확산에 따른 벼품종 개발 요구('17)
- (KAFACI⁶⁾) 국가별 다수성 벼 선발 및 현장실증 확대 : 20개국
 - * 국제기구(AfricaRice, AGRA 등) 연계 : 벼 5품종 등록, 현지육종가 20명 육성
- (KoLFACI⁷⁾) 원예작물 수확 후 품질관리 모델 구축 : 8개국
 - * 토마토, 딸기, 망고 등 수확·유통단계별 관리기술 매뉴얼 개발보급

4) KOPIA : Korea Program on International Agriculture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

5) AFACI : Asian Food & Agriculture Cooperation Initiative 아시아 농식품 기술협력 협의체

6) KAFACI : Korea-Africa Food & Agriculture Cooperation Initiative 한-아프리카 농식품 기술협력 협의체

7) KoLFACI : Korea-Latin America Food & Agriculture Cooperation Initiative 한-중남미 농식품 기술협력 협의체

나 국제기술협력

- ◇ 국제기관·기술강국과의 협력 확대 및 북한농업 연구 강화
 - ('17) 8국제기관, 12국가(15연구기관) → ('18) 9, 14(20)

□ (국제기관) 국내 R&D 지원을 위한 사업추진 강화

- 기후변화대응 유용작물 유전자원 도입·평가 등 추진(9사업)
 - * 아열대작물, 고온/가뭄에 견디는 감자·밀·수수, 목초사료자원 등
- 농업 유산보존 및 유기농 전문가 육성 등 신규 추진(3사업)
 - * 농업유산(UN 국제연합), 유기농(IFOAM 세계유기농업운동연맹) 등
- 국익확보 및 국제사회 기여를 위한 국제농업기술 쟁점 대응
 - *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13분과, 기후변화 정부간협의체(IPCC) 등

□ (기술강국) 전략적 첨단 신기술 도입 및 협력국가 확대

- 치유농업, 동물복지, 농약안전성 평가기법 등 신규 추진(10사업)
 - * 동물활용치유, 하천생태계, 농약위해성, 간척지 염해 등
- 원예 및 식량작물 부가가치 향상을 위한 협력국가 발굴(2국가)
 - * (터키) 고부가 식량·원예 유전자원, (이탈리아) 쌀 가공 유전자원 등
- 공동 농업이슈 해결을 위한 국제 워크숍 추진(일본, 중국 등 2회)

□ (북한농업) 북한 곡물 생산량 추정 및 대북 농업협력 대응

- 북한 곡물생산량 추정('91~계속)을 통한 정부정책, 통계자료 지원
- 남북관계 개선에 대비 대북 농업기술 지원 준비 및 협업 강화
 - '남북농업기술협력지원단' 운영 : 식량·원예·축산 등 5팀 20분야

- ※ 통일시대 식량안보를 위한 한반도 북방지역 생산성 향상기술 개발 추진
 - (품종개발) 남·북한 및 북한-중국 접경지역 적응품종 선정(벼, 맥류, 옥수수 등)
 - (재배기술) 한반도 북방지대 식량작물 최대생산 작부모형 및 적용기술개발

7 지역경제 활성화 및 전문인력 양성

가 지역 연계 6차산업화 추진

- ◇ 6차산업 가공상품 개발 및 창업지원으로 농가 소득증대 도모
 - 창업사업장 연평균 소득증가율 : ('17) 11.8% → ('18) 12.2

□ (가공·창업) 농업인의 농식품 가공창업 활성화 생태계 조성

- 지역농산물 가공활성화를 위한 농산물공동가공시스템 구축
 - * 가공센터 조성·운영(74개소), 가공기술 표준화(25개소), 운영 매뉴얼 제작(2종)
- 농업인의 소규모 가공창업 지원 및 식품위생 역량강화 교육
 - * 소규모 창업(33개소), 시설장비 개선(3개소), 품질관리 기술교육(100명)
- 농가맛집 콘텐츠 보급(30종), 음식관광 상품개발 등 향토음식과 문화가 있는 복합형 농촌외식산업 발굴 사업화

□ (유통마케팅) 농가경영체 가공제품 개선 및 판로확대 지원

- 지역농산물 직거래 확대 전시판매장 운영(4종, 26개소)
- 6차산업 경영체 마케팅 역량강화 교육 및 전문가 컨설팅 추진
 - * 마케팅 기술지원(10개소), 디자인 개선 및 결합상품 개발 MD컨설팅(30회)
- 소비트렌드에 적합한 상품 개선, 유통조직화 및 온라인 판매 확대
 - * 가공상품 품평회(8월), 유통조직화(10개소), 입점지원(오픈마켓, 홈쇼핑 등)

□ (지역특산) 지역 특화품목을 활용한 융복합산업 육성 지원

- 지역 특산품 중심 기술개발·보급 등 특성화 추진체계 구축
 - * 지역농업 특성화(25개소), 연구기술 공유회 발표(1회, 20건), 현장 컨설팅(25회)
- 6차산업 가업 승계농 네트워크 구축 및 참여농업인 역량 강화
 - * 가업승계농 교육 및 네트워크(30명), 담당자 연찬회(50명), 전문가 양성(40명)

나 고객·현장 중심 신기술 보급

◇ 현장수요 중심의 신기술 확산으로 기술수준 향상 및 일자리 창출

○ 신기술보급 일자리 창출 : ('17) 1,220명 → ('18) 1,285

□ (고객중심) 고객 유형별·수준별 맞춤형 기술보급 강화

○ 농가유형(고령농, 청년·여성농업인 등) 및 기술수준에 맞게 분류·가공(시범사업, 교육·연시, 동영상 등)하여 신속하게 현장보급

○ 지자체·유관기관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현장 컨설팅 지원

* 민간전문가(75명) 및 현장지원단(203명)을 운영하여 분야별 컨설팅

□ (현장확산) 수요자 중심의 기술보급으로 현장 체감성과 제고

○ 신기술시범(단위기술)·농업현안해결시범(종합형기술)으로 분류하여 현장수요 중심 기술 확산으로 신규 일자리 창출('17: 1,220명 → '18: 1,285)

* (신기술시범) 신소득재배 등 815개소 / (농업현안해결) 발농업기계화 등 31개소

○ 지역특산품 융복합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지역자율사업을 확대('18: 621억 → '19: 650)하고 효과가 입증된 사업은 정책사업으로 확산

* 정책사업화(중앙/지방) : ('17) 23종 / 123종 → ('18) 25 / 130

○ 중앙·지방간 실시간 정보확산이 가능한 온라인 시스템 보급(9개소)

* ('18) 도별 시범운영(9개소) → ('19이후) 효과성 검증 후 전국 확산(156시군)

□ (기능강화) 지방농촌진흥기관을 지역농업발전 거점으로 육성

○ 시군센터를 3개 유형으로 분류, 지역특성 등을 고려하여 집중 육성

* (도농복합형) 창업센터 육성, (농촌형) 농산업 비즈니스 강화, (도시형) 농업가치 확산

○ 도원·시군센터를 농업분야 현장지원 거점기관으로 활용

* 4차 산업혁명대응(스마트팜 테스트베드), 지역푸드플랜(안전성분석, 식생활교육) 등

다 미래 농업인력 양성

◇ 농업지식과 경영능력을 겸비한 농촌지역사회 인재 양성

- 품목별 정예청년농업인 육성 : ('17) 3개회, 115명 → ('18) 5, 1,000

□ (인력육성) 전문경영인으로서의 유형별·단계별 역량향상

- 4-H육성 프로그램 개편과 지도교사(1,638명) 대상 교육·인센티브 확대
 - * 영농실습·직무교육 개설(4월), 농산업 트렌드(8월), 포상·해외연수 추진
- 성장단계별 전문교육*과 청년 4-H회원을 도시·농촌 연계 전문가로 육성하기 위한 'Fresh Start-up'⁸⁾과정 운영(2회, 80명)
 - * (신규) 영농기초(4.4천명), 현장실습(730명) → (전문·심화) 농업인대학(13천명) 등

□ (조직화) 품목별 청년농업인 네트워크 구축 및 조직화 지원

- 청년농업인의 기술수요가 많은 품목으로 단계적 확대 추진(5개회)
 - * 품목 네트워크(누적) : ('17) 3개회(한우·쌀·체협) → ('18) 5(시설채소·창업 등)
- 청년농업인(45명)과 신진연구자(20명)간 공동포럼 운영으로 현장 중심의 연구과제 기획 및 추진

□ (정책확산) 청년농업인의 성공적 영농 정착 지원과 성과 확산

- 농식품부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대상자(1,200명)에게 강소농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여 청년 강소농으로 육성
 - 경영진단·분석·사업계획 수립, 경영역량 향상 교육 및 컨설팅 지원 등
-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사업(중앙 40개소, 지자체 105개소) 및 창업 아이디어 공모전(11월) 추진
 - * 청년농업인 SNS자율모임체(120명) 운영지원 : 정보교류, 기술컨설팅 등

8) Fresh Start-up 교육 : 영국에서 추진한 '프레쉬 스타트' 귀농정책을 적용하여 도시에서 농업·농촌에 진입하는 인력에게 사회적, 관리적 능력을 함양하는 프로그램을 착안하여 적용

라 지역상생 (혁신도시 시즌2)

◇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의 성공모델 선도

- 민관협업 R&D 공동사업 발굴, 농생명연구협의회 개편·운영 등

□ (Plan 1) 종자산업 육성(농촌진흥청 ↔ 농업기술실용화재단 ↔ 종자기업체)

- 종자협회·기업체와 기술수요조사 협의(2월) 및 공동과제 협력
 - * 유전자원 육종 소재화 기술('19~'23) 등 신규과제 협력 확대
- 민간종자기업체 활용도가 높은 우수 농업유전자원 정보(형질특성, 병저항성, 기능성, 표현형 이미지 등) 제공 및 분석 서비스 강화
 - * 우수 농업유전자원(원예, 특용, 식량) : ('17) 149자원 → ('18) 300
 - * 분자표지 및 기능성 성분분석(6종 28성분) : ('17) 128천점 → ('18) 150
- 국내 우수 종자기업 홍보·수출 및 국제종자박람회 개최(10월) 지원
 - * 참여업체 및 수출계약 : ('17) 36개사, 19억원 → ('18) 36, 25

□ (Plan 2) 농생명산업 육성(농촌진흥청 - 지자체 - 대학 - 공공기관)

- 개발기술 실용화를 위한 공동 기술이전 시스템 마련 및 설명회 개최(10월)
 - * 수요자 pool 등 공동 활용·협력으로 기술이전 활성화 : ('17) 127건 → ('18) 140
- 농생명분야 벤처 창업 생태계 조성
 - 스마트 팜 등 ICT 점인증센터 구축('18~'20)으로 기술실용화 지원

□ (Plan 3) 융복합산업 육성(농촌진흥청 - 전북혁신도시 이전기관)

- 한국식품연구원과 협력을 통한 전통식품 자원화 및 산업화
 - * 발효미생물 종균 자원화(농진청) ↔ 미생물 대사체 등 응용기술(한식연)
- 국토정보공사(LX) 기본도 기반 농업 토양환경서비스 고도화
 - * LX기본도+흙토람 정보 : 전국 필지별 토양주제도(물리·화학적 등) 제작 및 활용

8

삶의 질 향상 및 현장소통 강화

가 농촌복지 및 공동체 활성화

◇ 안전하고 편리한 농작업 환경 조성 및 농업인 복지 향상

- 농작업 안전사고 예방 전문인력 양성 : ('17) 35명 → ('18) 285

□ (농작업 안전) 농작업 환경개선 및 재해예방 관리기반 구축

- 농작업·농기계 안전·편이증진 기술 개발 및 실용화(기술이전 3종)
- 농업인 업무상재해 통계 생산(1만 농가) 및 중앙DB센터 운영
 - * 빅데이터(건강보험·농업인안전보험 등)활용 고위험군 분류, 재해인정 기준 설정 등
- 농작업 안전사고 예방관리 전문인력 양성('17: 35명 → '18: 285) 및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개선과 영농철 현장활동 강화
 - * 사고유형별 교재·리플릿(30만부), 생활개선회원(8만명) 중심의 현장안전 활동 지원
- ※ 봄철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 캠페인 추진(3~4월, TBN 교통방송)

□ (농촌복지) 고령농, 여성농업인 등 맞춤형 생산복지 확산

- 고령농업인 소일거리 사업화 지원으로 생산적 복지구현
 - * 농촌어르신 복지실천 시범(106개소)으로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소득 증대
- 여성농업인의 경영참여와 다문화 가정의 영농정착 기술지원
 - * 부부 또는 2세대 가족경영협약(120명) 및 다문화가정 멘토링(400명) 등

□ (공동체 활성화) 농촌주민 참여형 지역개발 및 자립역량 강화

- 주민참여와 잠재역량 개발로 자립형 농촌공동체 만들기 추진
 - * 농업인교육, 농업인상담소장 역할 토론회 등 : ('14~'17) 18개소 → ('18) 8
- 지역 특성을 반영한 고령농 공동체 비즈니스 지원 매뉴얼 개발
- 전문가 육성(30명) 및 농업인 상담소장 등 지역기반 전문가 활용 확대

나 도시·치유농업 육성

◇ 국민건강 개선과 체험·치유를 위한 모델 및 기술 개발

- 미세먼지 저감 '그린오피스' 모델 개발(누적) : ('17) 3모델 → ('18) 4
- 개발 정책대상 : ('17) 전문인력 자격기준 → ('18) 생애주기별 설계

□ (국민건강) 쾌적한 도시환경 개선 그린인프라 기술개발

- 식물을 이용한 미세먼지 저감시스템 개발(~'17: 20종 → '18: 35)
- 사무공간별 그린오피스 배치모델 개발('17: 3모델 → '18: 4)
- 공동주택 유휴공간을 활용한 도시농업 활용모델 개발(LH 공동)
*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공동으로 텃밭과 연계한 LH팜 사업 추진('18)

□ (치유농업) 치유 효과 메커니즘 구명 및 외연 확대

- 식물재배 활동의 '식물-환경 치유효과 발현 경로' 분석(10월) 및 실버세대 맞춤형 프로그램 검증(신체, 운동역학, 심리)
- 아동대상 반려견 활용 교육모델 개발 및 치유효과 구명
- 사회성 향상(교사 비의존, 또래와 상호작용), 치유 매뉴얼 개발
- 치유음식·체험농장 등 치유농업 사업모델의 현장 실용화 지원
* 시범사업 : ('17) 8개소 → ('18) 10(원예 4, 축산 4, 곤충 2)
- 예방 중심형 치유농업 매뉴얼 보급 및 전문가 육성 교육 확대
* 인지적·사회적·정서적·지적 효과 홍보, 치유농업 전문가 육성(60명)

□ (6차산업) 농업·농촌의 다원적 가치를 반영한 치유관광 자원 발굴

- '농촌다움'에 기반한 국민체감형 농촌 치유관광 모델 개발
- 6차산업형 농촌관광 체험프로그램 개발로 사업 다각화
* 생산·생태형(1차), 제조·가공형(2차), 교육·문화형(3차) 프로그램 개발

다 찾아가는 영농현장 지원

- ◇ 신속하고 품질 높은 민원서비스 제공으로 고객만족도 향상
 - 고객만족도 향상 : ('17) 91.6점 → ('18) 92

□ (민원대응) 신속·정확한 민원해결을 위한 선제적인 대응

- 「행복농업 이동상담 장터」 내실화로 선제적 민원해결(25회)
 - * 민원사례 분석 → 사례해결 중심 교재 → 이동상담장터 운영(2~10월)
- 식량·원예·축산·기초 등 작목·분야별 영농현장지원단 운영(연중)
- 농사로 「작목기술정보」 신규콘텐츠 확보로 고객 니즈에 신속 대응
 - 신기술·신품종을 알기 쉽고 재미있게 소개하는 '알쓸신農(알아두면 쓸모있는 신기한 농업기술)' 동영상 제작
- 현장지원·국민신문고 처리 사례 등 자료 발간·제공(SNS 등)
 - * 민원사례집 「바로 처리한 농업궁금증」(2종), 네이버 지식iN 「민원 Q&A」(1,000건) 등

□ (연계강화) 중앙과 지방간 연계를 통한 소통·협력 강화

- 수요 계층별 의견수집·모니터링 등 다양한 소통창구 운영
 - * 지역담당관(중앙), 녹색리더포럼(센터소장), 기술·농촌자원포럼(과장), 밴드(실무자)
- 현장애로사항 '신호등' 시스템 구축 및 이력관리로 환류 활성화
 - * 처리단계별 분류 및 처리(즉시수용 : 녹색, 검토필요 : 황색, 수용곤란 : 적색)

□ (민원개선) 환경변화에 신속 대응으로 고품질 민원서비스 제공

- 「민원품질향상연구회」 운영으로 민원행정 제도 개선과제 발굴
- 영농애로사항 공유·쌍방향 소통을 위한 채널 다양화 및 홍보 강화
 - * SNS(페이스북, 네이버 밴드), 신문(중앙지, 전문지 등), 방송(TV, 라디오) 등
- 재소자·출소예정자 대상 귀농·귀촌교육 및 창업상담 내실화

2. 당면현안 : 농자재 안전관리

◇ PLS⁹⁾ 전면시행 대비 농약등록 확대 등 농자재 안전관리 강화

- 농약등록(누계) : ('17) 1,223적용대상 → ('18) 2,893

□ (PLS대응) 소면적작물의 농약등록 확대 및 교육·홍보 강화

- 아열대 및 병해충 발생증가 작물 등에 대한 농약직권등록 추진
 - 농약직권등록시험 및 소면적작물 병해충방제 매뉴얼 개발(2월)
 - * (약효·약해) 248시험, (잔류성) 949시험 ⇒ 시험결과 상시평가로 조기 등록·기준설정
- 농업인 피해 예방을 위한 PLS 및 농약안전사용 교육·홍보 강화
 - * (교육) 농업인·농약업체·판매상·농협 등, (홍보) 동영상, 카드뉴스, 전문지 등

□ (안전관리) 농자재 관리 강화로 농업인·소비자 안전 확보

- 등록신청 농약과 원제에 대한 안전성 종합평가(500품목) 및 등록 유효기간(10년) 만료 농약 대상 재평가 실시(207건)
 - 국내 등록 농약원제의 위험성·유해성 표시기준 고시(3월)
- 특별관리대상 농약(비나인, 에피흠 등)의 취급제한기준 등 강화
 - * 구매자 정보기록 강화, 사전 사용계획서 제출, 주의문구 표기 의무화 등

□ (유통관리) 부정·불량 농자재 유통점검 및 시스템 구축

- 농약 유통 쏠과정 이력관리시스템 근거 법령 마련(농식품부 협업)
- 관세청 등 유관기관 협업 및 지자체 공무원, 명예지도원(100명)과의 협력을 통한 농자재 유통점검 지속 추진(농약판매상 전수점검 등)
- 미검정 수입 농기계, 안전장치 미부착 및 개·변조 여부 조사(연중)
- 농약 판매업 등록 및 교육 관리시스템 구축으로 유통점검 효율화

9)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ositive List System, PLS): 농식품 중 농약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농약성분에 대해 일률기준(0.01mg/kg)을 적용하는 제도(2019년부터 전면 시행 예정)

식량안정생산**쌀 수급안정 지원 및 발작물 자급률 향상**

- ☑ 쌀가루용 벼 품종 안정 생산기술 확립(수발아 최소화 등) * 한가루, 신길
- ☑ 논재배 발작물(콩)의 생산성 및 소득 향상(소득 30~50% 증대)
- ☑ 쌀 적정생산 및 조사료 자급률 향상을 위한 사료용 벼 재배 확대
* ('17) 7품종, 823ha, 500톤 → ('18) 9품종, 1만ha, 2,500톤

안전한 먹거리**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 안전농산물 생산 지원**

- ☑ 선제적 대응을 통한 친환경·식품관리의 소비자 신뢰도 제고
 - DDT 등 잔류농약 및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기준 설정(환경부 협업)
 -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 지원을 위한 지표 개발(평가·이행점검 매뉴얼)
 - 유기농산물 종합기술 현장실증(9개도, 10작물), **GAP** 전문가 양성(270명)
- ☑ 달걀 안전 관련 닭진드기 제어기술 개발 : ('17) 포획기술 → ('18) 1종
- ☑ 국내 농가적합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기준 제시(산란계)

스마트농업**한국형 스마트팜 및 융복합 기술 활용 현장애로 해결**

- ☑ 한국형 2세대 스마트팜 표준모델 개발(토마토), 스마트팜 창업 지원
- ☑ 시설원예·축산장비 ICT 표준화로 업체간 장벽 해소 * 국가표준 12종
- ☑ 위성·무인기 등 첨단장비 활용 농작물 농업관측 신뢰성 향상

신성장동력 창출**종자산업, 농업생명공학 및 기능성소재 등 신산업 창출**

- ☑ 유전자원 정보공유 등 민관협력체계 구축으로 종자산업 육성
- ☑ 곤충유래 신소재 활용 식의약품 개발로 곤충시장 확대 * 1.4조원
- ☑ 돼지각막 이식 원숭이의 생존기간 연장 : ('17) 234일 → ('18) 365

경쟁력 강화

품질 우위 확보를 통한 기술경쟁력 제고 및 수출지원

- ☑ 국산품종 보급률 향상(원예특작 주요 6작목) : ('17) 41.7% → ('18) 42.3
- ☑ 한우 생산성 향상을 위한 비육기간 단축 : ('17) 31.2개월 → ('18) 28
- ☑ 반려견용 기능성(비만·당뇨 예방) 사료 개발 : ('17) 2종 → ('18) 3
- ☑ 수출 후 손실률(딸기, 참외, 꺾임) : ('17) 20~25 % → ('18~'19) 10~20
- ☑ 수출현장 맞춤형 컨설팅을 통한 수출증가율 : 전년대비 12% 증

글로벌 협력

농업분야 개도국 지원 성공모델 개발 및 국제협력 선도

- ☑ 개도국 지원(ODA) 시범사업 농업생산성 향상률 : 기존대비 25%이상
- ☑ 개도국 지원(ODA) 성과확산(농가실증 사업) : ('17) 10건 → ('18) 20
- ☑ 아프리카 식량난 해결을 위한 현지 벼 품종 등록 : ('17) 0 → ('18) 5품종
- ☑ 국제협력 다변화(국제기관, 국가, 연구기관) : ('17) 35개 → ('18) 43

농촌활력

지역경제활성화 및 전문인력 양성

- ☑ 특성화지원 농가소득 증대 : ('17) 32.5% → ('18) 33.2
- ☑ 농산물종합가공시설 확대('17: 69개소 → '18: 74)로 신규창업 지원
※ 창업사업장 연평균 소득증가율 : ('17) 11.8% → ('18) 12.2
- ☑ 한국4-H활동지원 기본시책 개정(연령확대, 육성목표 설정 등)으로
청년농업인 4-H회원 증가 : ('17) 4.6천명 → ('18) 5천명 이상

농업인 복지

농업인 재해예방 및 삶의 질 향상 지원

- ☑ 농작업 안전사고 예방 전문인력 양성 : ('17) 35명 → ('18) 285
- ☑ 기초노령연금 외 고령농업인 추가소득지원 확대('17:13개소 → '18:106)
- ☑ 생활개선회원 및 다문화 여성농업인 영농정착 확대('17:8만명, 200명 → '18:10, 400)
- ☑ 식물-환경 치유효과 발현경로 분석 및 치유농업기술 시범확대(10개소)

[별첨 2]

2018년 주요업무계획

- 산림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통한 국민 삶의 질 향상 -

2018. 1.



2018년, 내 삶을 풍요롭게 하는

숲을 만들겠습니다!

나무가 자라면서
온실가스를 흡수해요

CO2 흡수량

4,851만t

산림재해,
지능화 시스템으로
스스로 지켜요

인명피해

0명

쾌적하고 활력 넘치는
산촌에서 살고있어요!

산촌 거점권역

0 ▶ 5개

산림에서 스트레스를
날리고 재충전해요

산림복지서비스 수혜자

2,060만 ▶ 2,310만명

국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도시숲이 늘어나요!

1인당 도시숲 면적

9.9 ▶ 10.9㎡

산림에서 돈도 벌고
일자리도 나와요

일자리 창출

19천개

우리 임산물이
세계로 수출되요

임산물 수출액

4.4억 ▶ 5억\$



목 차



I. 2017년 성과와 평가	237
II. 2018년 업무추진 여건	240
III. 2018년 업무추진방향	241
IV. 주요업무 추진계획	243
1. 주요정책	
① 산림자원 순환경제 구축	244
② 숲을 국민의 쉼터로 재창조	248
③ 사람중심의 녹색공간 조성	251
④ 산림재해 대응 및 생태계보전 강화	254
⑤ 국제 산림협력 증진	257
⑥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산림행정 혁신	260
2. 당면현안	
① 산불 방지 대책	262
②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264
V. 공통과제 추진계획	
1.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정책	265
2. 3만불 시대 원년, 정책전환 과제	266
3. 갈등과제 및 사회적 대화(타협) 과제	267
4. 국민 안전·안심 정책 및 과제	268
5. 근무혁신 추진계획	269

I. 2017년 성과와 평가

1

성 과

□ (정책방향) 사람중심의 산림정책으로 패러다임 전환

- 개청 50주년 산림미래비전*을 선포(10.18)하고 제6차 산림기본계획 수립
 - * 일자리가 나오는 경제산림, 모두가 누리는 복지산림, 산림과 자연의 생태산림
- 소득주도성장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일자리 중심 행정기반 마련
 - * 산림일자리창업팀 신설('17.8) 및 산림일자리 종합대책 수립('17.10)

□ (산림육성) 산림사업 운영체제 개선 및 제도기반 마련

- 산림기술진흥법 제정('17.11)으로 산림사업 품질제고 기반 마련
 - * 산림기술자 경력관리, 산림기술용역업 등록관리, 산림사업 안전관리 강화 등
- 산림용 종·묘 고시 확대 및 조림 단비 현실화 등 산림사업 운영 개선
 - * 산림용 종자·묘목 : (종전) 23종 → (개선) 68종 (황칠·헛개 등 특용자원 추가)

□ (목재산업) 국산목재 활용을 증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

- 공공기관 국산목재 우선구매를 위한 목재이용법 개정('17.11)
 - * (종전) 국산목재 우선구매 권고 → (개선) 국산목재 우선구매 의무
- 산업부 주관 국정과제에 '산림바이오에너지 REC 가중치 상향' 반영
 -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의 이용·보급 촉진에 관한 규정' 고시(12월)
 - *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REC 가중치 상향(1.5→2.0)에 맞춰 범위·증명절차 등 규정

□ (산림복지) 민간주도 산림복지서비스를 확대하여 신 시장 창출

- 체계적인 산림복지정책 추진을 위한 제1차 산림복지진흥계획 수립
 - * 산림휴양, 교육, 치유 등의 개별 정책을 통합하는 비전 및 추진전략 마련
- 산림교육·치유전문가 양성·지원방식 변경으로 민간 일자리 창출
 - * 숲해설가 등 민간위탁(전문업) 전환으로 민간시장 활성화(687명)

□ (그린인프라) 산촌과 도시 등 공간중심의 산림정책 강화

- 지역 발전의 거점공간으로서 산촌에 대한 사회적 관심 환기
 - * 산촌 거점권역 육성방안 수립('17.9), 균형발전박람회 컨퍼런스 개최('17.11)
- 국민 참여형 도시녹화운동 등 도시숲 다양화 및 만족도 제고
 - * 동아일보 주관 '2017 대한민국 정책평가'에서 3.65점으로 전체 정책 중 4위 선정

□ (생물다양성) 수목원 네트워크 기반 구축 및 국제적 역량 확대

- 국립 법인수목원의 통합 운영을 위한 한국수목원관리원 설립('17.5)
 - * 한국수목원관리원 현황 : (정원) 175명, (조직) 5부·13실·31팀, ('17예산) 160억원
- IUCN Red-List 등재 등 산림생물다양성 국제적 활동기반 강화
 - * '17년 매미꽃, 매자나무, 할미밀망, 해변싸리 등 10종 추가 등록

□ (산림재해) 3대 산림재해(산불, 산사태, 산림병해충) 대응체계 강화

- 산사태 주관기관으로서 국가재난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 정비
 - * 산사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및 산사태대응 평가단 구성 운영 규정 제정
- 재난성 대형산불에 대비한 대형헬기 도입 등 산불대응체계 강화
 - * 대형·재난성 산불 대응방안 수립 및 대형헬기 2대 계약 체결('17년 추경)
- 재선충병 피해고사목 전량 방제(99만본) 및 선단지 선제적 방제
 - * 피해고사목 발생 : ('15.4) 174 → ('16.4) 137만본(△21%) → ('17.4) 99만본(△27%)

□ (국제협력) 산림분야 국제회의 개최로 산림외교 리더십 확인

- APEC 산림장관회의('17.10) 개최로 국제산림협력 논의를 주도
 - * 산림확대 등 역내 협력 강화를 위한 '서울선언문' 채택
- 제2회 아-태지역 도시숲회의(APUFM) 성공적 개최('17.9)
 - * 17개국 180여명 참가, 국가간 협력방안인 '서울액션플랜' 채택

□ 재난성 대형산불 발생시 재난정보 전파 및 유관기관 공조체계 미흡

- 산불재난 문자발송 기준 및 발송 주체가 명확하지 않아 혼선 초래
- 강풍시 진화 가능한 대형헬기와 전문 지상진화인력 부족으로 초동대응 한계 및 소방·군 등 유관기관의 일사불란한 지휘·공조체계 미흡

* 강릉·삼척 산불진화에 4일간 총 헬기 143대, 인력 35,841명 투입

☞ 대형산불에 체계적 대응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진화 역량 강화

□ 열악한 임업경영 여건 및 여전히 낮은 임업인의 소득 수준

- 농업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재해보험, 직불금 등 소득안전망 미흡

* 임가소득('16년, 3,359천만원) : 농가대비 90%, 어가대비 71%

☞ 산림경영 활성화를 통한 임업소득 증진 및 재해보험 등 안전망 지원

□ 다양한 국민수요를 반영하기 위한 산림복지단지 확보에 한계

- 관 주도의 국·공립 산림복지단지 조성 추진으로 예산확보에 제한

* 「산림복지법」 제32조(사업시행자) : 국가, 지자체, 복지진흥원, 공무원연금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 근로복지공단, 지방공사, 공익법인

☞ 사회적기업 등 민간참여 조성 및 서비스 제공 기회 확대 필요

□ 몽골 사막화방지 민간조림지에 대한 적극적 관리 부족

- 민간 조림지 4천ha의 효율적 사후관리가 부족하여 조림목 고사 등 발생

* 자치단체, 민간 조림 주체와의 긴밀한 협력관계 설정, 사후점검을 통한 권고 추진

☞ 정부간 협력을 넘어 지자체 및 민간의 사후점검 역할 강화가 필요

II. 2018년 업무추진 여건

□ (일자리) 저성장시대에 소득주도 성장을 위한 적극적 일자리 창출 필요

- 산림은 임산물 생산, 휴양서비스 제공 등 다양한 일자리 소재 보유
 - * 나무의사, 가드너, 산림탄소 검증인력, 목공전문가, 산림치유지도사 등
- 산림을 활용한 사회적기업 등에서 은퇴자,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 가능

□ (4차혁명) 산림에서도 BT·ICT 등 신기술을 융합한 신산업 출현

- 산림은 드론, 위성 등 첨단기술의 활용 가능성이 매우 높은 분야
 - * 소나무재선충병 예찰시 드론을 활용하여 1인당 조사 가능 면적이 10배로 증가
- 산림산업을 노동집약형에서 기술집약형으로 전환하는 계기로 활용

□ (삶의 질) 소득 3만불 시대에 맞는 선진국형 주거·복지 수요 증가

- 좋은 먹거리, 쾌적한 주거공간 등 삶의 질을 추구하는 소비 증가
 - *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인증 필요 의견이 83% (2015, 청정숲푸드 소비자 설문)
- 산림을 활용한 휴양활동이 등산, 캠핑, 레포츠, 치유 등으로 다변화

□ (안전) 이상기후로 산림재해(산불, 산사태, 산림병해충) 발생 가능성 증가

- 폭우, 가뭄 등 기상이변의 발생 빈도와 규모가 증가하는 추세
 - * 산사태 발생추이(연평균) : ('80년대) 231 → ('90년대) 349 → ('00년대) 713ha

□ (기후변화) 온실가스 감축의무 발생 및 기업활동 위축 우려 증대

- 파리협약 발효('16.11)에 따라 2030년까지 감축의무(3.1억tCO₂) 이행 요구
 - 산림은 유일한 탄소흡수원으로 기업부담 완화를 위한 역할 기대
 - * (일본) 목재활용·산림경영으로 총 배출량의 2.6% 감축, (중국) '05 수준 임목 축적 증대
- 기후변화 취약수종이 쇠퇴하고 있어 산림생물종의 체계적 보전 필요
 - * 세계적으로 매년 약 2만종이 멸종, 육상생물자원의 92%가 산림에 서식

Ⅲ. 2018년 업무추진 방향

1

기본방향

- 산림자원 순환경제를 구축하여 산림자원 가치제고, 임업인 소득 증진, 산림산업 활성화의 선순환을 유도하고 질 좋은 일자리를 창출
- 산림을 서민들을 위한 여가·휴식 공간으로 적극 활용하여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산림재해로부터 국민을 보호

□ (순환경제) 산림자원을 활용한 자원순환 경제와 혁신성장 실현

- 산림자원의 조성·육성·이용이 균형을 이루는 선순환 경제체제 구축
- 목재, 청정임산물, 산림휴양 등 다양한 산림가치를 국가경제에 적극 활용
- 임업인 소득안전망 확충 및 경영지원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 확대

□ (산림복지) 산림을 서민들의 편안한 여가·휴식공간으로 적극 활용

- 생애주기별 맞춤형 산림복지체계 확산으로 국민복지 증진에 기여
- 산림복지전문업 활성화 및 민간주도 발전으로 새로운 일자리 확대

□ (녹색공간) 숲에서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공간을 창출

- 산촌 거점권역을 지정·육성하여 산촌을 지역발전의 핵심공간으로 육성
-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하여 국민과 함께 추진하는 그린인프라 구축

□ (산림보호) 산불·산사태·산림병해충 피해 최소화 및 생태계 보전 강화

- 산림재해 대응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유관기관 협력체계를 강화
- 산림보호 강화와 훼손 생태계 복원을 통해 생태적 가치 증진

□ (국제협력)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 달성 등 국제사회 기여 확대

- 북한 황폐산림 복구 등 산림분야를 관계개선의 마중물로 활용

2

연말 이루고자 하는 모습

- 사람중심 산림자원 순환경제 성공모델 발굴 및 확산
 - 산림분야 일자리 창출 : 19천개
 - 산촌거점권역 육성 : 5개소
- 숲에서 일하고, 여가를 즐기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
 - 1인당 도시숲 면적(m²) : ('15) 9.9 → ('18) 10.9
 - 산림복지수혜자 확대 : ('17) 2,060만명 → ('18) 2,310만명
- 산불, 산사태 등 산림재해로부터 국민의 안전 확보
 - 평창 동계 올림픽 기간 중 철저한 대응으로 산불피해 최소화
 - 산사태로 인한 인명 피해 제로화 및 재선충병 확산 방지

<사람중심 산림자원 순환경제>

- ◇ 기존의 산림자원 육성 중심의 정책에서 탈피하여, 산림자원을 순환·이용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경제·사회적 부가가치를 창출
 - 국민과 임업인의 행복 증진을 위해 산림인력의 역량강화, 좋은 일자리 창출, 국민참여 확대 등 사람에 대한 투자를 확대



IV. 주요업무 추진계획

1

주요정책

비전

일자리가 나오는 **경제산림**, 모두가 누리는 **복지산림**,
사람과 자연의 **생태산림**

목표

산림을 국가경제와 국민생활의 핵심자원으로 재창조

중점과제

1. 산림자원 순환경제 구축

경제림 육성 / 목재·임산물산업 경쟁력 강화 / 산림탄소경영 / 일자리 창출

2. 숲을 국민의 쉼터로 재창조

산림휴양·레포츠·등산 / 산림교육·치유 / 산림복지서비스 기반 강화

3. 사람중심의 녹색공간 조성

산촌 거점권역 육성 / 도시 내 그린인프라 확충 / 산지관리 패러다임 전환

4. 산림재해 대응 및 생태계보전 강화

산불·산사태·병해충 대응 / 산림생태계 보호·관리 / 생물다양성 보전

5. 국제 산림협력 증진

AFoCO 등 다자협력 / 사막화방지 / 해외조림 / 북한산림복구

6.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산림행정 혁신

일자리 지원 / 불필요한 일버리기 / 교육혁신 / 소통강화 / R&D 실효성 제고

1 산림자원 순환경제 구축

1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육성·공급

<정책방향 및 목표>

◇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하면서 우량 목재 등 임산물을 지속적으로 생산·이용하기 위해 경제림을 중심으로 육성·관리 강화

* 산림자원 육성체계 : 양묘(5천만본) → 조림(2만ha) → 숲가꾸기(21만ha) → 원목생산(567만m³)

◇ 국산 목재 생산량 확대 : ('17) 541 → ('18) 567만m³

□ (자원육성) 지역별, 기능별 특성을 고려한 조림·숲가꾸기 실시

○ 우량 종자, 묘목 공급을 위한 채종원 및 스마트 양묘시스템 확대

* 양묘시설 현대화사업 : 국유 2개소, 민유 5개소(강릉, 공주, 익산 등)

○ 경제림 육성단지를 중심으로 목재생산을 위한 산림사업 집중

* 경제림 육성단지 산림사업 집중률 : ('17) 69% → ('18) 70%

○ 공익림은 숲의 기능별 특성에 맞는 생태적 숲가꾸기 추진

* 경관관리, 수원함양 등 숲의 기능에 따라 전문화된 숲 관리기술 적용

□ (목재생산) 다 자란 나무를 벌채하여 목재산업계 원료로 공급

○ 원목생산 및 공급을 확대하고 국산 목재의 이력 관리를 시행

* '목재자원관리시스템' 운영을 위한 「목재이용법 시행규칙」 개정

○ 임도, 임업기계 등 목재생산 및 산림경영 기반시설 확대

* 경제림 육성단지 임도 확대(m/ha) : ('17) 4.8 → ('18) 5.3

* 임도효과 : 원목생산면적 40ha 확대(1km 조성시), 원목생산비용 30% 절감(10m/ha 기준)

□ (선도산림단지) 단지별 특화자원 조성 및 비즈니스 모델 발굴

○ 제재소, 가공공장 등 지역산업과 연계하여 선순환 구조 마련

* 강원 흥천(жат공장), 충남 흥성(광성제재소), 경남 산청(펠릿·톱밥공장) 등

<정책방향 및 목표>

◇ 산림에서 생산된 목재제품과 임산물의 산업경쟁력과 부가가치를 높여서 산림자원을 활용한 지속가능한 경제 발전을 유도

* 목재생산업 현황('15) : 23,441개 업체, 16만명

◇ 산림산업 생산규모(추정) : ('17) 48조원 → ('18) 50조원

□ (목재산업) 기술개발과 품질혁신을 통한 목재산업 경쟁력 제고

- 지역별 특화된 목재산업단지를 조성하여 국산목재 공급기반 구축
 - * 목재산업단지 조성 1년차 사업 추진(1개소) 및 지속적 예산 확보
- 유해물질 차단과 국민안전 확보를 위한 목재제품 품질관리 강화
 - * 관세청 협업조사 강화 및 계도위주에서 단속위주로 전환
- 목조주택 건축 시 용자 지원 및 목조건축 관련 규제개선을 위한 협의
 - * 목조주택 건축비용 용자지원(최대 1억원) 및 표준모델 개발·보급
 - * 규모제한, 내화·차음기준, 전문업종 신설 등 건축법, 주택법 관련 국토부 협의

□ (청정임산물) 임산물의 생산·가공·유통 체계화 및 수출 지원

- 현장중심 문제 해결을 통해 표고버섯 등 대표품목 산업 활성화
 - * 원산지 표시 개선, 정책-R&D-현장 통합 문제 해결모델 마련 등 지원 확대
- 온·오프라인 유통망을 확충하여 소비자 접근성·구매편의성 제고
 - * 임산물유통정보시스템을 개선하여 생산자·소비자 정보 지원 확대
- 수출 장애요인 해소를 위한 임산물 수출 OK 지원팀 운영 확대
 - * 수출 관련 정부지원 사업 소개 및 바이어 연결, 수출애로사항 청취 및 해소 등

□ (석재산업) 산림훼손과 안전사고를 최소화하고 산업 발전을 지원

- 「석재산업진흥법」을 제정하여 석재산업의 지원·관리 근거 마련
 - * 석재산업의 규모화·집약화, 전문기술인력양성, 지원 대상·조건·절차 등

<정책방향 및 목표>

- ◇ 신기후체제에 대응한 저탄소 경제 실현을 위해 산림의 탄소흡수를 늘리고 버려지는 목재 바이오매스를 신재생에너지로 활용
 - * 파리협약은 산림을 활용한 온실가스 흡수·저장원 보전·증진 활동을 촉구
- ◇ 산림에서 온실가스 국가감축 목표에 기여하기 위한 기반 구축

□ (산림탄소) 탄소 중심의 산림경영 강화 및 산림탄소거래 활성화

-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산림탄소 활용 기반 구축
 - * 스마트 산림탄소 관리체계 및 산림부문 흡수량 조기산정 방안 마련
- 산림탄소 거래 기반 구축 및 산림탄소 상쇄제도 활성화 추진
 - * 배출권시장 외부 사업에서 산림탄소흡수량 이용 방안 마련
- 국제 탄소시장과 연계하여 REDD+사업을 탄소배출권 사업으로 확대
 - * REDD+ : 개도국의 산림전용·황폐화 방지를 통해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메커니즘
 - * 우리나라는 4개국(인니, 캄보디아, 미얀마, 라오스)에서 REDD+사업 추진

□ (산림인증) 한국형 산림인증제도 국제화 등 지속가능경영 기반 강화

- 국제산림인증 연합프로그램(PEFC) 상호인정 수검 및 취득
- 산림인증 활성화 방안 마련 및 확산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 한국산림인증제도 홍보를 강화하여 산림인증 제품 소비 확대

□ (바이오에너지) 버려지는 목재를 활용한 탄소중립사회 실현

- 발전소의 국산 산림바이오에너지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 *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REC 가중치 상향을 위한 고시 개정(산업부)
- 목조건축 및 목재이용 활성화를 통한 도시 탄소저장 기능 확대
 - * 목조건축 규제개선을 통한 목재이용 확대 및 지역 환경 개선

<정책방향 및 목표>

- ◇ 산림자원 순환경제를 구축하는 매개체로서 일자리를 지원하여 연관 산업을 활성화시키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의 선순환 구축
- ◇ 신규 장기 일자리 창출(누계) : ('17) 1.5천개 → ('18) 3.5천개 (순증 2천개)
* 귀산촌 창업, 산림형 사회적경제, 산림복지전문업, 수목진료 전문인력 등

□ (사회적경제) 산림일자리발전소로 산림형 사회적경제 진출분야 확대

- 사회적경제 육성과 창업활동을 현장 밀착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 신설
* 지역자원 조사·진단, 인재양성, 사업발굴·육성 등 사람중심 지원 체계
- 지역 기반 산림비즈니스 모델 개발·보급으로 창업영역 확대
* 지역주민이 주도하고 참여하는 사업주체 육성, 자생력 향상 및 네트워크 구축
- 산림분야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 수립·추진으로 지속성장 도모
* 사회적경제를 선도하는 신규 프로젝트 개발, 기존 산림인프라 활용방안 등

□ (전문일자리) 청년을 위한 산림분야 신규 전문일자리 제공

- 나무의사제도 시행('18.6)을 위한 하위법령 제정 및 전문인력 양성
* 나무의사 : 나무의 병충해를 예방하고 진단·치료하는 전문인력
- 산림기술자의 교육 및 자격·경력 관리를 강화하여 전문성 향상
* 산림기술자 양성·관리, 교육훈련 의무화 등 산림기술진흥법 하위법령 제정('18.11)

□ (일자리 질 개선) 전문성 향상과 작업환경 개선으로 만족도 제고

- 산림기술자 등 산림분야 취업자 보수교육 강화, 교육훈련 지원
* 취업 취약계층은 산림 관련 자격증 취득 지원 등 민간일자리 이동 지원책 강화
- 고용환경 실태조사·분석을 토대로 산림일자리 질 제고방안 마련
- 사업별 품셈 개선 등 전문성과 노동여건을 고려한 임금 현실화

2 숲을 국민의 쉼터로 재창조

1 숲에서 즐기고 누리는 삶 확산

<정책방향 및 목표>

◇ 숲을 다양한 체험활동과 여가를 즐기는 문화공간으로 육성함으로써 서민들의 복지 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

* 1년에 1회 이상 산행인구는 국민의 77%인 32백만명으로 조사('15, 산림청)

◇ 숲길조성·정비 : ('17) 15,270km → ('22) 22,270km

산림레포츠 활동인구 : ('17) 390천명 → ('22) 500천명

□ (산림휴양) 자연휴양림의 산림관광 및 지역상생 역할 강화

○ 산림복지 향상 및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해 자연휴양림 확충

* '21년까지 국립 4개, 공립 19개 신규 추가조성(총 166→189개)

○ 자연휴양림별 산촌마을 협의체 구성으로 상생·협력 강화

* 휴양림관리소 지역팀(4)에서 주민대표 간담회, 지역사업 발굴 등 주도적 역할

○ 획일적인 휴양림 조성·운영방식에서 탈피하여 다양한 수요 대응

* 레포츠(암벽·트리탑, 산악자전거), 문화예술공간(버스킹 공연) 등 특성화

□ (숲길·등산) 국가숲길 지정·관리 기반 구축 및 산행문화 개선

○ 국가 숲길 지정·관리제도 도입을 위한 법적기반 마련 및 시범 운영

* 예약탐방제 및 휴식년제 실시 등 체계적인 숲길 관리·운영 체계 구축

○ 관계부처·산악단체 및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자와 협력체계 구축

* 지역경제 활성화 및 산행문화 개선을 위한 민·관 거버넌스 활동 강화

○ 등산로 DB 확대·개방으로 산업화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

□ (산림문화) 산림을 다양하게 즐기는 국민의 문화 공감대를 형성

○ 국가 산림문화자산 지정 및 전통 보전을 위한 산림문화전집 발간

* 산림문화전집: ('16) 미술, 마을숲 → ('17) 산업, 정원 → ('18) 음악, 문화

○ 지역 특화 산림레포츠시설 조성 및 대회 개최(청장배 5회)로 저변 확대

<정책방향 및 목표>

◇ 수요자 맞춤형 산림교육,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국민이 산림에서 몸과 마음을 힐링하고 활력을 재충전

* 산림교육·치유전문가의 안정적 일자리를 확대하여 서비스 품질 제고

◇ 맞춤형 프로그램 수혜인원 : ('17) 398만명 → ('18) 430만명

□ (산림교육) 창의성·인성발달을 위한 산림교육 서비스 제공

○ 누리과정 연계 프로그램 개발 및 특화 유치원 조성을 위한 지자체 협력

* 행복청, 세종시교육청 협력을 통해 산림교육 특화 유치원 2개 조성(~'19)

○ 자유학년제 확대에 따른 청소년 대상의 차별화된 숲 교육 추진

* 산림일자리 체험 프로그램 확대, 정규교과와 연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 서비스 제공방식을 민간위탁으로 전환하여 고용환경 개선

* 전문업을 통한 산림교육·치유전문가 고용규모 : ('17) 687명 → ('18) 1,196명

□ (산림치유) 맞춤형 서비스 개발·제공으로 산림치유의 수준을 격상

○ 도시인근 숲에서 태아·산모 숲 태교 프로그램 확대 운영(2천→3천명)

○ 대상·증상별 산림치유 프로그램 및 매뉴얼 개발로 서비스 다양화

* 저출산 극복을 위한 난임부부 산림치유 프로그램 개발 등

○ 공공기관 협업 및 치매지원 등 사회보장제도와의 연계 강화

* 지역보건소 치매예방 시범사업 추진 및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과 연계

□ (수목장림) 친환경 장묘문화를 확산을 위한 수목장림 활성화

○ 공공형 수목장림 활성화를 위한 관련법령 개정 및 신규조성 지원

* 수목장림 조성 주체 확대 등 장사법 개정을 위한 복지부 협의 추진

○ 국유림내 묘지 수목장림 이장 및 산림복원 시범사업(100기) 추진

* 무연고 묘지→봉안시설 안치, 유연고 묘지→수목장림 안치

<정책방향 및 목표>

◇ 국민들이 누리는 산림복지서비스의 양과 질을 증진하기 위해서
산림복지 인프라를 확충하고 민간 시장 활성화를 유도

* 산림복지시설 : 유아숲체험원, 산림교육센터, 자연휴양림, 치유의숲 등

◇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발급 : ('17) 15천매 → ('18) 25천매

□ (인프라) 랜드마크 시설 조성 추진 및 산림복지단지 시범 모델 제시

○ 지덕권산림치유원 및 노령산맥 휴양·치유벨트 조성('18~'22) 추진

* 지덕권(827억원), 노령산맥(200억원) 공사수행방식 결정 및 기본계획 수립 등

○ 산림복지단지의 차별화된 개념 정립 및 단지 조성 절차 합리화

* (기존시설) 숙박·휴양·치유·여가 기능 ⇒ (단지) 기존 기능+장기체류·거주 기능

* 3단계의 조성절차를 2단계로 간소화, 개별시설 타당성조사 일원화 등 법령 개정

□ (민간화) 산림복지전문업 창업지원을 통한 민간 시장 활성화 유도

○ 민간중심의 전달체계 구축으로 산림복지서비스 전문화, 산업화

* 전문업 위탁사업의 범위 : ('17) 숲해설 → ('18) 산림치유, 유아숲교육 확대

○ 숲해설·산림교육 등 산림복지전문업 창업자를 위한 교육·훈련 확대

* 산림복지진흥원을 통한 원스톱,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 운영

○ 규제개선을 통한 민간의 진입장벽 완화(유아숲체험원 면적기준 등)

□ (대상확대) 산림을 접하기 어려운 소외계층에 체험기회 제공

○ 소외계층 대상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발급 물량과 수혜 범위를 확대

* 이용권 발급(매) : ('16) 9,100 → ('17) 15,000 → ('18) 25,000

* 차상위 계층, 장애인 연금수급자를 포함하기 위한 산림복지법 시행령 개정 추진

○ 다문화가정을 위한 맞춤형 산림복지 시설 및 서비스 확대

* 아세안 산림휴양단지 등 특색시설 확대 및 다국어 숲해설 서비스 제공 등

3 사람중심의 녹색공간 조성

1 산촌 거점권역 육성

<정책방향 및 목표>

◇ 산촌거점권역을 지역발전의 핵심공간으로 육성하여 새로운 산촌의 모습을 제시하고 활력 넘치는 공간으로 재생

* 산촌현황 : 109개 시·군 5,116개 (임야율 70%이상, 경지율 19.7% 이하 등)

◇ 산촌거점권역 선정·육성 : ('17) 0개소 → ('18) 5개소

□ (제도화) 산촌거점권역 선정·육성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 마련

○ 산촌거점권역 중심의 산림예산 집중 지원 및 산촌특구제도 신설

* 산촌거점권역·산촌특구에 대한 정의 및 우선지원을 위한 「임업진흥법」 개정 추진

○ 지역특화자원을 발굴·목록화하고 거점권역 시범사업 대상지(5개소) 선정

* 인제 자작나무숲, 양평 치유의숲 등 국유림·국유시설과 연계한 시범사업 추진

○ 현장 사업의 실행 및 지원 전문인력 양성시스템 구축·활용

* 인근 대학과 연계한 '산촌 큐레이터' 제도 도입 및 주민 교육프로그램 강화

□ (협력체계) 산촌거점권역 중심의 국가-지자체 상생 협력체 구축

○ 산촌 현장 이행을 위한 협의체 구성을 통해 협력거버넌스 구축

* (중앙단위) 산촌 활성화 지원센터 신설, (현장단위) 산촌 리더 그룹 배치

○ 각계 전문가로 '산촌혁신포럼'을 구성하여 산촌에 대한 국민 인식 개선

* 언론·문화·학계 등 다양한 주체가 미래에서 원하는 매력적인 산촌을 제시

□ (귀산촌) 맞춤형 정보제공과 컨설팅으로 정착 실패 최소화

○ 귀산촌 원스톱 지원 시스템 구축 및 정책자금 지원 확대

* 귀산촌 중개 센터 → 산촌 미리 살아보기 캠프 운영 → 정착자금 지원

○ 귀산촌을 준비하는 누구나 접근할 수 있도록 정보를 상시 제공

* 귀산촌 희망지에 대한 주택, 임지 등 주변여건 통합 정보서비스 제공

2

도시 내 그린인프라 구축

<정책방향 및 목표>

- ◇ 생활권 그린인프라를 확대하여 미세먼지 등 도시 내 환경문제를 저감하고 산림복지공간으로 활용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제고
 - * 1인당 도시숲 면적(m²) : 한국 9.9, 런던 27, 뉴욕 23, 파리 13, 도쿄 11
- ◇ 시민이 주도하는 도시숲 조성 확대 : ('17) 161ha → ('18) 175ha

□ (도시숲) 미세먼지 저감 등 도시숲 수요에 부응하는 도시숲 확대

- 도시재생사업, 산업단지 환경개선 등과 연계하여 도심에 숲을 조성
 - * 도시재생사업 시 도시숲 조성 의무화 및 완충녹지 조성 등을 위한 국토부 협의
- 도시숲을 유아숲체험, 숲해설 등 산림복지 공간으로 활용
 - * 도시 외 산림까지 접근이 어려운 유아 등을 대상으로 도시숲에서 복지서비스 제공
- 가로수를 활용한 지역 랜드마크 창출 및 관광 상품 개발 지원
 - * 주요 도시별로 지역 특색을 반영한 명품 가로수길 조성 및 홍보

□ (정원) 인프라를 확충하고 생활 속 정원문화 확산 및 산업화 촉진

- 코리아 가든쇼, 정원산업디자인전 등 시민의 참여를 통해 정원문화 확산
 - * 가든쇼(광화문광장, 5월)/ 디자인전(순천, 5월)/ 오픈 가든 어워드(7월 시상)
- 생활속 정원문화 확산을 위한 '찾아가는 정원 만들기' 추진
 - * BH 시민사회수석 주관 도시재생을 위한 '공동체 정원' 만들기 붐 업
- 정원인프라 구축을 위한 지방정원 조성(신규 6) 및 민간정원 등록 추진

□ (시민참여) 도시숲 트러스트를 활성화하여 등 민간 참여 확대

- 도시녹화운동 활성화를 위한 거버넌스 강화 및 홍보 추진
 - * 지자체별로 '도시숲 트러스트'를 구성하여 도시녹화운동 참여 활성화
- 기업·단체에 대한 인센티브를 마련하여 자발적 참여 극대화
 - * 참여기업에게 세제혜택, 산림탄소 크레딧 발급 등 인센티브 다양화

3

산지관리의 패러다임 전환

<정책개요 및 목표>

◇ 산림의 합리적 보전과 이용을 위해 산지의 적정 수준을 평가하고 생태적 산지이용 방안을 도입하고 확산

* 산지이용구분 현황 : 보전산지 4,929천ha, 준보전산지 1,456천ha

◇ 보전과 이용의 조화를 이루는 산지보전 메커니즘 마련

□ (산지체계) 이용과 보전이 조화를 이루는 합리적 산지관리 체계 재정비

○ 산지의 이용수요와 생태적 안전성을 고려한 적정 산지총량을 산정

* 계량학적 연구, 시민사회·학계 등 의견수렴을 통한 적정산지 비율 도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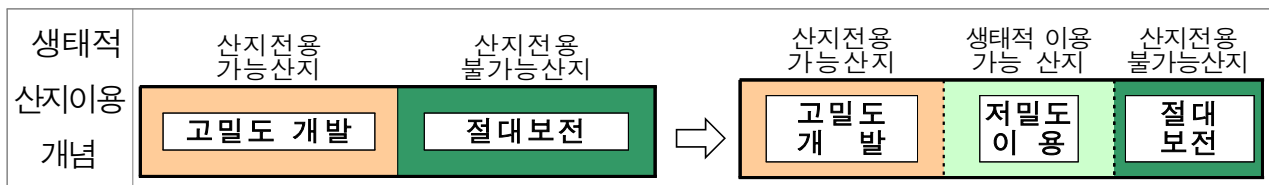
○ 산지이용 실태 및 산지구분 타당성 조사 바탕으로 산지관리 체계 개선

* ('15) 시범사업 → ('16~'17) 산지구분타당성 조사 → ('18) 산지구분도 작성·고시

□ (생태적이용) 보전과 개발의 이분법에서 벗어난 산지이용 패러다임 제시

○ 효율적 이용과 난개발 방지를 위한 '생태적 산지이용' 도입 추진

* 산림재해 안정성 등 지형조건에 따른 산지전용 기준을 마련



○ 지역특성에 맞는 산지유역 유형별 산지관리

* 산지유역 유형 : 도시형, 도시주변형, 주요산줄기형, 산악형

□ (국유림) 국유림을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 모델 개발 및 확산

○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등에 국유림 지원으로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

* 국유림내 양여 임산물을 활용한 마을기업화 등 대상 마을 발굴(10개소)

○ 국유림을 지역과 연계한 생태관광·산림문화·힐링 자원화

* 장성 편백숲, 인제 자작나무숲과 같은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랜드마크 숲 확산

4 산림재해 대응 및 생태계보전 강화

1 선제적·통합적 산림재해 대응체계 구축

<정책방향 및 목표>

◇ 산불·산사태·산림병해충으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고 빅데이터, 드론 등 신기술을 적용하여 대응 전문성을 강화

* 산림재해 현황('17) : 산불 1,479ha, 산사태 94ha, 산림병해충 피해 94천ha

◇ 산불·산사태 인명피해 제로화 및 소나무재선충병 전량방제 달성

□ (산불) 성공적인 산불관리 노하우를 바탕으로 상시화되는 산불에 적극 대응

○ 평창 동계올림픽에 대비한 헬기 전진배치 등 특별 산불대책 추진

* 동계올림픽벨트(평창, 강릉 등 5개 시·군 85천ha) 특별 예방·보호 추진

○ 대형산불 대응 강화를 위한 헬기 확대 및 무인항공기 적극 활용

* '18 상반기 중형헬기(수리온) 1대, 하반기 초대형헬기(S-64) 1대 도입

□ (산사태) 취약지역 집중관리·과학적 예측기술 개발로 피해 최소화

○ 취약지역(24천개소) 점검·정비 강화 및 생활권 중심의 사방시설 확충

○ 빅데이터 분석 등을 활용하여 산사태 예측력 제고 기술 개발

* 산사태 예·경보 고도화를 위한 산악기상관측망 확충 : ('17) 210 → ('18) 260개소

○ 땅밀림 전국조사·복구 및 산사태 위험지도 고도화 추진

* 땅밀림 전국 조사('18~'23), 무인원격감시시스템구축·경계피난대책 마련

□ (병해충) 과학적 대응으로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 및 협업 방제 강화

○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고사목 전량방제(~4월) 및 과학적 예찰 강화

* 피해목 발생추이 : ('15.4) 174 → ('16.4) 137 → ('17.4) 99 → ('18.4) 60만본 예상

○ 유관 부처와의 협업을 통해 주요 산림병해충별 맞춤형 집중 방제 실시

* 농식품부, 농진청 등과 공동 예찰 및 방제로 방제 효과 극대화

<정책방향 및 목표>

◇ 백두대간, 산림보호구역 등 보전가치가 높은 핵심구역을 중심으로 산림생태계를 체계적으로 보전·관리

* 보호구역 현황 : 백두대간 275천ha, 산림유전자원 152천ha 등

◇ 불법 산림훼손지 정리 : ('17까지) 25천건 → ('18) 33천건

□ (산림보호구역) 글로벌 기준에 맞는 보호구역 산림 관리체계 도입

○ 생물자원의 보고인 산림보호구역(44만5천ha)을 지속적으로 확대

* 정맥·도서지역을 중심으로 유전자원보호구역 확대 : ('17) 152천 → ('22) 200천ha

○ 산림생태관리센터 확대 및 전문교육을 통한 보호구역 관리 강화

○ 타부처 소관 보호구역 내 산림의 목적에 따른 생태적 관리방안 마련

* 문화재보호구역(104천ha), 녹지보전지역(124천ha), 개발제한구역(249천ha) 등

□ (산림복원) 백두대간과 DMZ 등 핵심 산림 생태축으로 관리

○ 백두대간, DMZ 등 핵심 산림의 훼손지를 친환경적으로 복원

* 핵심생태축 복원사업(누계) : ('17) 314ha → ('18) 331ha

○ 민북지역의 산림관리를 위한 전담팀 구성 및 산지관리종합계획 수립

* 양구국유림관리소를 민북지역 국유림관리소로 개편 및 인력 재배치('18.1)

□ (산림사범) 산림사범 담당 조직의 역량을 강화하고 계도·단속

○ 전문적·체계적 사범업무 수행을 위한 '산림사범수사대' 기능 강화

* 산림사범 전담인력 : ('17) 2 → ('18) 5명

○ 사범수사 전문성 배양 및 청원산림보호직원에 사범권 부여 추진

* 사범권부여를 위해 법무부, 검찰청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

○ 산림범죄 시기별·유형별 예방·단속 및 기획·합동수사 실시

* (봄) 산나물·산약초 → (여름) 휴양·야영 → (가을) 수실류·산행 → (겨울) 겨우살이·조경수

* 유형별 : 인터넷 동호회 불법활동 및 임산물 불법판매, 불량목재제품 유통 등

<정책방향 및 목표>

- ◇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산림내·외 생물다양성 보전을 강화하고 체계적인 산림생물자원 관리를 통해 산업으로 연계 확대
 - * 육상생물의 92%가 산림에 서식하며, 세계 생명산업 규모는 3,231억달러('14 기준)
- ◇ 산업화 중점 분야 : 식·약용, 기능성 식품, 정원·화훼 분야

□ (생물다양성)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희귀·특산식물 등 보전 강화

- 기후변화에 취약한 고유 고산 침엽수종의 보전·관리 강화
 - * 1,000m 이상 고산지역 중 구상나무 등 침엽수종 분포지역 10만ha 조사('17~'18)
- 산림습원 관리를 위한 정밀조사 및 유전자원보호구역 신규지정
 - * 강원·경북지역 75개소(41ha)의 산림습원을 대상으로 정밀조사 및 모니터링
- 야생화를 특화한 숲정원을 조성하여 지역 관광자원으로 활용

□ (수목원)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산림생물자원의 체계적 수집·증식

- 국민들의 혼선 방지를 위해 '수목원'을 '식물원'으로 일원화 추진
 - *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전면 개정 추진
- 수목원관리원의 안정적 정착 지원 및 국립백두대간수목원 정식개원
- 수목원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차질 없는 세종·새만금수목원 조성 추진
 - * 세종수목원(~'20) 3년차 조성공사 추진 및 새만금수목원(~'26) 기본계획수립

□ (생물산업) 나고야의정서 발효에 대응하여 산림생명자원 이용기반 구축

- 생명자원 소재발굴, 기능성 효과 분석, 신제품 개발 등 R&D 추진
 - * 산림약용자원연구소를 중심으로 성분과 재배적지를 표시한 천연물지도 작성
- 나고야의정서 대응 기관별 역할·절차 마련 및 기업비용 부담완화 지원
 - * 국내 유전자원의 지속적 확보 및 수입대체 자원 발굴, 설명회 등 홍보강화
- 산림생명산업 소재자원화 시범단지 추가조성(시범단지 3→6개소)

5 국제 산림협력 증진

1 국내외를 연결하는 국제산림협력 확대

<정책방향 및 목표>

◇ 국내 선진정책을 국제협력에 반영하여 국내외 공동발전을 모색하고 역량을 강화하여 국제 이슈에 공동 대응

* ODA 현황('17) : 138억, 다자성 8개/ 몽골, 카자흐스탄 등 5개국 양자 6개

◇ 국제사회의 산림분야 이슈를 주도하여 국익 실현에 기여

□ (정책확산) 에코투어리즘 등 국내 성공 정책의 해외 확산 적극 지원

○ 에코투어리즘 국제협력 모델을 제시·성공하여 국제적 관심 환기

* 인도네시아 롬복섬 산림휴양 및 생태관광지 조성사업('15~'18) 추진완료

○ 학계, NGO 등 민간주도의 사업을 발굴·지원하고 해외관광객 유치

* 해외문화홍보원, 한국관광공사 등을 활용한 국내외 산림관광 협력사업 홍보

□ (내실화) 해외 협력사업 대상지를 다변화하고 전문인력을 양성

○ 타부처 협력사업, 유·무상결합사업 등 융합사업을 적극 발굴

* (베트남) 맹그로브숲 조성 사업으로 염해방지 및 쌀 생산 증진

○ ODA, R&D와 연계한 국제산림전문가 양성 및 전문가 협력 강화

* 국제산림협력 특성화 대학원 지정제도 도입방안 마련 및 국제 전문가 교류 지원

□ (협력기반) AFoCO 설립 주도 및 세계산림총회('21)의 성공적 개최 준비

○ 산림분야 아시아 공동의 이익을 대표하는 논의체로서 AFoCO 설립

* AFoCO(Asia Forest Cooperation) : 아시아산림협력기구

* 브루나이 등 비준임박 국가를 접촉하여 5개국 기탁 완료(상반기) 및 총회 개최

○ 산림총회 준비기획단·운영협의회 등 추진체계 구성 및 예산 확보

* 연차별 준비기획단 운영계획 수립 및 관계부처 협의

2

내실있는 해외산림자원개발 추진

<정책방향 및 목표>

◇ 해외 산림자원을 개발하여 목재의 안정적 공급기반을 확대하고 협력국과의 유대강화를 통해 산림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

* 해외조림 및 목재반입 현황 : 455천ha, 생산목재 270만m³ 반입

◇ 불법목재 교역제한제도 운영으로 국내 목재산업 보호

□ (해외자원) 시장 요구에 부응하는 정책지원으로 투자 활성화 유도

○ 민·관협력사업을 내실화하여 해외산림투자 모델 개발·보급

* 동서발전-임업진흥원-인니영림공사 바이오매스 조림지 벌채(300ha), 가공 및 국내 반입

○ 해외 산림 투자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위한 금융 지원 확대

* 보증보험 상품 개발 및 농식품 모태펀드 편입 등 펀드 운용 추진

□ (투자기반) 산림협력센터를 중심으로 민·관 협력 네트워크 강화

○ 해외투자 리스크 경감 및 현지지원 강화를 위한 산림협력센터 확대

* 한-인니, 한-메콩강 센터 운영 및 파라과이 산림협력센터 설립('19) 준비

* 해외산림자원개발, 투자지 법령·정보 수집 등 진출기업 지원

○ 해외산림인턴, 시니어전문가 등 권역별 해외산림 전문인력 양성

○ 양자협력국가별 협력 강화를 통해 기업애로 및 해외진출 지원

* 15개 중점협력국(해외조림, 연구협력 등) 중심의 정례 산림협력위원회 운영

□ (불법목재) 교역제한제도 도입으로 국제 목재무역 질서 확립에 기여

○ 불법 벌채 목재 교역제한제도 운영고시 제정 및 중장기 로드맵 수립

* 수입목재류의 신고 의무화 및 합법성 확인 검사제도 운영

* (시범 운영) '18.10.1~'19.9.30, 7개 → (전면실시) '20년 이후, 15개 품목

○ 수입목재 정보화시스템 구축 및 목재합법성 표준가이드 개발

* 세관장 확인품목 포함 및 전자통관시스템(UNI-PASS) 연계를 위한 관세청 협업

<정책방향 및 목표>

◇ 북한 산림의 복구기반을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남북 관계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신뢰관계 구축에 기여

* 북한 황폐산림 현황 : 전체 899만ha 중 284만ha(32%) 황폐화

◇ 유관기관, 민간단체, 국제기구 등 연계를 통한 남북산림협력 강화

□ (지원인프라) 북한 산림생태계를 복구하기 위한 지원태세 마련

○ 황폐산림 복구의 근간인 대북지원용 종자 채취·저장 확대

* 대북지원 종자저장 : ('17) 30톤 (18천ha 복구) → ('18) 35톤 (21천ha 복구)

○ 북한과 기후조건이 유사한 지역에 대북용 양묘장 조성·운영

* 강원 고성(3년차), 화천 미래숲 양묘센터, 철원 통일양묘장 등 조성·운영

○ 주요지역에 대한 산림병해충, 산불 등 산림재해 공동 대응

* 산림병해충 공동조사 및 방제, DMZ 소화전 등 산불장비·협력체계 구축

○ 북한 산림황폐화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및 산림정보 DB 구축

* 사방, 조림, 혼농임업 적지 분석 및 복구유형, 방법 등 세부 기준 마련

□ (협력체계) 유관기관 협력 체계 및 국제기구·NGO 등 연계 강화

○ 식량, 에너지 등과 연계한 산림복구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 협력 증진

* 에너지와 식량을 연계한 패키지 복구를 위한 산업부, 농식품부 협조체계 구축

○ 남북산림협력 지원기반 마련 및 이행을 위한 민·관 협력 확대

* 북한산림복구 사업단, 민·관 실무협의회, 통일산림비전 자문회의 등 운영

○ 국제기구를 통한 산림협력 지속 추진 및 신규사업 적극 발굴

* FAO, AFoCO 등과 교육 및 협력사업 발굴을 통한 북한산림복구 역량 강화

○ 국제학술대회와 연계한 남북한 산림과학자 간 교류 추진

* 남북 산림 용어사전 공동발간 추진('15년 북한 전문가 초청 학술대회시 합의)

6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산림행정혁신

1 산림일자리 창출 지원체계 강화

□ 일자리 중심 정책으로 정책부서와 일자리 현장과의 거리 축소

- 각 부서에서 발굴된 일자리 사업이 정상 추진되도록 협업 체계 구축
* 정책부서-일자리부서-중간지원조직-현장으로 이어지는 정책 이행 체계

□ 유관기관 협력 강화 및 산림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내외 공감대 형성

- 관계부처 합동 사회서비스 2단계사업에 산림분야 확대 반영 추진
* 숲길체험지도사, 정원전문가, 산림레포츠지도사 등 서비스 분야 일자리
- 산림일자리위원회를 통한 민·관협력 체계 구축 및 정책공감대 형성
* 사회적경제, 산림전문가, 학계, 시민단체, 언론 등으로 구성, 정기적 포럼 개최

2 「지우-역(work)」 불필요한 일 버리기

□ 불필요한 업무나 관행을 발굴·개선하여 행정 효율성 제고

- 중복, 불필요한 업무를 찾아 축소하고 창의적인 개선방안 마련
* 정책기능과 무관한 관행적 업무 통폐합, 업무프로세스 재설계, 간편보고
- 권위주의적 회의 행사 등 의전관행 축소 및 회의 문화 개선
- 회의는 간결하게 하고, 토론은 대등하게 개선하여 회의 효율 향상
* 산림청 의전, 회의 Ground Rule 개정안 수립 및 보급

3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체계 혁신

□ 교육·훈련·실용연구 기능의 통합 및 인력양성 체계 구축

- '산림교육·훈련 TF'를 구성하여 산림분야 통합 인력양성체계(안) 마련
* 공무원, 임업인, 산림기술자 등 수준별 인력양성 체계의 시너지효과 창출
- 사람중심 산림자원 순환경제 구현을 위한 전문인력의 평생교육 강화

4

조직 내외부의 소통 강화

- 부서 간 칸막이를 없애고 소통을 확대하여 유연한 조직문화 정착
 - 협업 업무 처리시 인센티브 부여 등 서로 돕는 사무실 문화 유도
 - 산림청 및 유관기관과의 소통을 정례화 하고 다양한 교류 확산
 - * 유관 기관장회의 정례화 및 기관간 연합 체육대회 및 동호회 활동 추진
- 상향식 산림정책 의사결정 체계 구축을 위한 거버넌스 활성화
 - 지역사회의 의견을 반영한 국·공·사유림의 통합지역산림계획 수립
 - * 국유림 비율이 50% 이상인 8개 시·군(인제, 양구, 강릉, 평창 등) 대상
 - 수목원, 산림치유원 등 대형시설물 조성시 설계부터 지역 참여 확대
 - * 운영주체(수목원관리원, 산림복지진흥원)를 중심으로 지역 네트워크 구축

5

R&D 성과의 실효성 제고

- 연구과제 기획 단계부터 성과 확산 단계까지 전과정 혁신
 - 기초·응용연구의 우수성과를 개발연구로 추진하는 이어달리기 제도 도입 및 과제별 성과 활용 계획 수립 등 기획기능을 강화
 - * 정책부서에서 직접 필요한 과제를 기획하여 정책과의 연계성 강화
 - 연구과제 관리·평가지 정책부서 및 연구성과 활용그룹과의 매칭을 확대하여 성과 활용성을 높이고 추적 평가를 통해 활용도 제고
- 연구 성과를 누구나 활용할 수 있게 공유플랫폼 구축
 - R&D 성과 및 정보에 대한 공개 및 의견수렴을 위한 홈페이지 구축
 - * 본청·국립산림과학원·국립수목원·한국임업진흥원 연구정보 통합관리
 - 연구 수행자료, 연구결과의 홈페이지 탑재 및 대국민 공개
 - * (전문가) 연구 원시자료, 결과 등 / (대국민) 연구결과를 알기쉽게 가공한 자료

① 산불 방지 대책

□ 개요 및 현황

- '18년 초 부터 건조한 날씨로 산불피해 증가 및 봄철 산불위험도 상승
 - 금년도(1.8기준) 산불건수 10건, 피해면적 50.6ha(평균 5건, 5.2ha)
- 올림픽이라는 국가적 행사에 대비하여 산불예방·대응 강화 필요
 - 산림관리를 통한 산불 예방부터 진화, 복구까지 종합적 대책 추진

□ 쟁점

- 제한된 인력·예산으로도 성공적으로 산불을 관리해왔으나, 산불이 대형화, 상시화 되고 있어 헬기 등 진화자원의 보강 필요
 - 동시다발, 대형·재난성 산불 대응에 필요한 공중진화 역량 부족
 - * 대형산불진화 가능헬기(62대) : 산림청 33, 임차헬기 15, 군 8, 소방 6
- 진화인력의 전문성 부족 및 처우가 열악하고, 가해자 처벌이 미흡
 - 공무원·군인 등 비전문 인력이 투입되어 효율성 저하 및 사고 위험 상존
 - 산불 가해자 검거율이 낮아('17년 42%) 가해자 검거·처벌 강화 필요

□ 대응 및 향후 조치계획

- **(총력대응)** 올림픽 기간 중 종합대응을 통해 산불을 철저히 방지
 - 동계올림픽 대비 대응강화(권역헬기 12대, 감시·진화인력 502명 등)
 - * 동계올림픽벨트(평창, 강릉 등 5개 시·군) 85천ha 보호강화(헬기 1대 평창 배치)
 - 산림재해 종합상황실을 통한 신속하고 빈틈없는 상황관리 실시
 - * 산불상황실 비상근무 : (현재) 09:00~21:00, 1교대 → (개선) 24시간, 3교대

- **(헬기확충)** 재난성·대형산불에 대비한 헬기 확충 및 안전성 제고
 - 강풍에서도 산불진화가 가능한 대형급 진화헬기 단계적으로 확충
 - * 산불진화헬기 확보 : (현재) 45 → ('18) 47 → ('25) 60대(대형급 47대)
 - 지자체 임차헬기 조달계약 조기추진 및 계약요건 강화 등 안전 강화
- **(인력보강)** 산불대응 인력의 전문성 강화 및 교육·훈련 인프라 구축
 - 광역단위 산불대응 전담팀 운영을 확대하여 산불피해 최소화
 - * 대응여건에 따라 지방청, 관리소에 특수진화대(330명)·공중진화대(73명) 분산 배치·운영
 - 특수진화대의 전문성 교육 강화를 위한 지방청별 산불훈련장 개설
- **(산불예방)** 산불예보·감시 시스템 고도화 및 산불 대응 산림관리
 - 기상·지형 등 실시간 빅데이터 분석으로 산불위험예보시스템 정확도 향상
 - * 예보 알림기능 강화 및 정확도 향상(현재 80%대 → 목표 90%)
 - 밀착형 CCTV 확충 및 드론을 활용한 스마트 산불감시망 구축
 - 가해자 검거율 및 대국민 경각심 제고를 위한 신고포상금제도 활성화
- **(협업강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을 위한 기관 간 협업강화
 - 대형산불 취약지역 대응을 위해 동해안산불방지센터(강원·경북) 설치
 - 소각산불 차단을 위한 인화물질 사전제거 및 소각행위 단속 공조(농업·환경)
 - 행정안전부-산림청-소방청 간 산불재난 정책협의체 운영(연 2회)



산불특수진화대

무인기 활용 프로세스

2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 개요 및 현황

- 범정부적 방제 노력으로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이 감소 추세로 전환
 - '17.4 기준 109개 시·군·구에서 약 99만본의 피해고사목 발생
 - * 피해목 발생추이 : ('14.4) 218 → ('15.4) 174 → ('16.4) 137 → ('17.4) 99만본

< 시기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방법 >

- 9월~이듬해 4월 : 매개충이 활동을 멈추는 시기로 피해고사목 제거
- 5월~8월 : 매개충이 우화하여 활동하는 시기로 약제살포 등 매개충 방제

□ 쟁점

- 현재까지 근본적인 치료법이 없어 철저한 예찰과 방제만이 대응책
 - 일부 지자체의 방제소홀, 감염목 무단이동 등에 의한 발생지역 확산
 - * 발생 시·군·구(개) : ('15.4) 79 → ('16.4) 98 → ('17.4) 109 → (현재) 115
- 이상기온 등 기후적 요인으로 방심하면 다시 급증할 가능성 상존
 - 정부와 지자체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 장기적인 R&D 필요

□ 대응 및 향후 조치계획

- (방제목표) '18년 4월까지 예상 피해고사목 60만본 전량 방제
 - * 피해본수 감축 목표(만본) : ('17) 99 → ('19) 30 → ('21) 7
- (방제강화) 현장 중심의 관리 강화 및 선제적 대응시스템 구축·운영
 - 현장관리·감독 인력을 보강, 이중 감시체계 구축하여 재발생 최소화
 - 드론 등 활용한 상시 예찰시스템 구축 및 피해가 심한 지자체 지원 강화
- (장기계획) 시·군별 체계적 관리로 소나무재선충병 청정지역 회복
 - 지자체의 지속적인 관심유도 및 친환경 방제기술 연구개발 추진
 - * 청정지역 전환 지방자치단체에 포상수여 등 인센티브 부여

V. 공통과제 추진계획

1 소득주도 성장, 혁신성장 정책

□ (일자리) 산림분야 6만개(~'22까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책 이행

- 산림재해·복지 등 공공부문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41천개)
 - 산림재해 대응, 목재제품 관리 등 국민안전 분야 공공인력 확충
 -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
- 민간중심의 지역 특화자원의 산업화와 산림복지전문업 육성(12천개)
 - 목재, 임산물, 석재 등 산림자원을 활용한 지역특화 클러스터 육성
 - 산림복지전문업 육성, 나무의사 자격제도 도입 등 청년일자리 창출
- 산림분야 사회적경제 주체를 활성화시켜 일자리의 다변화(7천개)
 - 국유림과 지역사회가 상생·협력하는 사회적경제 모델 마련
 - 전문성과 현장 밀착지원이 가능한 산림형 중간지원조직 신설

□ (산촌) 지역의 혁신성장 동력으로 산촌거점권역 30개소 육성(~'22까지)

- 산촌거점권역·산촌특구 등 신규제도 운영을 위한 법령정비
 - 미래지향적인 산촌 모습을 반영하여 산촌의 정의 개정
 - * 개정안마련(1월), 관계부처 협의·입법예고·법제처심사(3~8월), 국회제출(10월)
- 특화산림자원, 지역역량 등을 고려하여 산촌거점권역 5개소 선정
 - * 야생화, 목재 및 특산 임산물 등 특화자원 발굴 및 상품화 지원
- 중앙-지방협의체를 통한 지역주도의 산촌특구 사업내용 구체화
 - 지자체, 소속기관, 지역전문가 협의체에서 지역자원 활용사업 구상

□ (산림복지) 숲을 국민 쉼터로 재창조하여 국민의 복지 증진

- 맞춤형 산림복지서비스 수혜인구를 확대 ('17: 2,060만명→'18: 2,310만명)
 - 산악자전거 등 산림레포츠 수요를 반영한 특화 자연휴양림 확대
 - 대상별 산림교육·치유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맞춤형서비스 제공
- 산림복지서비스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을 확대
 - 소외계층을 위한 산림복지바우처 발급 물량과 수혜 범위를 확대
 - * 이용권 발급(매) : ('16) 9,100 → ('17) 15,000 → ('18) 25,000

□ (도시숲) 국민 가까이에 도시숲을 확대하여 삶의 질 개선

- 도시재생사업 등과 연계하여 크고 작은 도시숲 조성 확대 추진
 - 도심내 자투리 공간, 산업 단지주변에 도시숲을 조성하여 환경개선에 기여
 - 미세먼지 저감 및 지진 등 재난대응형 도시숲 조성방안 연구
- 도시숲 트러스트를 활성화하여 국민이 참여하는 도시숲 문화 육성
 - 시민·기업이 함께하는 도시녹화운동 확대 및 거버넌스 활성화 지원
 - * 전국 35개 도시숲 트러스트의 운영, 관리 및 지원체계 마련

□ (정원) 생활 속 정원문화 확산 및 정원의 웰빙 산업화 촉진

- 코리아 가든쇼, 정원산업디자인전 등 시민의 참여를 통해 정원문화 확산
 - * 가든쇼(광화문광장, 5월)/ 디자인전(순천, 5월)/ 오픈 가든 어워드(7월 시상)
- 쉽게 설치할 수 있는 '이지가든' 보급으로 생활 속 정원문화 확산
 - * 이지가든 시스템 및 모듈(20개), 가이드라인(20개) 등 개발

□ (올림픽 後 복원) 가리왕산 활강경기장 복원을 둘러싼 갈등 예상

○ (배경) 산림보호구역 해제 후 경기장 조성 및 복원계획 수립 중

- 산림복원을 전제로 산지전용 협의('14) 및 경기장 조성
- 경기장의 상업적 활용과 생태적 산림복원 간 이견 발생이 예상

○ (향후계획) 강원도의 복원기본계획 수립 지원 및 심의 추진

- 강원도가 대회지원위원회에 복원재원 확보건 등을 상정토록 협의
- 중장기적으로 가리왕산 산림보호구역을 산림복원 연구의 모델로 활용

□ (풍력발전)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과 산지훼손 방지라는 가치 충돌

○ (배경) 탈원전, 화석연료 감축 기조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수요 증가

- 가격이 저렴하고 민원이 적은 산지에 발전소 조성이 확대됨에 따라 환경단체 등에서 산림생태계가 훼손되는 것에 대한 우려 증가

○ (향후계획) 발전시설 조성시 합리적 기준과 민주적 절차를 도입

- 인허가 및 운영 실태를 분석하여 입지에 따른 합리적 기준 마련
 - * 관련 법, 입지특성, 최근 10년간 현황 등을 바탕으로 개선방안 연구 추진
-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사전 합의를 전제로 하는 계획입지제 도입 추진

□ (수목장림) 건전한 장묘문화 확산을 위한 수목장림 활성화 추진

○ (배경) 장사시설의 특성상 혐오시설로 오인되어 대상지 갈등 심화

○ (향후계획) 지역주민과 충분한 협의가 가능하도록 현실성 있는 추진절차와 사업모델 개발 및 다양한 홍보 콘텐츠 제작·확산

4

국민 안전·안심 정책 및 과제

□ (산불) 동계올림픽 기간 중 철저한 대형산불 예방으로 국민안심 실현

- 동계올림픽 대비 대응강화(권역헬기 12대, 감시·진화인력 502명 등)
 - * 동계올림픽벨트(평창, 강릉 등 5개 시·군) 85천ha 보호강화, 헬기 전진배치
- 산불재난 주관기관으로서 신속하고 빈틈없는 상황관리·대응
 - * 산불상황실 비상근무 : (현재) 09:00~21:00, 1교대 → (개선) 24시간, 3교대
- 강풍에서도 산불진화가 가능한 대형급 진화헬기 단계적으로 확충
 - * 산불진화헬기 확보 : (현재) 45 → ('18) 47 → ('25) 60대(대형급 47대)
- 광역단위 산불대응 전담팀 운영을 확대하여 산불피해 최소화
 - * 대응여건에 따라 지방청, 관리소에 특수진화대(330명, 33팀) 분산 배치·운영

□ (산사태) 지진, 땅밀림 등에 대비한 종합적 산사태 대응체계 구축

- 산사태주관기관으로서 통합적 산사태 국가재난관리체계 구축 준비
 - * 산지뿐 아니라 도로, 주택 등 피해구역 포괄 관리를 위한 법령안 마련
- 산사태 취약지역(24천개) 관리 강화 및 산사태 발생 예측력 제고
- 지진해일 대응을 위한 해안사방 및 땅밀림 조사 등 신규사업 추진
 - * 해안방재림(10ha), 해안침식방지(12km), 산사태예방 사방 추진(사방댐 504개소 등)

□ (재선충병)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고사목 전량방제(~4월) 및 확산 방지

- 드론 ICT 활용한 과학적인 피해고사목 예찰·조사 시스템 구축
- 훈증더미 이력관리 철저, 이동단속 강화를 통해 병해충 확산 방지
- 우화기 이전 고품질의 전량 방제 및 피해고사목 재활용 촉진
 - * 수집 파쇄 비율을 확대(55→58%) 및 수익모델 창출하여 산주소득 보전
- BT기반 친환경 방제약제 등 R&D 성과 개발 및 방제전략 개선

□ (업무혁신) 불필요한 일은 버리고, 민주적 소통을 확산하여 업무효율 증진

- 업무의 선택과 집중으로 불필요한 일을 버리고 핵심성과를 창출
 - 유사한 업무, 관행적 업무 등 통폐합 및 업무 프로세스 재설계
 - * 각종 워크숍, 연찬회, 각종 행사 등을 업무별로 통합하여 실효성 있게 추진
 - 권위주의적 행사 등 과도한 의전관행을 국민 눈높이로 전면 전환
- 대등하게 토론하고 소통하는 문화를 정착시켜 창의력과 유연성 향상
 - 토론시 참석자들이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 발굴
 - * ex) 회의 중 닉네임 사용, 상대방 말 자르거나 비난 금지 등
 - 산림청 내 부서 및 관계기관 간 업무 내외적 교류 활성화 지원

□ (근무감축) 유연근무 활성화 및 초과근무 감축으로 일·가정 양립 실현

- 대국민 행정서비스에 차질이 없는 범위에서 유연근무제도 활성화
 - 개인별 근무시간 자율설정 및 스마트워크센터 등 원격근무 적극 활용
 - * 기관별 유연근무제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유연근무 실시자에 대한 불이익 금지
 - 문화가 있는 날 2시간 조기 퇴근을 위한 집단적 유연근무제 시행
- 불필요한 일 버리기와 초과근무 총량관리를 통한 업무시간 감축
 - 스마트행정을 통한 대기업무 최소화 등 불필요한 일 버리기

□ (연가활성화) 눈치 안 보고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하는 문화 정착

- 업무의 공백이 생기지 않는 범위에서 적극적인 연가 사용계획 수립
 - 각 부서장·소속기관장 등 간부 공무원부터 연가사용 솔선수범
- 2018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라 '여름철 2주 휴가제' 도입 검토



2018년
농림축산식품부 업무보고